

전발연 2006-R-07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구조분석 연구

2006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나 상 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김 진 석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준 수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김 갑 룡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 관 식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

 권 남 진 • 전라북도청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공 영 식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공업연구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조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산업집적의 형태와 집적된 제조 기업들의 생존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에 관한 기초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
- 제조업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거시분석을 통하여 제조업 창업 및 이전 기업의 전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창업 및 이전기업의 결정요인 탐색
- 제조기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제조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현황을 분석하여 제조업의 위상을 파악
- 창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산업집적지 확인 및 평가와 유형화
- 전라북도에 이전 및 창업기업의 구조분석을 하기 위해서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생존율 분석을 실시
- 창업 및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창업 및 이전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
- 창업 및 이전기업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창업 및 이전 제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이전기업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창업 및 이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 연구수행을 위해 제조기업의 창업 및 이전에 관한 이론 및 실증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틀을 정립

- 창업 및 이전기업의 공간적 변이에 대한 거시분석과 산업별 창업 및 이전에 미시분석, 그리고 창업 및 이전에 관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분석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이전 및 창업기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생존율 분석 시행
-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
- 기업생존기간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기업특성변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산업의 경쟁상태, 규모의 경제, 시장진입률 등과 같은 산업환경 변수를 고려. 또한 추정방법론과 관련하여 시간불변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변동 변수를 고려하여 해저드모델(Hazard model)을 이용
- 기업이 창업 및 이전 이후 얼마만큼 생존하는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해저드모델을 이용하여 신생기업의 생존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 수행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인 생존함수와 함께 콕스해저드함수(Cox Hazard Function)를 추정

3. 연구결과 요약

1) 전라북도 산업구조 현황

-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제조기업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전국대비 3.14%정도를 차지하였고 1인당 GRDP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
-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12.0%, 2차산업이 27.2%, 3차 산업이 60.8%로 1차 산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고 2차산업인 제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 및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를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생산비중 추이는 서북권이 가장 높았고 북부권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동부권은 낮은 비중을 차지

-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북부권, 서남권, 서북권, 동부권 순서였고 종사자간 부가가치는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의 순서로 나타나 동부권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
- 권역별 사업체당 생산액의 추이에서도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 순서였으며 북부권과 서북권을 제외하고는 그 생산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전략산업의 수는 총 706개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자동차산업이 25.9%, 생물산업이 54.5%를 차지하였으며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45.7%로 높게 나타남

2) 지역별 산업 집적지 분석

-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 현황은 전국대비로 특화계수와 생산액, 종사자 수를 기준에 의해 분석
- 지역별 산업집적지에서 성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화학제품의 정읍시와 완주군, 수송장비 산업에서 군산시와 김제군, 일반기계 산업에서 정읍시로 조사
-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 및 수준은 전라북도의 유망집적지로는 군산의 제1차 금속분야, 수송장비의 군산시, 수송장비의 완주군이 분류되었으며 쇠퇴지역도 전주의 화학제품, 익산의 금속제품 및 일반기계, 정읍의 수송장비, 전기전자산업으로 나타남
- 2004년 시·군별 제조업체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익산시(25%)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주시(16%), 군산시(14%), 김제시(11%)의 순서였으며 나머지 시·군의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1995년과 2004년의 제조업체 수를 비교하여 사업체 수가 증가된 곳은 김제시가 가장 높았고 완주군, 정읍시, 군산시 등 이었음
-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간구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95년도에 부가가치가 10%이상인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등 3시에 집중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전주시가 제외되고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로 나타남

- 정읍시의 경우에는 1995년에는 0~5%내외였던 것이 2004년에는 5~10%지역으로 공간구조가 변경되었음

3) 창업 및 이전기업의 생존율 분석

- 전라북도의 1991~2005년까지의 신생기업의 생존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기업의 1년후 생존율 99.3%, 5년후 생존율 82.1%, 10년후 생존율 57.5%, 15년후 생존율 40.7%을 보였다. 위험율은 4년째 6.3%, 5년째 6.7%, 9년째 6.4%를 보여 창업후 5년과 9년이 가장 위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연도별로는 1999년, 2000년, 2001년에 설립된 기업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진입유형별로는 계열기업이 독립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생존율이 높았으며 이는 모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적, 경영적 지원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및 수송장비분야로 5년후 생존율 0.77, 10년후 생존율 0.616, 15년후 생존율 0.517이며 평균사업기간은 6.28년으로 나타났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산업분야는 전기, 전자기기분야와 제1차금속, 금속제품으로 분석
- 기업생존의 결정요인을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기준으로 분석결과, 창업규모를 크게 시작할수록 기업의 퇴출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고용기준으로 살펴보면 낮은 고용수준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진입유형별 구분에서는 계열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퇴출위험은 감소하고 생존율이 증가하였지만, 독립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당시 창업규모가 클수록 현재규모는 작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고용기준에서는 창업당시 규모가 작을수록 퇴출위험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II. 정책제언

1. 창업기업

1) POST-BI 시스템 구축

- BI를 졸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여 BI를 졸업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POST-BI 업체 중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는 일정수준의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대두

2) 창업교육센터 패러다임의 전환

- 기존의 창업교육센터의 기능을 연구형 중심에서 생산형 중심으로 점차로 변화를 줌으로써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확장·건립 지원사업의 시스템 구축

3) 신기술창업교육지원 및 신기술 집적단지조성

- 우수한 신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사업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생산기반,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장 마련
- TBI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장비활용, 기술정보제공, 교육 등의 산·학 연계프로그램 지원
- 지역특성에 부합한 교육센터의 특성화 및 입주업체의 전문화 유도방안 강구

4) 창업관련 센터간 협력연계시스템 구축

- 각 시군의 기술혁신 주체들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앞서가는 센터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지역의 대학, TIC, TP, 민간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들의 연계와 시설, 기자재, 인력 등 공동 활용방안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과 기존 지역산업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강구

2. 이전기업

1) 이전 목표기업 설정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프로그램 개발

- 기업유치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지역과 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 구축
- 핵심타겟 기업 및 전라북도 의향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2) 지역, 기술혁신 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

- 기업이전 및 유치를 위해서 소수의 관련자는 물론 범도민적 협의체 등의 기구를 발족하여 전라북도 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곳의 이미지를 형성
-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금융기관, 기업 등의 기업유치 협력 시스템 구축

3) 이전기업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전북에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1:1멘토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이전을 결정한 기업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 도입 및 이
전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3. 제조업체의 관리 방안

1) 산업집적지와 연계한 제조기업 관리의 효율화

- 미래 지향적 핵심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의 판단 및 분류: 제조기업의 기업환경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분류가 필요
- 성장업종, 비교우위업종의 전략적 선택 및 육성: 성장산업이면서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군이 제조기업의 핵

신 및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쇠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 국내의 경쟁력 상실 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제조기업간 유효경쟁을 도모

2) 제조기업의 생존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사후관리

- 제조기업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창업 및 이전기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산 및 폐업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투자를 유치
-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존 투자 기업은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유치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를 유인하거나 관련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
-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3) 창업 및 이전 제조기업 전담관리 시스템 도입

- 창업 및 이전기업 관리를 위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One-stop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One-stop서비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절차와 단계를 짧은 기간 동안 기업가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의 여건상 공장설립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부서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지원심의협의회의 인증절차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노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이전기업이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전담인력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창업 및 이전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4)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 역할 분담 시스템 마련

- 기업의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협조적인 역할의 구축이 필요하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원기업을 선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의 유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함
- 제조기업의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정립이 필수적임
- 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제조기업 생성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창업제조업의 생성이론	7
1. 창업제조업의 개념	7
2. 창업의 결정요인	11
제2절 이전기업의 생성이론	15
1. 투자의 개념	15
2. 투자의 유형과 방식	19
3.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21
4. 이전기업의 입지결정 요인	24
제3장 제조기업의 구조분석	29
제1절 지역경제 현황	29
1. 지역내총생산	29
2.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	33
제2절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 추이	36
1. 제조기업 현황	36
2. 산업의 구분	42
3. 전략산업 현황	57
4. 이전제조기업 현황	59
제3절 제조업의 집적지분석	61
1. 산업집적지의 개념 및 분석	61
2. 분석방법	63
3.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	67
제4절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70
1. 생존요인의 개요	70
2. 생존요인의 분석모델	78

3.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실증분석	85
제4장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105
제1절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기본방향	105
1. 전라북도내 지역균형 발전차원의 지원체계 운영	105
2. 권역의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연계	106
3. 지원인프라와 연계시스템 구축	106
4. 시·도와 창업 및 이전기업의 지원 주체간 역할분담체계 확립 ...	107
제2 절 제조기업 구조의 분야별 역량 강화 방안	108
1. 제조기업의 창업혁신 역량 강화	108
2. 이전 제조기업의 혁신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1
제1절 결 론	121
제2절 정책적 제언	124
1. 산업집적지와 연계한 제조기업 관리의 효율화	125
2. 제조기업의 생존을 분석을 통한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126
3. 창업 및 이전 제조기업 전담관리 시스템 도입	127
4. 제조기업 지원 역할 분담체계 정립	127
□ 참 고 문 헌	131

표 목 차

<표 2-1> 창업지원대상의 법적인 기준	8
<표 2-2> 창업유형의 4가지 기준	9
<표 2-3> 창업기업 형태의 미시분석을 위한 도구	15
<표 2-4> 국내·외 투자촉진법상의 투자 범위	17
<표 2-5> 투자의 특징비교	19
<표 2-6>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동기구분	21
<표 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 현황	30
<표 3-2>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	30
<표 3-3> 전국대비 지역별 1인당 GRDP 수준 ¹⁾ 추이(당해년도 가격) ...	31
<표 3-4> 1인당 GRDP 증가율 추이(당해년 가격)	32
<표 3-5> 지역별산업구조 현황(2004)	34
<표 3-6> 산업별 지역비중 현황(2004)	34
<표 3-7> 지역별 제조업 생산동향(산업생산지수, 2000년=100)	35
<표 3-8> 종사자 수 추이(전산업)	36
<표 3-9> 종사자 수 추이(제조업)	37
<표 3-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	38
<표 3-11> 전라북도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39
<표 3-12> 제조업의 10개 분류 내역	43
<표 3-13>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내역	44
<표 3-14> 성장유망산업의 세부범위	44
<표 3-15>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경상가격 기준) ..	44
<표 3-16> 전라북도 지역의 권역별 구분	45
<표 3-17> 기업규모별 사업체수의 권역간 비교(2004년)	49
<표 3-18> 북부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52
<표 3-19> 서북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53
<표 3-20> 서남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54
<표 3-21> 동부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54
<표 3-22> 북부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55
<표 3-23> 서북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55
<표 3-24> 서남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56

<표 3-25> 동부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56
<표 3-26> 지역별 전략산업 사업체수	57
<표 3-27> 전략산업 지역별 종업원 수	58
<표 3-28> 연도별 전략북도 이전 기업의 수(2001~2004)	59
<표 3-29> 권역별 이전기업현황(2001~2004)	60
<표 3-30> 산업집적지 확인 결과(2004)	67
<표 3-31>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성장성과 생산성	68
<표 3-32>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와 수준	69
<표 3-33>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요약통계표	85
<표 3-34> 분석유형 및 분석내용	86
<표 3-35> 전라북도내의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비율	88
<표 3-36> 생존기간별 생존율 및 위험율	89
<표 3-37> 전라북도내의 제조업체 신생기업의 생존율	90
<표 3-38> 전라북도내의 진입유형 및 산업별 기업생존율 분석결과 ...	91
<표 3-39>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를 한국은행의 접속분류표의 대응 ...	93
<표 3-40> 전라북도내의 산업별 기업생존율 분석결과	94
<표 3-41>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매출액 기준	100
<표 3-42>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고용기준	100
<표 3-43>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매출액 기준 ...	101
<표 3-44>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고용기준 ...	101
<표 3-45> 업종별 장수기업	102

그림목차

<그림 2-1> 이전기업의 입지결정요인	24
<그림 3-1> 지역별 산업구조 (당해년 가격)	33
<그림 3-2> 연도별 전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단위 : 명)	37
<그림 3-3> 연도별 제조업의 종사자 추이(단위:명)	38
<그림 3-4> 시·군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교(1995년과 2004년) ...	40
<그림 3-5> 2004년 각 시·군별 제조사업체 비율	40
<그림 3-6> 1995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	41
<그림 3-7> 2004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	42
<그림 3-8> 입지유형별 산업 생산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46
<그림 3-9> 전국대비 권역별 제조업 생산비중 추이(경상생산액 기준) ...	46
<그림 3-10> 제조업 부가가치율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의 권역간 비교(2004년) ...	47
<그림 3-11> 입지유형별 비중의 권역간 비교(2004년, 부가가치 기준) ...	48
<그림 3-12> 권역간 제조업 사업체 규모비교(2004년 기준)	48
<그림 3-13>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북부권)	50
<그림 3-14>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서북권)	50
<그림 3-15>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서남권)	51
<그림 3-16>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동부권)	52
<그림 3-17> 기업분류에 따른 권역별 이전기업 현황	60
<그림 3-18> 기업 생존기간 자료의 특성	83
<그림 3-19>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생존기간별 현황	87
<그림 3-20> 생존기간별 생존율과 위험율	89
<그림 3-21> 설립일 이후 기간별 생존율 비교	90
<그림 3-22> 전라북도의 진입산업별 생존율 그래프	92
<그림 3-23> 해당업종의 생존율비교	94
<그림 3-24> 각 항목별 평균사업기간	95
<그림 3-25> 생존율 상위 3개업종의 위험율 비교	95
<그림 3-26> 생존율 하위 3개업종의 위험율 비교	96
<그림 3-27> Kaplan-Meier 생존함수	97
<그림 3-28>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Kaplan-Meier 생존함수	97
<그림 3-29> 전체기업의 위험함수	98

<그림 3-30>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위험함수 99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세계화와 지방화의 전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의 산업발전은 수도권 등 과밀지역의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대기업 확장수요를 지역으로 유치시키는 전략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로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이 수도권과 지역이라는 국내적 공간범위를 벗어나 해외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배분적 차원에서의 지역산업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사회 경제적 여건과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에 있어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의 개발과 생산활동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를 결행하기 보다는 타 업체 및 조직과의 개발 및 생산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화의 물결과 지식정보사회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세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과거의 요소투자형의 경영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정부는 경쟁체제 안에서 과거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경쟁과 자율’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가고 정부는 그러한 동인(動因)을 제공하는 혁신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제조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 창업 및 이전해온 제조기업들이 산업의 집적 및 지역 간 연계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지역이 새로운 경쟁 단위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의 연관기업의 경쟁, 협력,

유기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지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는 산업 활동이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집적되는 원천으로써 집적 경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또 집적경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크기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집적(産業集積)의 실태와 구조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기업의 집적화의 성공요인은 제조기업의 창업 및 이전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활동을 통한 생존을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적화된 제조기업들의 생존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산업의 집적화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필수적이다. 제조기업의 생존과 도태는 그 기업의 내부요인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결국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최종 성과는 해당기업의 생존 여부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조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산업집적의 형태와 집적된 제조 기업들의 생존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에 관한 기초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창업 및 기업유치의 시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제조업의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거시 분석을 통하여 제조업의 창업 및 이전 기업의 전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창업 및 이전기업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제조기업의 구조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제조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현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제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제조업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셋째, 창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산업 집적지 확인 및 평가와 유형화 통해 제조업체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조기업의 생존은 기업을 둘러싼 미시환경, 거시환경, 기업관련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기업의 생존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창업시기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산업별로 기업이 처한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기업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이전 및 창업기업의 구조분석을 하기 위해서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생존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 및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 창업 및 이전기업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창업 및 이전 제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창업 및 이전기업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창업 및 이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제조기업의 창업 및 이전에 관한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였다. 이상에서 정립된 연구의 틀에 따라 기업의 공간적 변이에 대한 거시분석과 산업별 창업 및 이전에 따른 미시적 분석, 창업 및 이전 제조업의 성공 및 지원 시책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하였다.

거시분석에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의 제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창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산업집적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해 유형화 하였다. 미시분석에서는 창업 및 이전기업이 얼마의 기간 동안 생존하는가, 또한 산업별로 기업이 처한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기업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이전 및 창업기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생존율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기업생존기간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기업특성변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산업의 경쟁상태, 규모의 경제, 시장진입률 등과 같은 산업환경 변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추정방법론과 관련하여 시간불변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변동 변수를 고려하여 해저드모델(Hazard model)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이 창업 및 이전 이후 얼마만큼 생존하는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해저드모델을 이용하여 신생기업의 생존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인 생존함수와 함께 콕스해저드함수(Cox hazard function)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업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시간변동 변수를 갖는 해저드모델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방법론을 통해 첫째로 전라북도 제조기업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둘째로 어떤 요인에 의해 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제조기업 생성의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창업 제조업의 생성이론
- 제 2 절 이전기업의 생성이론

제 2 장 제조기업 생성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창업제조업의 생성이론

1. 창업제조업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창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인가를 구분하는 창업의 정의와 인식이 어렵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창업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 중 분명한 모기업이 없이 새로이 형성된 기업”이라는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정의에서는 신규로 발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업체의 자회사와 독립된 기업은 명확히 구분하여 자회사 또는 분공장(원래공장에서 갈라져 나온 공장)은 창업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독립기업이란 순수하게 법적인 개념이므로 기능상 타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독립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회사를 창설하거나 외부로부터 이전하여 생산활동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이 창설된 업체 중 실제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기업은 정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창업기업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중·소기업법 2년), 일반적으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 및 총 산출액이 8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창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동종사업의 승계기업, 법인전환기업, 폐업 후 기업 활동을 재개시킨 업체 및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법률적 정의는 정책적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유용하나 새로운 고용원의 창출 및 신기술제품의 개발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조직의 변화현상을 밝히는 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연구는 지역적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모든 사업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창업기업체 가운데 소규모적인

독립 창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자료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1995년 이후에 창설된 모든 제조업체를 포함하며, 이 가운데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는 기존의 법적기준을 따르고 있다.

<표 2-1> 창업지원대상의 법적인 기준

상시종업원 기준	자산총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준: 300인 이하 - 특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 등 14개 업종: 1,000인 이하 · 무연탄, 광업 등 31개 업종: 700인 이하 · 수산물통조림 제조업 등 47개 업종: 500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기준: 80억~300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광업 등 3개 업종: 80억원 · 금속광업 등 7개 업종: 120억 ·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160억원 · 캔버스제조 등 7개 업종: 200억원 · 합금철제조 등 19개 업종: 300억원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조, 중소기업청, 2006. 6.

2) 창업의 유형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은 독립적인 창설 신규기업 만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한 법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조직 상호간의 다원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기존업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창업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창업기업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 기준은 신규기업창설의 기본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새로이 창설되는 기업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회사와의 독립과 의존의 관계로 나누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기업의 형성이 독창적인지 아니면 파생적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방식에 따르면 창업유형은 독립적 독창기업, 독립적 파생기업, 의존적 독창기업, 의존적 파생기업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인 독립적 독창기업은 공식 및 비공식 경제부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가의 창의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인 독립적 파생기업은 독립적인 기업이기는 하나 타 회사의 상표, 기술 및 판매권을 이용하는 등 기존업체와 기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상표사용권 계약이나 기업인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포괄되는 연계망 형성이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대기업이 기업 내 관리층으로

하여 퇴직의 조건으로 회사업무의 일부를 계약으로 맡기는 기업창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퇴직자가 창설한 회사는 법적 독립기업으로 타 기업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표 2-2> 창업유형의 4가지 기준

구 분	독립적	의존적
독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기업인 주도에 의한 새로운 기업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회사의 분공장설치
파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사용권 연계망 형성 기업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조직 분할 권리권 매입

세 번째 의존적 독창기업 유형은 대표적인 형태가 분공장(分工場)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분공장인 경우 법적으로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의존적 파생기업유형의 창업이란 대기업의 기업전략의 파생물로 형성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는 대기업을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이다. 특히 관리 및 전문 인력의 퇴직 시 기업활동의 일부를 독립시켜 창업하도록 하는 반면, 대기업은 핵심적인 생산 및 서비스 라인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폐기할 부서를 종업원에게 매각하여 회사를 창설하는 기업의 해체·축소경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기업의 조직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업의 유형을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창업유형으로 생산, 인력관리 등에 있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은 재정 및 경영적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의 자회사 창업을 증가시킴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술 혁신적 소기업의 자회사 전환에 의한 창업유형으로 소기업은 기술개발투자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운영과정상 대기업이 재정을 부담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략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합작회사 설립에 의한 창업으로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대기업과 합자형태를 취하게 되다보니 독립성의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이다.

넷째, 하청업체에 의한 창업유형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는

생산연계망과의 통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전통적인 생산하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구 및 개발지식의 교환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형성되는 하청유형과 주된 사업 활동 외에 부수적인 사업 활동을 제거시키는 기업조직 합리화형이 있다. 많은 현대기업에서 실제적 생산기능은 하청의 형식으로 중·소규모업체에 이관하는 대신 기술 및 상품개발, 판매관리 및 핵심부품 생산 등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업체의 이와 같은 하청 행태 때문에 지역 간 노동 분업 또는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모험자본에 의한 창업으로 모험자본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전국수준의 모험자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어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하는 중·소단위 지방모험자본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대기업이 그들이 속한 지역 내의 중·소창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회목적 측면의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설립하여 주식참여를 하는 경우이다. 특히 대기업은 그들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 협력업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일명 전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상호 협동하여 협력업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여섯째, 연구의 상호조정에 의한 연계창업유형으로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험실 및 연구시설을 중·소업체에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험실 및 연구시설을 중·소업체에 공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체에서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 또는 대학에서 파견하거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원한다.

일곱째, 지역협회활동을 통한 창업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의한 창업유형으로 대기업은 소기업에 기술적 노하우나 정보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방기업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지역내의 기술 및 상품개발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위하여 전환회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으로부터 파생된 창업유형으로 대기업 근무경력 기술자 및 과학자 등이 설립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파생창업을 기술적 협력 및 재정참여의 기회로 생각하여 환영하고 있다.

3) 창업제조업의 형성과정

창업을 정태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인가?’에 관심의 대상이 되나, 창업을 동태적인 과정에서 보면 창업이 어떠한 경로와 활동을 통하여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 동태적 측면에서 창업이란 단순히 회사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 시작하면서 생산체제에 돌입하여 판매 및 경영이 안정화되는 단계까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기간은 개별 창업업체마다 상이하나 본격 생산이전 또는 회사설립 이전까지의 준비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사업체 창설이후 안정화단계에 도달하여, 창업의 성패가 결정될 때 까지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고 2년으로 되어있고,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체 창설이후의 지원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2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5년까지의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성공기업의 경우는 안정화 단계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업이 처한 여건 및 환경적 상이함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업체간 편차가 크게 작용한다. 창업의 형성과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활동의 특성이나 이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동기의 유발단계로서 잠재적인 기업인은 경기쇠퇴, 소득증가 및 기술변화 등 거시적 경제동향변화와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후에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초기가동단계, 종합적 기업 운영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재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2. 창업의 결정요인

1) 창업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창업형태의 미시적 분석이란 개별기업 및 창업기업 및 기업인 측면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업활동의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은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고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잠재적인 기업인이 창업을 결행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 창업형성 과정과 창업기업의 형태, 규모, 생산과 판매형태, 입지선택 및 변동, 창업단계별 애로점과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의 유형에는 독립성과 타 업체와의 재정, 판매, 기술 및 생산측면의 연계 등을 살펴보고, 창업의 과정은 창업기업인의 배출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선진국의 사례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업기업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진국 이론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동기 측면에서 경기쇠퇴가설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 진취적인 창업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부품구입 생산, 제품특성, 판매 및 일반 경영 측면의 행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창업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경영전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생산과정에서의 판매처 및 거래처와의 밀접한 접촉의 필요성 때문에 대도시적 경제기반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입지의 결정은 창업자의 주거주지나 전근무지에 의해 제약을 받는 소극적 입지선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의 창업기업 집중은 기업인의 적극적인 입지선택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대도시의 기업가 창출원의 분포와 기업인 창출여건의 우월성에 기인(基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후 입지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공장부지 및 건물규모나 보유형태, 임대료 등 창업기업 입지환경에 관한 질적 수요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끝으로 창업은 상업아이디어의 구성에서부터 안정된 기업경영단계까지의 활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건과 문제점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형태는 집적의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 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차원에서 의의를 도출하는데 치중하도록 하였다.

2) 제조기업의 입지형태와 지역개발

제조업체의 입지선택은 창업시 최초입지의 선택과 기존업체의 생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입지변동 두 가지인데, 이들 양자의 입지행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창업기업은 주로 소규모업체로서 대부분 대도시지역에 집중하는데 비하여 규모가 큰 성숙업체는 중·소도시, 농촌 등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이 취약하며 불안정한 경영기반을 지니고 있고, 기업의 정보취득, 고객과의 접촉, 다양한 부품의 적시적 확보 및 제반 도시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도시지역외의 입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데 반하여, 기존의 성숙업체는 안정된 경영기반으로 장래의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입지를 위한 공간적 탐색 능력이 보다 크기 때문에 입지 선택의 폭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창업기업의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창업기업과 소기업의 역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업의 국가 및 지역개발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창업을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규업체의 창업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창업기업은 경제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기업에서 수행하는 상품과 공정상의 기술혁신은 산업전반의 쇠퇴를 유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존업체들에게 도전함으로써 기존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첨단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하여 대규모 업체에 비하여 유연적이고 적응력이 높는데 비하여 대기업 연구부서는 새로운 기술적 쇠퇴의 원천이 되지 못함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정보기술 및 생명기술 등 산업에서 증명되고 있다. 비록 기술 집약형 창업이 전체의 극히 일부라도 창업의 기술 및 경제쇄신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창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생애직업의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3) 지역적 수준의 창업의 결정요인

고용기회의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창업율의 지역적 차이는 지역의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창업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창업은 주로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구조가 단조롭거나 집적의 경제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 및 농촌지역은 비교적 낮은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집적경제와 잠재적 창업가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창업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적 차이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장규모의 가설이다. 이 가설은 소규모공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창업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공장은 생산품의 높은 비중을 타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둘째, 소규모 공장의 종업원들은 기업 전반적인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대규모 공장의 종업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독립된 기업가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 소기업들의 종업원들은 취업조건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조건이 양호한 기업들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비하여 위험부담을 안고 창업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자금 및 경영적 능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공장 분포 규모가설은 설명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직업분포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지역별 창업율은 지역주민의 직업 분포 가운데 관리 및 기술직 등 전문가 집단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술 및 관리직은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나 상품기술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와 기업경영을 위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자 및 기술자의 경우는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생산에 대한 기술보다는 판로확보 등 시장정보가 중시되기 때문에 관리직의 창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업분포에 대한 가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하의 창업율 변화를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의 가설 외에 지역별 창업율은 지역의 창업 및 기업입지 정책, 지원시책과 노동조합 활동 및 시장진입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입장애 가설도 지역별 창업율의 격차를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업분포 가설은 산업의 성장이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거나, 시장진입에 많은 장애가 상존하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가의 경우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장규모분포 가설이나 직업분포 가설의 경우에는 상대적 지역여건의 변화가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역 간 창업율의 격차는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비해, 진입장애가설에서 제시하는 상대적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기존 가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3> 창업기업 형태의 미시분석을 위한 도구

지역 구분	주요 분석내용
·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및 창업인의 일반특성 · 조직유형 및 형성과정(창업동기) · 기술개발/제품유형 · 생산/판매연계 · 입지형태 · 창업단계 과제 및 문제점 · 창업지원시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지방	

제 2절 이전기업의 생성이론

1. 투자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직접투자는 자산개념과 기업개념에 기초하여 각각 광의와 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자산개념에 기초한 광의에 따르면 직접투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되어 새로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하고,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에 의하면 ‘국내·외국 또는 국내·외국 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

으로 국내 실물자산의 소유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¹⁾

이는 직접투자의 국제적 기준인 '계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로써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투자기업이란 '기업인 또는 기업이 경영통제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투자행위를 하는 기업체' 중에서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등록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²⁾ 투자촉진법(1998년)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법 제2조 1항), 둘째, 국내·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법 제2조 2항), 셋째, 10/100미만이라도 국내·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시행령 제2조 2항), 넷째,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법 제2조 1항), 다섯째,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국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 3항), 여섯째, 국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국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 3항) 등이다.

1) 국내·외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형태라 할 수 있다.

2) 국제적 기준과 국내 투자촉진법의 규정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외국인 직접투자의 핵심은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 참여이다.

<표 2-4> 국내·외 투자촉진법상의 투자 범위

구분	내용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10/100미만이라도 투자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투자인이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투자인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투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취득(법인인실 또는 기존법인 증자지 신주인수) - 기존주식취득(국내법인의 기발한 주식취득) - 장기차관 방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투자금액 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 원 이상(투자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2,500만원 이상) 이며 투자 금액의 상한은 없음 -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 다만,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 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
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47개 업종 제외)

2) 현행 국내·외 투자 제도

(1) 관련 법령 및 체계

국내·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국내·외 투자촉진법(1998년 11월 발효, 2003년 12월 개정)’이며, 동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내·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국내·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이 있고, 동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외에 국내·외 투자위원회, 국내·외 투자실무위원회, 국내·외 투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보면 국내·외 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

더라도 각 개별법상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 기본원칙은 종래의 신고수리제에서 단순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종전의 신고수리제도는 신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나 법에서 정하는 단순신고제도는 새로운 주식취득, 기존주식 취득, 장기차관의 경우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은 사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2) 투자 대상 업종

국내·외 투자의 대상업종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총 1,058개 업종 중 부분 개방업종 27개, 미개방업종 2개를 제외한 1,029개 업종은 전면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지분을 제한(신문발행업 등)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의무 부과 업종(내항여객운송업 등)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투자 자유화율은 99.8%에 이르고 있다.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국내·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업종 중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동요건에 부합될 경우, 인가를 받아 투자 및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3) 국내·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제한

국내·외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외 투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다.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상의 하한이 없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투자기업이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선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둘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셋째,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하다.

2. 투자의 유형과 방식

1) 투자의 유형

자본은 일반적으로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될 경우 ‘내자’ 혹은 ‘내국인 투자’라 하고 외국에서 조달될 경우 ‘외자’ 혹은 ‘외국인 투자’라 하며 외국인 투자는 보통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을 총칭한다. 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직접투자(DI : Direct Investment)와 간접투자(II : Indirect Investment)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투자는 경영지배나 통제목적 없이 단순히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는 등 보통 화폐자산만 이동하는 투자행위를 말한다.

지역의 자본도입 제도상 투자란 투자자가 주식 또는 지분소유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현금·자본재 또는 산업재산권 등의 자본적 가치물을 납입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상의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부터 시행된 자본도입 관련법령에 의해 자본 투자기업이 모기업 및 그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일정요건의 5년 이상 장기차관도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표 2-5>에서는 국·내외 투자유형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직접투자(DI)와 간접투자(II)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5> 투자의 특징비교

구 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투자목적	이윤추구	자본 이득
투자주체	개인, 기업	기관투자자
경영참여여부	경영 참여	경영참여 없음
투자 기간	원칙적으로 장기	단기
투자 대상	주로 비상장기업 신설, 기존기업합병 등	상장기업

2) 투자의 방식

투자의 투자형태는 신주취득, 기존 주식취득, 장기차관, 그리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은 10%이상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³⁾ 다만, 국내·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자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직접투자는 투자흐름의 방향,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투자흐름의 방향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자국 내로 국내·외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는 국내·외 직접투자와 투자국의 입장에서 자금을 국내·외로 투자하는 국내·외 직접투자로 구분한다.

둘째, 투자동기 및 전략에 따라 시장 접근형과 생산 거점형, 확장형 투자와 방어형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접근형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기업특유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투자대상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하는 유형이고, 생산 거점형은 제 3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거점의 투자유치국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형태이며, 방어형 투자는 투자대상국의 낮은 임금 등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형태이다.

셋째, 투자진출방식에 따라, 현지기업의 자본소유비율을 기준으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투자형태에 따라 신규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투자유형의 시장지향형은 기존의 시장과 판매망유지, 제 3국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현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효율지향형은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료지향형은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원료가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현지수요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지식지향형은 선진 경

3) OECD의 정의에 따르면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 1인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로 간주한다.

영기술과 관리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표 2-6> 참조).

<표 2-6>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동기구분

투자 유형	투자 동기
시장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시장과 판매망 유지 • 제3국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진출 및 현지생산(현지법인 설립, 자동차)
생산 효율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진출 • 노동집약적 산업(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합작, 전자산업)
원료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원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에 투자 • 생산물 : 현지수요 충족 또는 수출(자원개발 투자,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
지식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투자 • 유럽계회사, 미국계회사와 M&A 등(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 현대, 삼성, LG 등 전자 산업)

자료: 건설교통부,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재인용.

3.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1) 투자 기업의 입지

국내·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용, 투자국, 생산공정 단계 및 생산품 등 조직특성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투자전략 및 동기가 생산비 절감형 내지는 생산 거점형 국내·외 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 요인이다. 생산거점형 투자기업은 제 3국 시장진출의 전진기지 구축 및 세계적 시장망(Global Market Network)형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거점으로서 입지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이므로 투자 대상국의 생산여건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저렴하거나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적은 비용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 생산거점형의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생산비용이 저렴한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시장개척형, 및 판매형의 경우는 국내 관련 시장규모와 배후시장이

근접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접근형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ownership advantage)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이므로 투자 대상국의 시장규모나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투자 대상국의 경제상황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소비수준이 높고 경기가 호황일수록 외국 투자기업의 이윤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시장 접근형 투자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투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투자를 설명할 수 있다.

2) 입지 선정단계

투자기업들이 국내입지 선정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주요경로나 방법은 자체조사 분석방법이 전체 응답 업체의 5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11.1%),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및 기관(11.1%), 국내합작회사(9.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⁴⁾

그러나 소재 지역에 따라 지방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투자회사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는데 비해, 수도권 업체들은 투자지원센터 및 관련기관들을 주요 정보 취득처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무상임대 등 지원시책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기업들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전문기관보다 자체조사 분석에 의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족 상황에서 지명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지해 있다가, 단독투자로 전환하여 생산활동으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및 지방으로 공장입지를 탐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4) 산업연구원,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제조업의 현황 분석, 2004.

3) 이전제조업의 입지구조

투자기업의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은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 주변지역 선호가설, 산업집적지(産業集積地) 선호가설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은 투자기업의 공간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투자기업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지역의 중심지 및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제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 지역들은 대개 잘 구비된 인프라 시설, 대규모 시장, 그리고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대도시나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지역 선호가설은 투자지역에 대한 정보 증대 및 위험요인 감소, 지방 입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그리고 전원적인 생산입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입지를 이전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셋째, 집적지 선호가설은 기업 간 산업연계 및 지원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산업집적 및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에 기업들이 입지하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업 자체의 자기강화가설과 기업 네트워크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기강화가설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일정지역에 입지를 확보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입지지역에 대한 정보구득 및 거래업체 관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인접지역에 제 2, 3의 공장을 분포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 네트워크 이론은 특히 제조업부문 가운데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자기 강화현상에 의해 투자기업들이 동일 지역 내에 집적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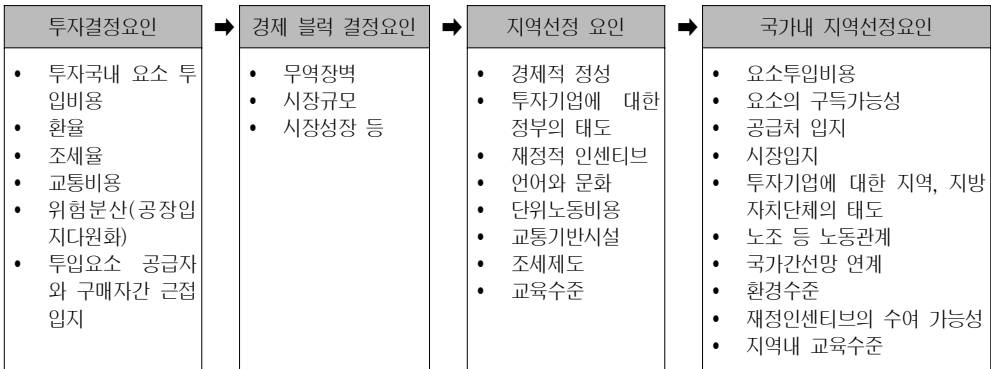
이와 같이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입지분포경향 이외에 특별경제지역, 경제특구 및 국내·외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일정 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집적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4. 이전기업의 입지결정 요인

1) 입지결정특성⁵⁾

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입지결정요인은 공간 단위별 입지결정요인 분석과 국내·외 투자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입지결정 요인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투자기업은 세계지역별 경제블록, 국가, 지역 등 계층적 공간단위에 따라 상이한 입지결정요인이 작용한다. 기업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한 국가의 1인당 GNP, 노동비용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조세 및 관세제도, 기업환경, 관광객 수, 수출비중 등의 시장상황들을 고려하고, 국가차원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의 개방성 등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각각 상이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이전기업의 입지결정요인

2) 고용특성

제조업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는 기업규모, 생산 공정 단계 및 생산품 성격, 성숙도 등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제조업체의 경우도 조직특성에 따라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이는 고용특성에 따라 생산직 고용수요가 높은 업체들은 생산인력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5) 산업연구원, 2003년도 제조업 외국인 투자현황, 2003, 재인용.

전문·기술인력 조달이 용이한 관련업체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생산공정단계나 생산품 성격에 따라 부품형 국내·외 투자기업에 비해 최종·소비재형 투자기업들은 대도시 고객업체들의 근접성을 주요 입지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신생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제공 및 행정서비스 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투자유형

국내·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는 기업의 투자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용, 투자국 등 투자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 입지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동기가 생산비 절감 내지 생산거점형 국내·외 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 결정요인 인데 비해, 시장·판로개척형 국내·외 직접투자기업은 국내 관련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첨단기술 지향형의 경우는 대학 및 전문가 확보여부, 관련 첨단기술업체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혁신지향적인 사회제도를 중시하고 있다. 투자동기에 따라 시장·판로개척형 국내·외 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시장규모와 근접성, 교통접근성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생산 거점형 외 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생산인력의 조달용이성,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수출을 위한 항만, 도로 등 교통시설 접근성이 입지결정요인의 순위에서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인수합병형 국내·외 직접투자 기업은 신설투자형 국내·외 직접투자기업과는 달리 기존업체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입지결정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투자대상국내 입지지역의 선정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업체 인수합병 및 합작 투자형 국내·외 직접투자 기업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국내·외 직접투자에 의한 입지결정상의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유사 동종업종의 집적지역내

입지가 투자결정에 인센티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도권 및 지방의 국내·외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단독 신설 투자형 국내·외 직접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태도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자결정단계

투자기업의 생산제품 성격과 생산공정단계별 입지형태 특성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공정단계와 입지형태와의 관계는 기초소재 및 부품·조립형 제조업체는 물품조달 및 공급처와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물류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최종·완성품형 제조업체는 중간부품의 조달여부와 시장배후지역이 입지선정 및 탐색과정에서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제조업의 입지형태와 유사성이 발견되나, 기업과의 교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항만, 공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띤다.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물자조달을 주로 하는 국내·외 기업은 공항 및 항만과의 접근성 등이 입지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5) 이전 방식

투자기업의 투자진입방식 여하는 입지분포 및 입지형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신설 투자형 업체들은 전용산업단지나 지방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 내에 분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입지분포상의 뚜렷한 특성은 없다.

한편, 합작투자에서 단독투자로 전환한 업체나 영업활동에서 생산활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업체의 경우에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도시에 입지하다가 점차 수도권 및 지방의 전용단지로 이전하는 단계별 입지선정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 3 장

제조기업의 구조분석

- 제 1 절 지역경제 현황
- 제 2 절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 추이
- 제 3 절 제조업의 집적지분석
- 제 4 절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제 3 장 제조기업의 구조분석

제 1절 지역경제 현황

1. 지역내총생산

1)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일정한 지역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계상된다.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역별 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규모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004년 기준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2조 18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비 3.14%를 차지한다(<표 3-1>, <표 3-2> 참조). 이는 서울(22.3%), 경기(20.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1>,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에서 2004년까지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은 금액면에서 11조 7,640원에서 22조 180억원으로 2배로 증가되었으나 차지하는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3.54%에서 2004년 3.14%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와는 대별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의 지역총 생산이 전국의 43.2%를 차지하여 수도권지역에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더딘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지역불균형의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 현황

(단위 : 10억 원)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332,274	485,494	536,326	486,246	534,693	577,971	600,932	647,259	668,472	702,086
서울	88,926	127,111	133,743	121,450	127,750	138,492	143,088	154,503	154,943	156,224
부산	23,236	32,501	34,023	29,717	32,100	33,840	36,091	37,885	39,560	39,856
대구	14,538	20,365	21,598	18,535	19,521	20,776	20,809	21,684	22,121	22,343
인천	16,366	25,247	27,298	22,202	24,691	26,231	27,427	29,952	30,778	31,866
광주	7,840	11,387	12,354	10,541	11,576	12,629	13,008	14,172	14,272	14,636
대전	8,366	11,618	12,890	11,815	12,620	13,559	14,053	14,935	16,026	16,281
울산	-	-	-	23,838	26,474	28,355	28,419	31,552	32,642	35,616
경기	53,665	85,756	94,045	83,966	99,613	111,793	117,655	130,221	133,649	146,743
강원	11,068	14,801	16,715	14,718	15,391	16,462	16,391	17,216	18,449	18,635
충북	9,540	15,154	17,828	15,771	18,010	19,521	19,531	21,043	21,818	23,690
충남	14,901	20,942	25,871	23,504	26,835	28,963	29,788	32,430	34,878	38,074
전북	11,764	16,820	19,105	16,442	18,100	18,978	19,298	19,910	20,918	22,018
전남	16,329	23,930	27,858	25,294	26,079	26,908	27,622	28,613	29,401	30,751
경북	21,728	29,586	34,022	30,853	35,125	38,446	40,977	44,074	47,305	51,353
경남	30,771	45,361	53,651	32,869	35,922	37,728	41,084	43,066	45,518	47,724
제주	3,237	4,918	5,325	4,730	4,885	5,289	5,692	6,003	6,194	6,276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표 3-2>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

(단위 :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26.76	26.18	24.94	24.98	23.89	23.96	23.81	23.87	23.18	22.25
부산	6.99	6.69	6.34	6.11	6.00	5.85	6.01	5.85	5.92	5.68
대구	4.38	4.19	4.03	3.81	3.65	3.59	3.46	3.35	3.31	3.18
인천	4.93	5.20	5.09	4.57	4.62	4.54	4.56	4.63	4.60	4.54
광주	2.36	2.35	2.30	2.17	2.16	2.19	2.16	2.19	2.14	2.08
대전	2.52	2.39	2.40	2.43	2.36	2.35	2.34	2.31	2.40	2.32
울산	0.00	0.00	0.00	4.90	4.95	4.91	4.73	4.87	4.88	5.07
경기	16.15	17.66	17.54	17.27	18.63	19.34	19.58	20.12	19.99	20.90
강원	3.33	3.05	3.12	3.03	2.88	2.85	2.73	2.66	2.76	2.65
충북	2.87	3.12	3.32	3.24	3.37	3.38	3.25	3.25	3.26	3.37
충남	4.48	4.31	4.82	4.83	5.02	5.01	4.96	5.01	5.22	5.42
전북	3.54	3.46	3.56	3.38	3.39	3.28	3.21	3.08	3.13	3.14
전남	4.91	4.93	5.19	5.20	4.88	4.66	4.60	4.42	4.40	4.38
경북	6.54	6.09	6.34	6.35	6.57	6.65	6.82	6.81	7.08	7.31
경남	9.26	9.34	10.00	6.76	6.72	6.53	6.84	6.65	6.81	6.80
제주	0.97	1.01	0.99	0.97	0.91	0.92	0.95	0.93	0.93	0.89

주 :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2000년도 불변가격 기준)

<표 3-3> 전국대비 지역별 1인당 GRDP 수준¹⁾ 추이(당해년도 가격)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특별시	102.9 (5)	103.7 (5)	103.1 (6)	101.2 (8)	100.7 (8)	104.1 (8)	112.9 (5)	117.0 (5)
부산광역시	91.3 (7)	88.1 (10)	79.0 (13)	75.8 (15)	78.0 (14)	78.2 (14)	76.0 (14)	81.3 (14)
대구광역시	72.5 (13)	75.6 (14)	70.9 (15)	63.5 (16)	64.2 (16)	65.4 (16)	62.1 (16)	64.1 (16)
인천광역시	115.2 (2)	111.9 (3)	97.3 (8)	82.8 (10)	88.5 (9)	89.6 (9)	86.4 (10)	92.1 (10)
광주광역시	- (-)	89.6 (9)	84.4 (11)	77.1 (14)	77.7 (15)	76.1 (15)	70.6 (15)	75.9 (15)
대전광역시	- (-)	95.3 (6)	77.7 (14)	77.7 (13)	79.5 (13)	80.0 (11)	77.2 (13)	81.9 (13)
울산광역시	- (-)	- (-)	- (-)	229.7 (1)	229.1 (1)	219.3 (1)	206.8 (1)	229.9 (1)
경 기 도	114.0 (3)	114.1 (2)	99.1 (7)	108.3 (6)	105.2 (7)	104.6 (7)	90.1 (8)	96.8 (8)
강 원 도	90.0 (8)	82.4 (12)	83.1 (12)	79.3 (12)	80.1 (12)	78.5 (13)	89.1 (9)	93.7 (9)
충 청 북도	99.4 (6)	72.7 (7)	105.8 (4)	114.6 (4)	111.6 (5)	109.5 (4)	99.6 (7)	105.1 (7)
충 청 남도	86.7 (10)	76.9 (13)	104.4 (5)	117.9 (2)	120.7 (2)	120.3 (2)	134.5 (2)	146.4 (2)
전 라 북도	76.0 (12)	72.8 (15)	85.1 (10)	82.5 (11)	81.5 (11)	79.2 (12)	77.2 (12)	84.5 (12)
전 라 남도	88.4 (9)	89.7 (8)	114.1 (2)	116.6 (3)	114.4 (3)	108.9 (5)	115.8 (4)	130.0 (4)
경 상 북도	103.6 (4)	109.2 (4)	112.0 (3)	113.1 (5)	113.3 (4)	113.9 (3)	118.0 (3)	136.3 (3)
경 상 남도	137.0 (1)	133.4 (1)	141.9 (1)	104.5 (7)	108.1 (6)	106.3 (6)	101.8 (6)	109.3 (6)
세 주 도	79.6 (11)	85.1 (11)	92.2 (9)	85.6 (9)	81.5 (10)	82.7 (10)	81.9 (11)	84.6 (11)

주 : 1) 전국 1인당 GRDP에 대한 지역별 1인당 GRDP 수준(전국 = 100)

2) ()내는 순위

자료 : 통계청, 2004

<표 3-3>은 1985~2004년까지의 전국대비 1인당 GRDP수준의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2004년 전라북도의 전국대비 1인당 GRDP비중은 84.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하위급에 해당된다. 이는 198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있으며 전라북도에 특별한 정책 및 환경적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울산광역시는 2000년 계측된 이후로 229.9%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 지역별 1인당 GRDP 수준

<표 3-4> 1인당 GRDP 증가율 추이(당해년 가격)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전 국	5.4	8.5	5.4	8.1
서울특별시	4.8	12.2	4.4	7.1
부산광역시	8.5	8.7	6.5	7.1
대구광역시	6.6	10.5	3.6	3.2
인천광역시	12.6	9.8	3.4	6.6
광주광역시	6.2	6.2	4.2	7.4
대전광역시	7.9	9.1	5.2	6.1
울산광역시	5.1	3.9	3.6	11.2
경 기 도	2.4	7.8	3.0	5.4
강 원 도	6.4	6.3	9.7	5.2
충 청 북도	2.6	6.5	5.7	5.5
충 청 남도	7.8	8.2	9.9	8.8
전 라 북도	4.2	5.4	5.1	9.5
전 라 남도	3.4	3.2	9.0	12.3
경 상 북도	5.5	9.1	12.1	15.5
경 상 남도	9.1	6.6	6.1	7.4
제 주 도	0.3	10.1	6.2	3.3

주 : 1) 광주(1988-1990), 대전(1990)

2) 울산(199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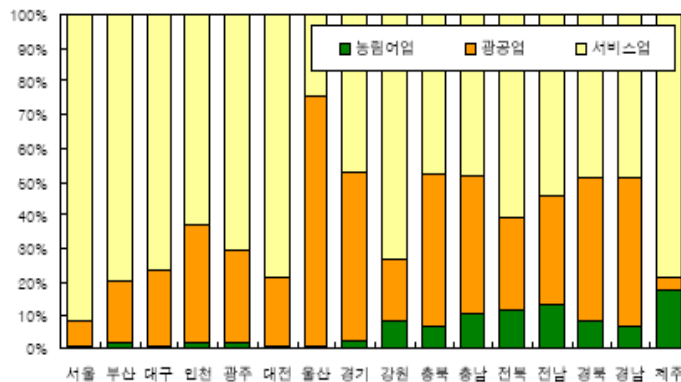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계정(2000년도 불변가격 기준)

<표 3-4>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인당 GRDP증가율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2004년도 1인당 GR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지역(15.5%)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남(12.3%), 울산(11.2%) 등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9.5%로 전국 평균인 8.1%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1인당 GRDP 절대규모면에서나 증가율면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산업경제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

1) 지역별 산업구조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중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1차 산업은 12%, 2차 산업은 27.2%, 제조업은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60.8%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표 3-5> 참조). 반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1차산업이 4.0%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전라북도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전국평균이하의 산업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지역별 산업구조 (당해년 가격)

2004년 기준의 산업별 지역비중의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1차산업이 9.6%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과 더불어 1차산업의 비중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차 산업의 비중은 2.6%로 광역시를 제외한 제주도의 0.1%, 강원

도의 1.4% 다음으로 낮은 수치여서 2차산업인 제조업의 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산업의 지역비중은 3.1%로 나타났으며 3차산업 중 산업비중이 4.0%이상인 산업으로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부서비스업, 민간비영리서비스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3-6>참조)

<표 3-5> 지역별산업구조 현황(2004)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차산업	0.3	1.7	0.7	1.5	1.6	0.5	0.6	2.2	8.7	7.1	10.8	12.0	13.3	8.6	6.7	17.6	4.0
2차산업	8.0	18.4	22.6	35.2	27.6	21.1	74.7	50.5	17.9	45.2	41.3	27.2	32.6	43.0	44.7	3.6	33.1
제조업	8.0	18.4	22.6	34.8	27.5	21.0	74.6	50.4	16.2	44.8	41.1	27.0	32.3	42.7	44.5	3.4	33.0
3차산업	91.7	79.9	76.7	63.3	70.8	78.5	24.7	47.2	73.5	47.7	47.9	60.8	54.1	48.4	48.6	78.7	62.9
전기가스수도업	1.4	3.6	1.8	3.1	1.5	2.0	2.6	2.1	2.8	1.8	7.7	1.6	7.0	6.4	4.7	1.7	3.0
건설업	7.3	9.3	11.0	8.5	9.1	10.6	4.7	9.2	14.9	9.3	9.7	11.5	11.3	10.2	10.1	12.6	9.1
도소매업	16.8	15.6	14.7	7.7	13.8	14.3	4.0	5.1	9.5	5.5	5.0	8.8	6.1	5.3	6.7	11.9	9.6
음식숙박업	2.1	2.9	2.4	2.2	3.6	3.1	1.1	1.9	6.1	2.1	1.9	3.0	3.6	2.4	2.0	8.2	2.4
운수창고업	5.6	9.9	4.2	12.8	4.7	4.4	2.3	2.3	3.7	2.9	2.1	4.0	4.1	2.9	3.3	5.4	4.5
통신업	4.5	3.4	3.9	3.3	3.2	3.1	1.1	1.3	2.3	1.7	1.4	2.3	1.5	1.4	1.5	2.5	2.5
금융보험업2)	7.4	3.6	4.1	2.6	4.5	4.5	1.1	1.8	2.8	2.0	1.6	3.2	2.0	1.5	1.7	3.2	3.4
부동산임대업	27.1	13.6	14.5	11.1	10.6	12.2	3.1	12.3	8.4	9.7	7.2	7.6	5.5	6.4	6.6	9.8	13.4
사회및개인서비스업	9.3	7.3	8.6	4.3	7.6	7.7	1.6	4.8	7.8	4.1	2.9	5.1	3.2	3.2	3.9	10.5	5.8
정부서비스업	6.4	7.3	8.2	5.7	7.9	12.6	2.2	4.5	11.9	6.9	5.8	10.2	8.3	5.9	6.4	10.9	6.4
민간비영리서비스	3.7	3.5	3.5	1.9	4.4	4.1	1.0	2.0	3.2	1.9	2.6	3.5	1.5	2.8	1.8	2.1	2.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역별 산업(업종) 비중, 2) 금융취속서비스 제외

자료 : 지역경제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04.12. 원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

<표 3-6> 산업별 지역비중 현황(2004)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차산업	1.6	2.5	0.6	1.8	0.9	0.3	0.8	11.8	5.5	6.2	13.0	9.6	15.4	14.4	11.5	4.1	100
2차산업	5.3	3.4	2.4	5.2	1.9	1.5	11.0	32.2	1.4	4.7	6.0	2.6	4.5	8.6	9.2	0.1	100
제조업	5.3	3.4	2.4	5.1	1.9	1.5	11.0	32.2	1.2	4.7	6.0	2.6	4.5	8.6	9.2	0.1	100
3차산업	32.0	7.7	4.3	4.9	2.5	3.0	1.9	15.9	2.9	2.6	3.7	3.1	3.9	5.1	5.3	1.2	100
전기가스수도업	10.4	7.2	2.1	4.9	1.1	1.6	4.1	14.6	2.3	2.1	12.2	1.7	10.6	14.0	10.6	0.5	100
건설업	17.5	6.2	4.2	4.5	2.2	2.8	2.5	21.2	4.1	3.6	5.1	4.0	5.7	7.4	7.6	1.3	100
도소매업	38.4	9.9	5.3	3.9	3.2	3.6	2.0	11.3	2.5	2.0	2.5	2.9	2.9	3.7	4.8	1.1	100
음식숙박업	19.6	7.3	3.5	4.5	3.4	3.1	2.2	16.7	6.4	3.1	3.8	4.0	7.0	6.7	5.7	3.2	100
운수창고업	27.6	13.4	3.3	14.0	2.4	2.4	2.5	10.8	2.1	2.2	2.2	2.8	4.2	4.3	5.0	1.1	100
통신업	39.7	8.3	5.4	6.5	2.9	3.0	2.1	10.5	2.3	2.3	2.6	2.9	2.8	3.7	4.2	0.9	100
금융보험업2)	47.2	6.3	3.9	3.3	2.6	2.5	1.3	12.5	2.1	2.0	2.6	2.8	2.8	3.4	3.9	0.9	100
부동산임대업	44.2	6.1	3.8	4.0	1.8	2.2	1.1	19.3	1.6	2.5	2.6	2.6	1.9	3.2	3.4	0.7	100
사회및개인서비스업	35.0	7.6	5.1	3.6	3.0	3.2	1.3	17.6	3.4	2.5	2.4	1.8	2.5	3.7	4.6	1.7	100
정부서비스업	21.9	6.9	4.4	4.3	2.8	4.8	1.7	15.0	4.7	3.7	4.4	5.1	6.0	6.1	6.8	1.6	100
민간비영리서비스	30.4	7.9	4.6	3.4	3.7	3.7	1.8	15.6	3.0	2.4	4.7	4.2	2.6	6.8	4.5	0.7	100

주 : 1)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산업(업종)별 지역비중

2) 금융취속서비스 제외

자료 : 지역경제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04.12. 원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

2) 제조업 생산동향

<표 3-7> 지역별 제조업 생산동향(산업생산지수, 2000년=100)

단위 : %

시, 도	년도	1991-95	1996-2000	2001	2002	2003	1991-2003 ¹⁾
전 국		8.5	9.1	0.2	8.2	5.2	7.8
서울특별시		0.7	1.5	-1.6	2.5	0.9	1.0
부산광역시		-2.8	-1.4	7.6	11.3	0.0	-0.2
대구광역시		-1.0	-1.8	-7.3	2.2	1.3	-1.4
인천광역시		9.5	1.4	-9.4	1.8	2.4	3.6
광주광역시		9.8	4.5	3.2	8.3	-5.1	5.9
대전광역시		1.8	3.2	6.7	6.1	5.5	3.1
울산광역시		-	4.6	0.6	8.4	6.1	4.7
경 기 도		11.8	19.0	1.8	19.2	2.8	13.5
강 원 도		9.3	0.1	0.7	5.2	7.6	4.6
충 청 북 도		17.3	16.9	1.3	11.7	3.4	14.3
충 청 남 도		10.7	13.9	1.0	14.1	17.9	11.9
전 라 북 도		8.2	5.0	-4.3	3.6	11.5	5.9
전 라 남 도		13.2	6.6	3.6	0.8	5.1	8.3
경 상 북 도		9.8	12.1	9.1	12.1	11.1	10.9
경 상 남 도		-	5.7	9.6	1.4	6.8	.7
제 주 도		-1.2	6.5	0.5	3.2	10.5	3.1

주 : 1) 울산, 경남 : 1996-2003

자료 : 지역경제의 현황 및 주요특징, 한국은행, 2004.12. 원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동향은 2000년의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표 3-7>과 같고 1991~2003년 기간 중 전국의 제조업 생산은 평균 7.8%인데 반하여 전북지역은 5.9%로 저조한 생산동향을 나타냈다. 전라북도는 1991~1995년의 전국 평균 생산동향은 8.5%와 비슷한 8.2%를 보였으나 1996~2000년은 5.0%, 2001년도에는 -4.3%를 보였다. 이는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군가운데 마이너스 생산동향을 보인 곳은 4곳이었는데 전라북도가 그 중 하나였다. 2003년도에는 전라북도가 11.5%의 생산동향을 보임으로써 전국평균

5.2%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1991~2003년까지의 평균생산동향은 5.9%로 전국 7.8%에 하회하는 수준이다.

제 2절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 추이

1. 제조기업 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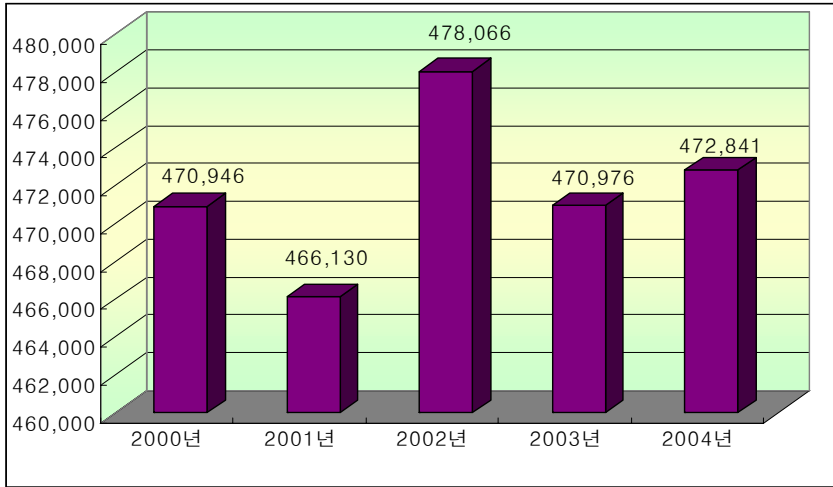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이는 <표 3-8>과 같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8,000명정도 감소되었다가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2>참조). 이는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IT업계가 급속히 팽창하였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되었던 산업구조가 IT와 다른 기술들과의 병합현상(정보·나노기술, 문화·정보기술)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종사자 수 추이(전산업)

단위 : 명

종사자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470,946	466,130	478,066	470,976	472,841
1-4명	188,865	176,203	181,973	181,453	184,340
5-9명	50,617	56,777	57,761	56,719	53,964
10-19명	50,165	51,224	52,065	51,842	50,063
20-49명	61,548	62,122	63,876	62,659	61,335
50-99명	37,083	37,046	36,483	40,088	42,485
100-299명	40,931	38,173	41,364	38,618	38,079
300-499명	13,632	11,512	13,385	9,770	12,609
500-999명	12,692	16,442	14,513	14,822	14,546
1000명 이상	15,413	16,631	16,646	15,005	15,42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3-2> 연도별 전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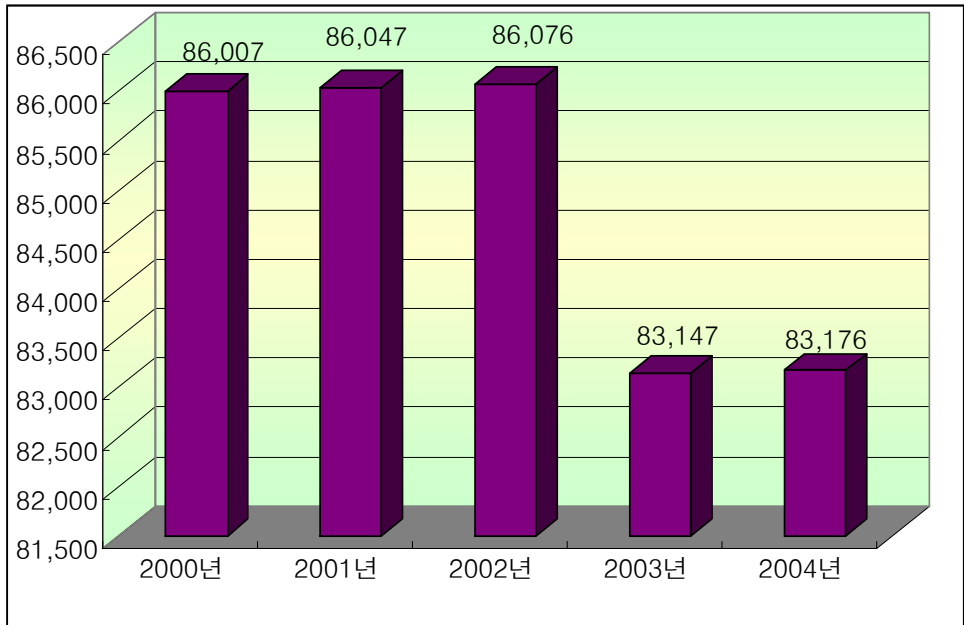
전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2년까지는 일 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9>, <그림 3-3> 참조). 특히 제조업의 경우 5~20명, 100~299명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0~499명의 대기업규모의 제조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9> 종사자 수 추이(제조업)

단위 : 명, (%)

종사자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86,007(100)	86,047(100)	86,076(100)	83,147(100)	83,176(100)
1-4명	15,485(18.0)	14,220(16.5)	14,219(16.5)	12,712(15.3)	13,141(15.8)
5-9명	5,286(6.1)	6,493(7.5)	6,440(7.5)	7,033(8.5)	7,183(8.6)
10-19명	7,604(8.8)	8,174(9.5)	8,466(9.8)	8,486(10.2)	7,904(9.5)
20-49명	15,792(18.4)	14,963(17.4)	15,366(17.9)	14,654(17.6)	13,833(16.6)
50-99명	8,327(9.7)	9,794(11.4)	8,569(10.0)	8,917(10.7)	9,486(11.4)
100-299명	12,997(15.1)	13,442(15.6)	13,102(15.2)	14,816(17.8)	14,167(17.0)
300-499명	5,781(6.7)	4,265(5.0)	4,064(4.7)	3,350(4.0)	3,727(4.5)
500-999명	5,299(6.2)	4,592(5.3)	6,706(7.8)	4,318(5.2)	5,617(6.8)
1000명 이상	9,436(11.0)	10,104(11.7)	9,144(10.6)	8,861(10.7)	8,118(9.8)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3-3> 연도별 제조업의 종사자 추이(단위:명)

<표 3-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산업	전체	98.977	102.561	98.517	100.396
	대	106.824	99.908	88.894	107.521
	중·소	98.214	102.841	99.506	99.742
제조업	전체	100.047	100.034	96.597	100.035
	대	92.421	105.026	83.002	105.645
	중·소	102.435	98.623	100.689	98.643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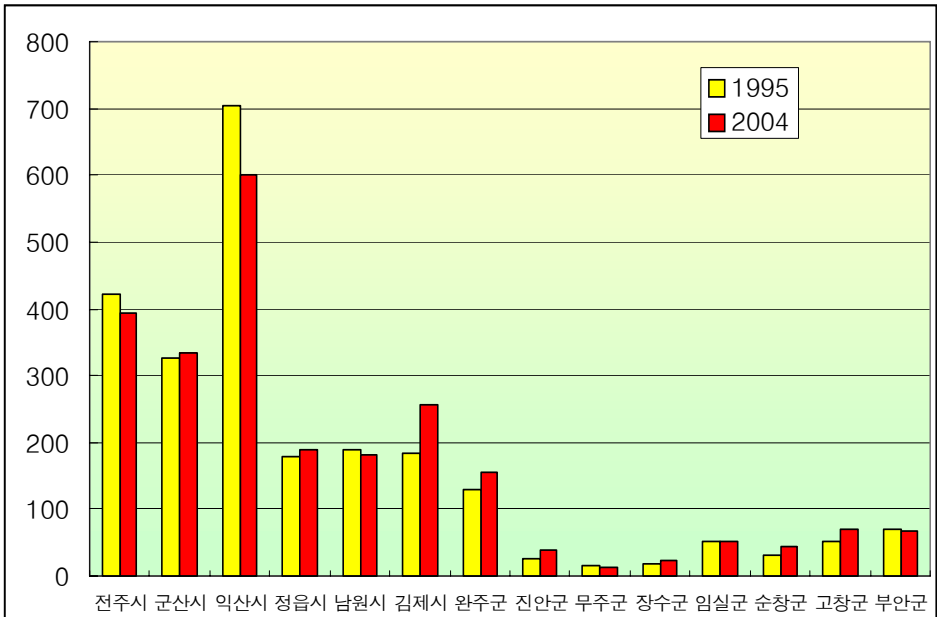
주) 분석 편의상 중·소기업의 통계적 구분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 3-11> 전라북도 시·군별 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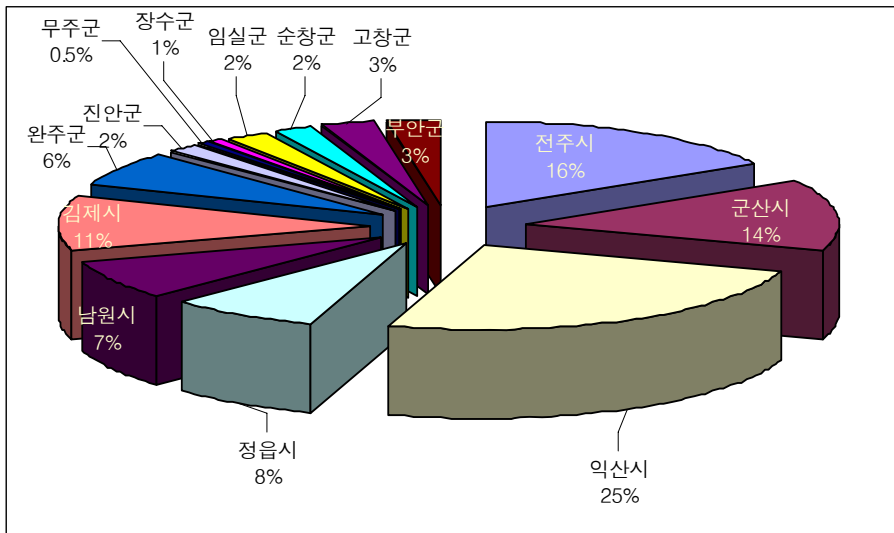
단위 : 명,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시지역	전주시	421(17.5)	421(17.5)	365(16.0)	335(16.8)	368(17.3)	350(16.4)	359(16.0)	361(15.3)	393(16.3)
	군산시	326(13.6)	326(13.6)	321(14.0)	283(14.2)	277(13.0)	296(13.9)	347(15.4)	372(15.8)	335(13.9)
	익산시	705(29.4)	705(29.4)	649(28.4)	546(27.3)	566(26.7)	579(27.2)	581(25.9)	541(22.9)	600(24.8)
	정읍시	179(7.5)	179(7.5)	183(8.0)	158(7.9)	178(8.4)	163(7.7)	178(7.9)	214(9.1)	188(7.8)
	남원시	188(7.8)	188(7.8)	186(8.1)	162(8.1)	162(7.6)	159(7.5)	166(7.4)	160(6.8)	181(7.5)
	김제시	185(7.7)	185(7.7)	178(7.8)	146(7.3)	161(7.6)	172(8.1)	210(9.3)	265(11.2)	256(10.6)
	합계	2,399(100)	2,399(100)	2,287(100)	2,000(100)	2,123(100)	2,128(100)	2,246(100)	2,358(100)	2,416(100)
군지역	완주군	129(5.4)	129(5.4)	160(7.0)	143(7.2)	157(7.4)	163(7.7)	149(6.6)	158(6.7)	155(6.4)
	진안군	27(1.1)	27(1.1)	22(1.0)	21(1.1)	34(1.6)	26(1.2)	34(1.5)	36(1.5)	38(1.6)
	무주군	16(0.7)	16(0.7)	13(0.6)	12(0.6)	11(0.5)	12(0.6)	15(0.7)	18(0.8)	12(0.5)
	장수군	19(0.8)	19(0.8)	22(1.0)	17(0.9)	24(1.1)	29(1.4)	19(0.8)	23(1.0)	24(1.0)
	임실군	52(2.2)	52(2.2)	42(1.8)	41(2.1)	45(2.1)	47(2.2)	53(2.4)	58(2.5)	53(2.2)
	순창군	30(1.3)	30(1.3)	31(1.4)	29(1.5)	30(1.4)	28(1.3)	22(1.0)	30(1.3)	44(1.8)
	고창군	53(2.2)	53(2.2)	59(2.6)	54(2.7)	58(2.7)	52(2.4)	57(2.5)	54(2.3)	70(2.9)
	부안군	69(2.9)	69(2.9)	56(2.4)	53(2.7)	52(2.4)	52(2.4)	56(2.5)	68(2.9)	6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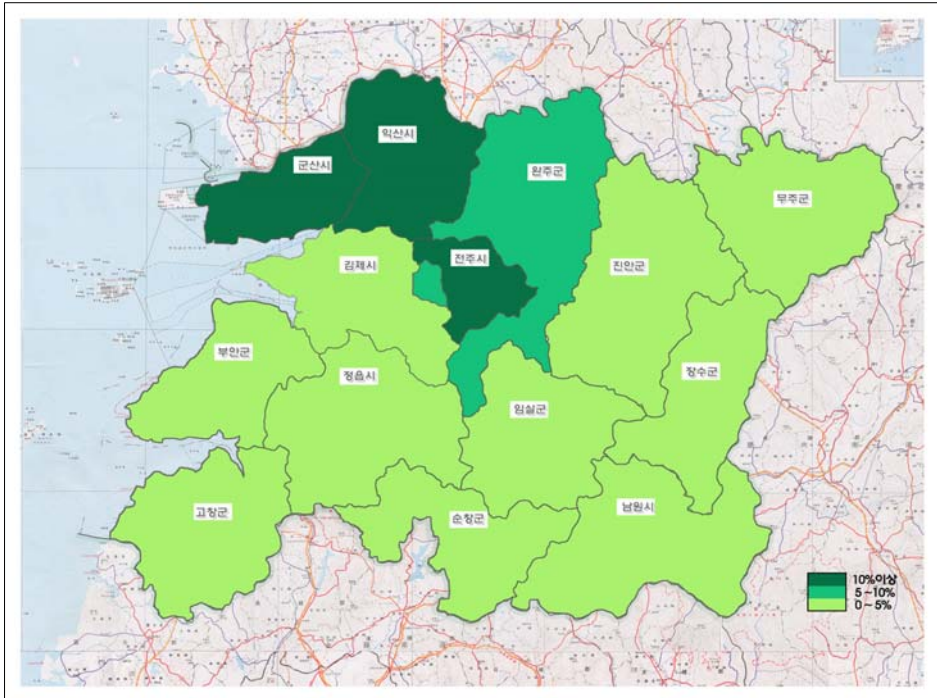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의 전년대비 증감을 추이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다 2004년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종사자의 변화의 폭이 심해져 중·소기업에 비하여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3-10> 참조). <표 3-11>은 10년 동안(1995~2004년)의 시·군별 제조업사업체수 현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편적으로 1995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그림 3-4>참조)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익산시의 제조업체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김제시의 경우 2004년 사업체 수가 1995년의 제조사업체 수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약간의 증감을 기록했을 뿐이다. 2004년에는 각 시·군별 제조업체 수 비율을 살펴보면 익산시가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주시(16%), 군산시(14%), 정읍시(8%), 완주군과 남원시(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작은 비율을 가진 지역은 무주군으로 0.5%를 차지하였다(<그림 3-5>참조).



<그림 3-4> 시·군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교(1995년과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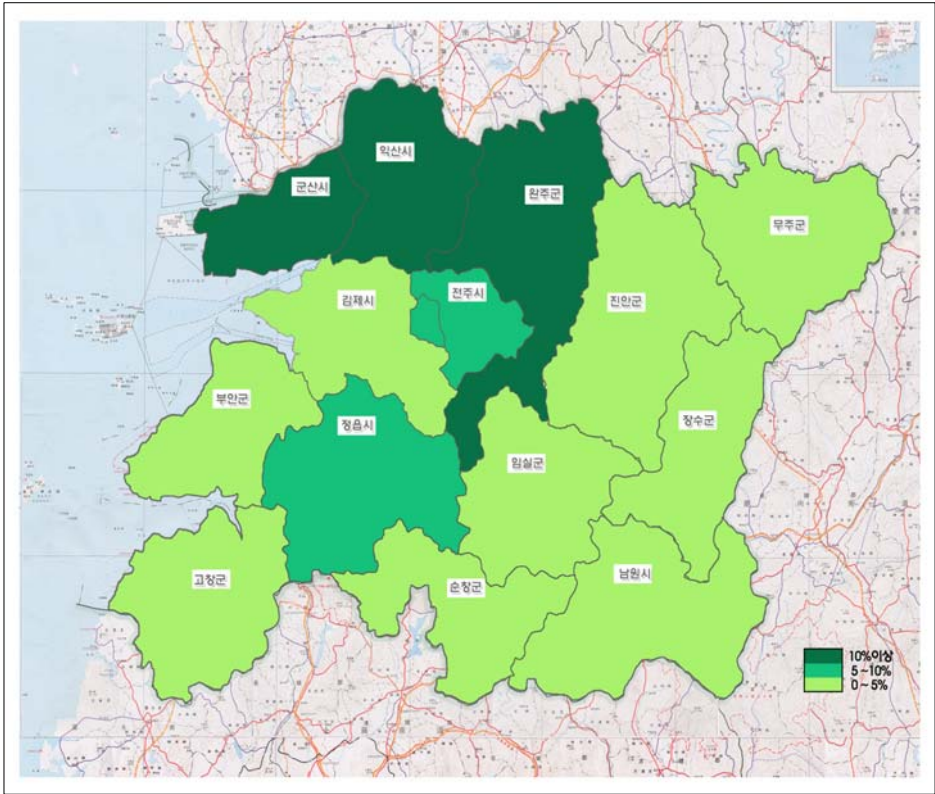
<그림 3-5> 2004년 각 시·군별 제조사업체 비율



<그림 3-6> 1995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

(2)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간구조

2004년 현재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에 제조업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5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였던 구조에서 전주시가 제외되고 완주군이 포함되었다. 전주시는 부가가치 비중 10%이상에서 5~10%로 공간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0~5%에서 5~10%로 공간구조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6>, <그림 3-7> 참조).



<그림 3-7> 2004년 전라북도 제조업체 공간구조

2. 산업의 구분

본 연구를 위한 제조업의 분류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업종구분 방식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23개 중분류 기준이다. 한국산업 표준분류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기간인 1983~2001년간 2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된 관계로 시계열 자료의 획득을 위해서는 산업분류의 접속이 필요하다.

<표 3-12> 제조업의 10개 분류 내역

업 종	구 분류 코드(소분류)	신 분류 코드(중분류)
음식료	311-2 식료품, 313 음식료, 314 담배	15 음식료품
섬유·의복	321 섬유, 322 의복 323 가죽·대용가죽·모피, 324 신발	17 섬유제품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목재·종이·출판	331 나무 및 코르크제품 341 종이 및 종이제품, 342 인쇄·출판	23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석유화학	351 산업용화합물, 352 기타 화학제품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비금속 소재	355 고무제품, 356 플라스틱제품 361 도기·자기·토기, 362 유리 및 유리제품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 강	371 철강산업, 372 비철금속산업	27 제1차 금속산업
기 계	381 조립금속제품 382 기계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전기·전자	383 전기 및 전자 기기 385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제어장비	31 기타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운송장비	384 운송장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기 타	332 가죽 및 장치물 390 기타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가공처리제조업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방식의 시계열적 연계를 위해 <표 3-12>와 같이 10개의 업종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최근의 현황분석에서는 23개 중분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둘째, 산업의 집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라 제조업을 소비 입지형, 원자재 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입지특성과 세부 업종내역은 <표 3-13>과 같다.

마지막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주요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성장유망산업에 대하여 분석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장유망산업은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산업을 의미하는데, 제조업은 크게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표 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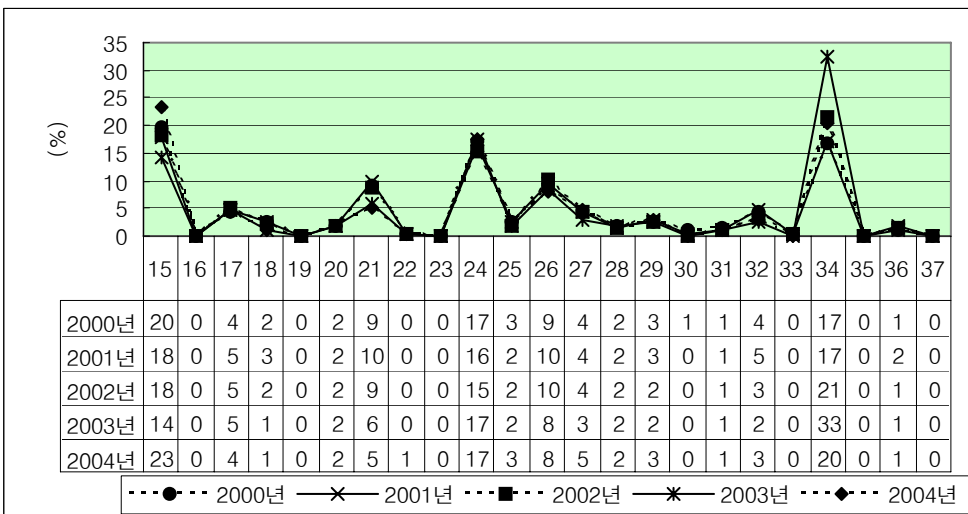
<표 3-13>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내역

유형	입지특성	세부업종
· 소비자 입지형 산업	· 대도시지역에의 입지성이 강함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제품, 19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 원자재 입지형 산업	· 원부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 · 전북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산하는 경향	15 음식료품, 16 담배,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26 비금속광물제품
· 기초 소재형 산업	· 임해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입지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27 제1차금속,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가공조립형 산업	·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Foot-loose industry) · 일정지역에의 집적성향이 강함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표 3-14> 성장유망산업의 세부범위

성장유망산업	주력기간산업	섬유, 의류, 신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지식기간산업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 우주

<표 3-15>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경상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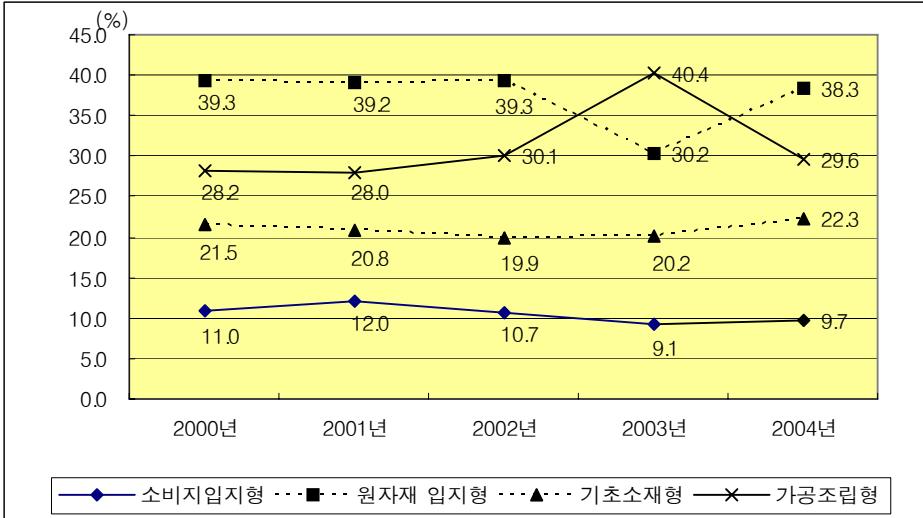


제조업의 중분류별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34번 분류(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 연도별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도 중에서 2003년도 실적이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24번 분류(화학물 및 화학제품)로써 연도별로 골고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15> 참조). <그림 3-8>에는 연도별 입지유형에 따른 산업 생산구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자재입지형(원부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 전북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산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자재입지형에 속하는 산업분류로는 음식료품, 담배,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이다. 그 다음이 가공조립형인데 2003년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가공조립형의 특징으로는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이며 일정지역에 집적성향(集積性向)이 강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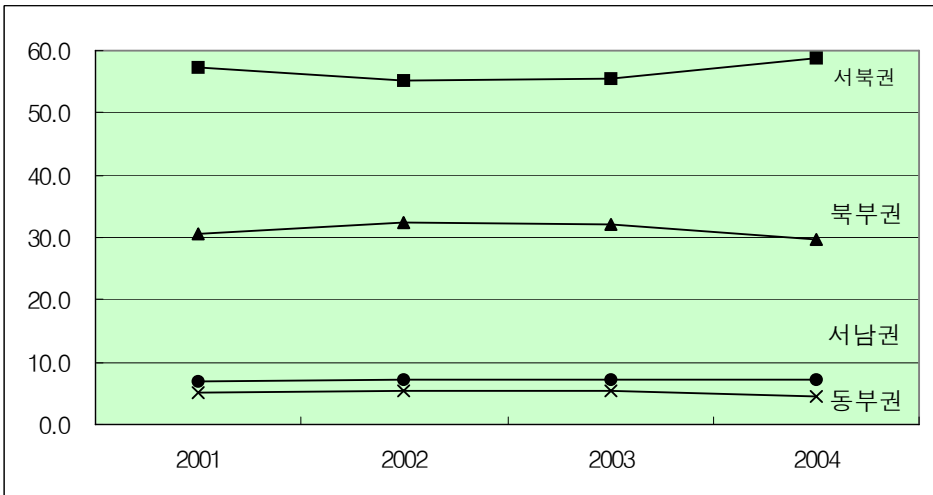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지를 권역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의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북부권은 전주시와 완주군, 서북권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가 포함되고, 서남권은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이, 동부권은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이다. 권역별로 산업구조 및 생산액 등 산업집적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다.

<표 3-16> 전라북도 지역의 권역별 구분

권역구분	해당지역
북부권	전주시, 완주군
서북권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서남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동부권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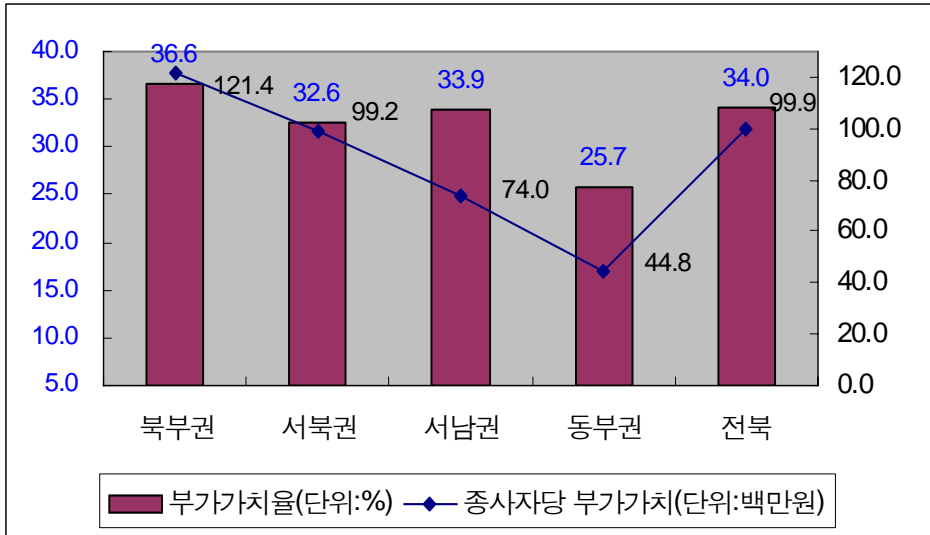
<그림 3-8> 입지유형별 산업 생산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그림 3-9> 전국대비 권역별 제조업 생산비중 추이(경상생산액 기준)

<그림 3-9>는 전국대비 권역별 제조업의 생산비중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서북권의 생산비중이 북부권, 서남권, 동부권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 다. 또한 2004년도 서북권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거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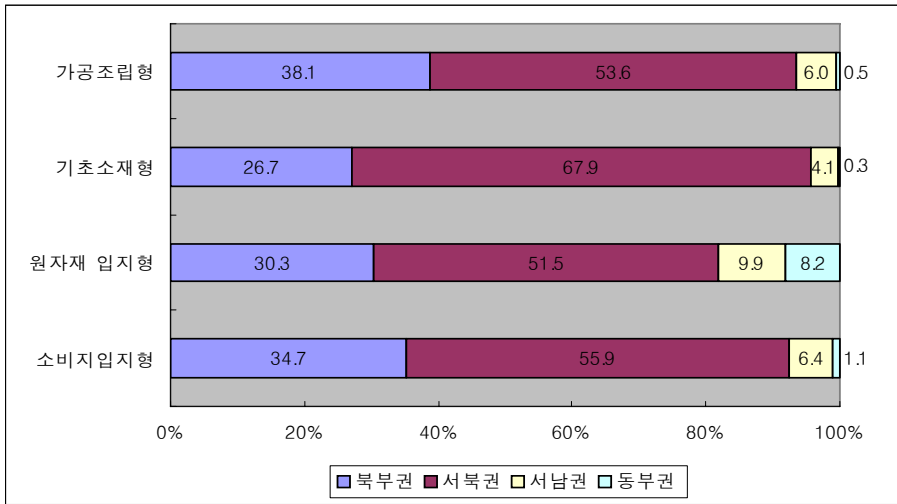
이다. 반면, 동부권과 서남권은 특히 생산비중이 아주 낮은 값으로 조사되어 산업 입지로는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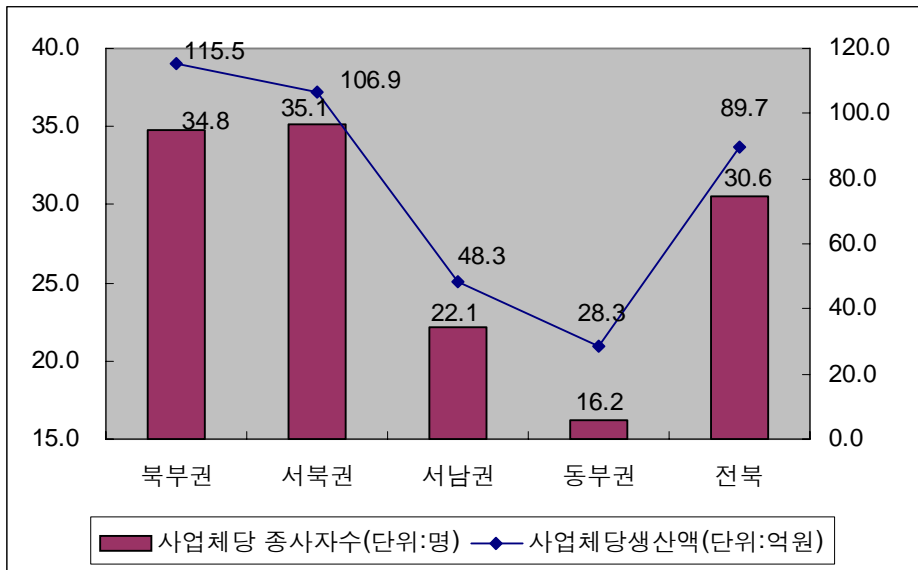
<그림 3-10> 제조업 부가가치율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의 권역간 비교(2004년)

권역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종사자당 부가가치를 비교하여본 결과는 <그림 3-10>과 같고, 부가가치율은 북부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권이 최하위의 결과를 보였다. 제조업의 생산비중과 비교하면 서북권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 측면에서는 북부권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당 부가가치로 보면 북부권, 서남권, 서북권, 동부권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평균에 상회 또는 유사한 권역은 북부권과 서남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동부권은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최하위를 나타냈다.

4가지 유형별로 권역간 비중은 <그림 3-1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공조립형의 경우 서북권이 53.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동부권은 0.5%를 차지하였다. 서북권은 기초소재형, 원자재입지형, 소비자입지형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부권은 서북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가공조립형에서 높은 수치(38.1%)를 보였다.



<그림 3-11> 입지유형별 비중의 권역간 비교(2004년, 부가가치 기준)



<그림 3-12> 권역간 제조업 사업체 규모비교(2004년 기준)

권역별 제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생산액을 비교해본 결과 사업체당 생산액은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3-12>참조). 서북권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35.1명으로 종사자 수는 북부권에 비하여 많은 것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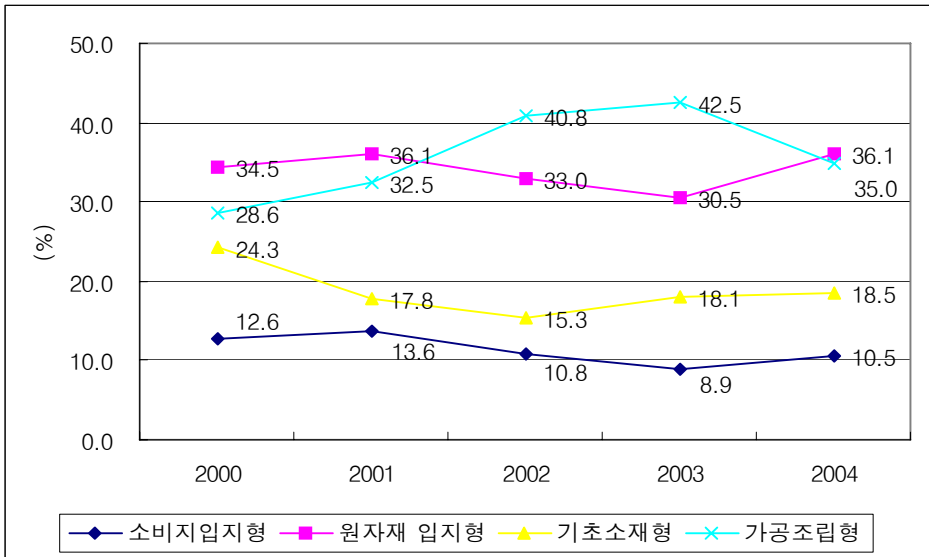
교하여 북부권은 34.8명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의 생산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생산액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북부권과 서북권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전북지역 총 2,368개 기업체 중 5~9인까지의 영세기업은 1,111개로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이하의 소기업까지 합친다면 2,107개로 88.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7> 참조). 따라서 전라북도는 50명 이상의 중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권역별로 다시 살펴보면 영세기업의 경우 북부권-50.1%, 서북권-43.6%, 서남권-47.5%, 동부권-60.8%이며 소기업은 북부권-47.2%, 서북권-43.9%, 서남권-42.3%, 동부권-3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북권의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분포가 각각 11.2%, 1.2%를 차지함으로써 타 권역권에 비하여 좋은 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부권은 대기업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0.8%를 차지함으로써 동부권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표 3-17> 기업규모별 사업체수의 권역간 비교(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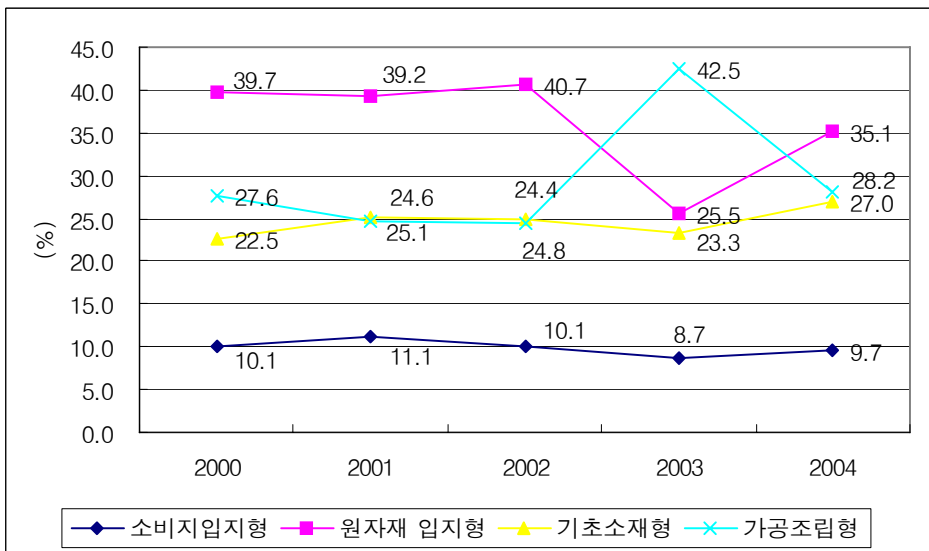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북부권	244(50.1)→ (22.0) ↓	230(47.23)→ (23.1) ↓	63(1.23)→ (26.4) ↓	7(1.44)→ (31.8) ↓	544(100) (23.0)
서북권	510(43.66)→ (45.9) ↓	513(43.92)→ (51.5) ↓	131(11.22)→ (54.8)	14(1.20)→ (63.6) ↓	1,168(100) (49.3)
서남권	149(47.45)→ (13.4)	133(42.36)→ (13.4) ↓	31(9.87)→ (13.0) ↓	1(0.32)→ (4.5) ↓	314(100) (13.3)
동부권	208(60.82)→ (18.7) ↓	120(35.09)→ (12.0) ↓	14(4.09)→ (5.9) ↓	0(0.00)→ (0.0) ↓	342(100) (14.4)
전북	1,111(46.92) (100)	996(42.06) (100)	239(7.69) (100)	22(0.93) (100)	2,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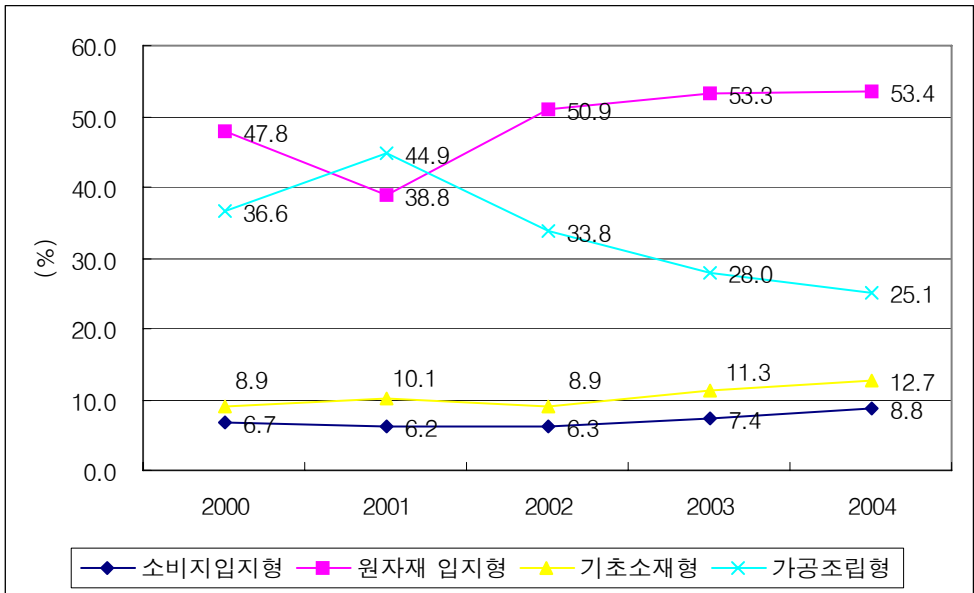
주) → : 권역별 비중, ↓ : 분류된 기업별 비중



<그림 3-13>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북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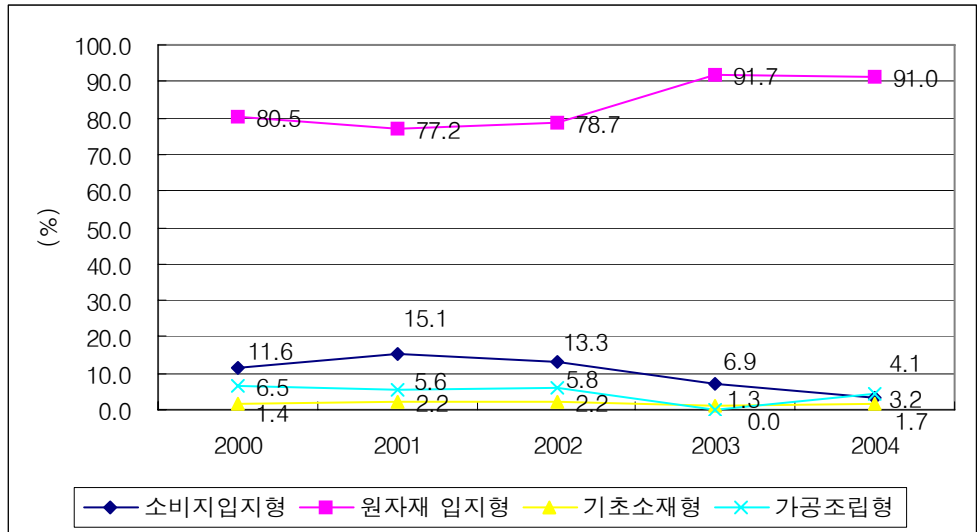
<그림 3-14>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서부권)



<그림 3-15>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서남권)

권역중 연도별 입지유형에 따른 북부권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13>과 같다. 2000년에는 원자재입지형 산업이 34.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다가 2002년과 2003년에는 가공조립형 산업이 각각 40.8%, 42.5%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원자재입지형 산업과 가공조립형산업과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평균적으로 10%정도의 점유율로 가장 낮다. 서북권의 입지유형별 산업구조변화는 <그림 3-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자재입지형은 2000~2003년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다가 2003, 2004년에 주춤하는 형세이다. 이에 반하여 가공조립형산업은 2003년 이후로 조금씩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지입지형 산업만이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원자재입지형, 가공조립형, 기초소재형이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소재형과 가공조립형 산업이 근소한 차이가 난다. <그림 3-15>에는 서남권의 입지유형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재입지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타 유형에 비하여 더욱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가공조립형산업은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지 입지형 산업의 경우 10%이하의 가장 낮은 점유율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부권은

원자재입지형을 2000년 80.5%에서 2004년 91%의 생산구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입지유형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입지유형별 생산구조 변화추이(동부권)

<표 3-18> 북부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지입지형	74(33.5)→ (44.0)↓	121(54.8)→ (44.6)↓	24(10.9)→ (26.4)↓	2(0.9)→ (14.3)↓	221(100.0) (40.6)↓
원자재입지형	70(51.5)→ (41.7)↓	50(36.8)→ (18.5)↓	14(10.3)→ (15.4)↓	2(1.5)→ (25.0)↓	136(100.0) (25.0)↓
기초소재형	9(29.0)→ (5.4)↓	7(22.6)→ (2.6)↓	12(38.7)→ (13.2)↓	3(9.7)→ (21.4)↓	31(100.0) (5.7)↓
가공조립형	15(9.6)→ (5.4)↓	93(59.6)→ (2.6)↓	41(26.3)→ (13.2)↓	7(4.5)→ (21.4)↓	156(100.0) (28.7)↓
합계	168(30.9)→ (100.0)	271(49.8)→ (100.0)	91(16.7)→ (100.0)	14(2.6)→ (100.0)	544(100.0)

주) → : 입지유형별 비중, ↓: 분류 기업별 비중

<표 3-18>은 북부권의 입지유형별 기업규모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입지형은 221개(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영세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전체 88.3%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입지형의 경우 전체기업수의 136개(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영세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소재형의 경우 종업원 50명이상의 중기업의 비율이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조립형산업의 경우에도 소기업과 중기업의 점유율이 85.9%를 점하고 있다. 또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14개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서북권 다음으로 많다.

<표 3-19> 서북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지입지형	123(40.3)→ (24.2)↓	157(51.5)→ (30.8)↓	24(7.9)→ (21.2)↓	1(0.3)→ (3.2)↓	305(100.0) (26.2)↓
원자재입지형	216(50.3)→ (42.4)↓	164(38.2)→ (30.8)↓	28(6.5)→ (21.2)↓	21(4.9)→ (67.7)↓	429(100.0) (36.9)↓
기초소재형	39(37.1)→ (7.7)↓	49(46.7)→ (9.6)↓	14(13.3)→ (12.3)↓	3(2.9)→ (9.7)↓	105(100.0) (9.0)↓
가공조립형	131(40.3)→ (7.7)↓	140(43.1)→ (9.6)↓	48(14.8)→ (12.3)↓	6(1.8)→ (9.7)↓	325(100.0) (27.9)
합계	509(43.7)→ (100.0)	510(43.8)→ (100.0)	114(9.8)→ (100.0)	31(2.7)→ (100.0)	1164(100.0)

주) → : 입지유형별 비중, ↓ : 분류 기업별 비중

서북권의 진입유형별 기업규모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소비입지형은 전체 1,164개 사업체 중 305개(26.2%)로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입지형은 429개(36.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 3-19>참조). 서북권은 타 권역에 비하여 대기업이 31개가 위치한 반면 영세기업과 소기업의 분포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 기술하면, 소비지입지형-85.8%, 원자재입지형-88.5%, 기초소재형-83.8%, 가공조립형-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북권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세기업과 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아울러 중기업 이상의 기업이전 유치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0> 서남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자입지형	30(51.7)→ (20.4)↓	24(41.4)→ (18.2)↓	4(6.9)→ (11.8)↓	0(0.0)→ (0.0)↓	58(100.0) (18.4)↓
원자재입지형	78(48.8)→ (53.1)↓	69(43.1)→ (52.3)↓	13(8.1)→ (38.2)↓	0(0.0)→ (0.0)↓	160(100.0) (51.0)↓
기초소재형	21(58.3)→ (14.3)↓	12(33.3)→ (9.1)↓	3(8.3)→ (8.8)↓	0(0.0)→ (0.0)↓	36(100.0) (11.5)↓
가공조립형	18(30.0)→ (12.2)↓	27(45.0)→ (12.2)↓	14(23.3)→ (8.8)↓	1(1.7)→ (100)↓	60(100.0) (19.1)↓
합계	147(46.8)→ (100.0)	132(42.0)→ (100.0)	34(10.8)→ (100.0)	1(0.3)→ (100.0)	314 (100.0)

주) → : 입지유형별 비중, ↓: 분류 기업별 비중

<표 3-21> 동부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자입지형	25(59.5)→ (12.0)↓	12(28.6)→ (10.0)↓	4(9.5)→ (30.8)↓	1(2.4)→ (100)↓	42(100.0) (12.3)
원자재입지형	158(61.7)→ (76.0)↓	90(35.2)→ (75.0)↓	8(3.1)→ (61.5)↓	0(0.0)→ (0.0)↓	256(100.0) (74.9)
기초소재형	12(85.7)→ (5.8)↓	2(14.3)→ (1.7)↓	0(0.0)→ (0.0)↓	0(0.0)→ (0.0)↓	14(100.0) (4.1)
가공조립형	13(43.3)→ (6.3)↓	16(53.3)→ (13.3)↓	1(3.3)→ (7.7)↓	0(0.0)→ (0.0)↓	30(100.0) (8.8)
합계	208(60.8) (100.0)	120(35.1) (100.0)	13(3.8) (100.0)	1(0.3) (100.0)	342(100.0)

주) → : 입지유형별 비중, ↓: 분류 기업별 비중

서남권과 동부권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현황은 각각 <표 3-20>, <표 3-2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지역은 대기업이 1개씩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에는 영세기업, 소기업 합친 기업의 수는 328개(95.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열악한 동부권의 산업구조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남권은 원자재입지형 산업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권은 원자재입지형은 7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2> 북부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자입지형	0 (0.0)	-28 (933.3)	-2 (-5.9)	-1 (-14.3)	-31 (-96.9)
원자재입지형	29 (-483.3)	-7 (233.3)	4 (11.8)	1 (14.3)	27 (84.4)
기초소재형	-3 (50.0)	0 (0.0)	3 (8.8)	2 (28.6)	2 (6.3)
가공조립형	-32 (533.3)	32 (-1066.7)	29 (85.3)	5 (71.4)	34 (106.3)
합계	-6 (100.0)	-3 (100.0)	34 (100.0)	7 (100.0)	32 (100.0)

<표 3-23> 서북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2001~2004년)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자입지형	9 (14.5)	-52 (115.6)	-8 (57.1)	0 (0.0)	-51 (-1020.0)
원자재입지형	13 (21.0)	16 (-35.6)	-11 (78.6)	13 (650.0)	31 (620.0)
기초소재형	12 (19.4)	1 (-2.2)	0 (0.0)	0 (0.0)	13 (260.0)
가공조립형	28 (45.2)	-10 (22.2)	5 (-35.7)	-11 (-550.0)	12 (240.0)
합계	62 (100.0)	-45 (100.0)	-14 (100.0)	2 (100.0)	5 (100.0)

<표 3-22>과 <표 3-23>은 각각 북부권과 서북권의 기업별 순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북부권은 2001~2004년 동안 32개 기업이 증가한 반면 서북권은 5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북부권에서는 소비자입지형이 31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원자재입지형은 27개, 가공조립형은 34개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북권은 소비자입지형이 51개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자재입지형은 31개 증가추세이다. 서북권의 가공조립형은 대기업이 11개 감소한 반면 원자재입지형은 13개 증가한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3-24> 서남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 (2001~2004년)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지입지형	-2 (-8.3)	-5 (125.0)	2 (33.3)	0 (0.0)	-5 (-15.6)
원자재입지형	10 (41.7)	5 (-125.0)	2 (33.3)	0 (0.0)	17 (100.0)
기초소재형	8 (33.3)	0 (0.0)	1 (16.7)	0 (0.0)	9 (100.0)
가공조립형	8 (33.3)	-4 (100.0)	1 (16.7)	0 (0.0)	5 (100.0)
합계	24 (100.0)	-4 (100.0)	6 (100.0)	0 (0.0)	26 (100.0)

<표 3-25> 동부권의 기업규모별 순증감 (2001~2004년)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소비지입지형	-4 (-10.0)	-11 (1100.0)	-3 (100.0)	1 (100.0)	-17 (-45.9)
원자재입지형	39 (97.5)	16 (-1600.0)	0 (0.0)	0 (0.0)	55 (148.6)
기초소재형	4 (10.0)	-3 (300.0)	-1 (33.3)	0 (0.0)	0 (0.0)
가공조립형	1 (2.5)	-3 (300.0)	1 (-33.3)	0 (0.0)	-1 (-2.7)
합계	40 (100.0)	-1 (100.0)	-3 (100.0)	1 (100.0)	37 (100.0)

서남권의 기업규모 순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6개의 기업증가로 나타났고 소비지입지형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에서는 증가하였고 특히 원자재입지형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표 3-24> 참조). 동부권의 기업규모는 전반적으로 37개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입지형은 17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자재입지형은 55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25> 참조).

3. 전략산업 현황

1) 지역별 사업체 수

<표 3-26> 지역별 전략산업 사업체 수

단위 : 개수, (%)

지역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산업	신재생/FT	합계
익산시	32(34.0)→ (17.5)↓	24(25.5)→ (17.8)↓	38(40.4)→ (9.9)↓	0	94(100) (13.3)
군산시	62(50.8)→ (33.9)↓	23(18.9)→ (17.0)↓	37(30.3)→ (9.6)↓	0	122(100) (17.3)
완주군	36(48.6)→ (19.7)↓	16(21.6)→ (11.9)↓	19(25.7)→ (4.9)↓	3(4.1)→ (100)↓	74(100) (10.5)
김제시	22(24.4)→ (12.0)↓	17(18.9)→ (12.6)↓	51(56.7)→ (13.2)↓	0	90(100) (12.7)
전주시	13(14.4)→ (7.1)↓	32(35.6)→ (23.7)↓	45(50.0)→ (11.7)↓	0	90(100) (12.7)
진안군	0	2(12.5)→ (1.5)	14(87.5)→ (3.6)	0	16(100) (2.3)
무주군	1(6.3)→ (0.5)↓	1(6.3)→ (0.7)↓	14(87.5)→ (3.6)↓	0	16(100) (2.3)
부안군	1(3.2)→ (0.5)↓	1(3.2)→ (0.7)↓	29(93.5)→ (7.5)↓	0	31(100) (4.4)
정읍시	9(16.4)→ (4.9)↓	11(20.0)→ (8.1)↓	35(63.6)→ (9.1)↓	0	55(100) (7.8)
임실군	0	2(9.5) (1.5)↓	19(90.5)→ (4.9)↓	0	21(100) (3.0)
장수군	0	0	8(100)→ (2.1)↓	0	8(100) (1.1)
고창군	0	2(11.1)→ (1.5)↓	16(88.9)→ (4.2)↓	0	18(100) (2.5)
순창군	0	0	36(100)→ (9.4)	0	36(100) (5.1)
남원시	7(20.0)→ (3.8)↓	4(11.4)→ (3.0)↓	24(68.6)→ (6.2)↓	0	35(100) (5.0)
합계	183(25.9) (100)	135(19.1) (100)	385(54.5) (100)	3(0.4) ()	706

주) → : 지역별 비중, ↓: 산업별 비중

전라북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방사선융합기술과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전북 지역 전략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706개로 이중 자동차부품이 183개로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는 19.1%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생물산업은 385개 사업체로 전라북도 전체사업체의 절반이상인 54.5%를 차지하고 신재생 및 방사선융합기술

은 아직 시작단계이다(<표 3-26> 참조). <표 3-27>은 전략산업의 종사자 현황을 보면, 자동차부품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15,333명으로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산업분야는 2,653명으로 7.9%를 차지한다. 생물산업 종사자는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과 생물산업에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전략산업 지역별 종업원 수

단위 : 명, (%)

지역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산업	신재생/RFI	합계
익산시	2,334(34.1)→ (15.2)↓	653(9.5)→ (24.6)↓	3,857(56.4)→ (31.3)↓	0	6,844(100) (20.4)↓
군산시	6,278(77.1)→ (40.9)↓	437(5.4)→ (16.5)↓	1,427(17.5)→ (11.6)↓	0	8,142(100) (24.3)↓
완주군	4,745(54.8)→ (30.9)↓	361(4.2)→ (13.6)↓	305(3.5)→ (2.5)↓	3,245(37.5)→ (100)	8,656(100) (25.8)↓
김제시	707(9.9)→ (4.6)↓	347(18.0)→ (13.1)↓	1,393(72.0)→ (11.3)↓	0	2,447(100) (7.3)↓
전주시	277(9.9)→ (1.8)↓	503(14.2)→ (19.0)↓	2,010(56.9)→ (16.3)↓	0	2,790(100) (8.3)↓
진안군	0	13(7.7)→ (0.5)↓	156(92.3)→ (1.3)↓	0	169(100) (0.5)↓
무주군	0	7(7.4)→ (0.3)↓	87(92.6)→ (0.7)↓	0	94(100) (0.3)↓
부안군	35(6.9)→ (0.2)↓	13(2.6)→ (0.5)↓	461(90.6)→ (3.7)↓	0	509(100) (1.5)↓
정읍시	697(40.2)→ (4.5)↓	274(15.8)→ (10.3)↓	763(44.0)→ (6.2)↓	0	1,734(100) (5.2)↓
임실군	0	30(7.9)→ (1.1)↓	352(92.1)→ (2.9)↓	0	382(100) (1.1)↓
장수군	0	0	64(100)→ (0.5)↓	0	64(100) (0.2)↓
고창군	0	7(4.4)→ (0.3)↓	151(95.6)→ (1.2)↓	0	158(100) (0.5)↓
순창군	0	0	706(100)→ (5.7)↓	0	706(100) (2.1)↓
남원시	260(30.0)→ (1.7)↓	8(0.9)→ (0.3)↓	598(69.1)→ (4.8)↓	0	866(100) (2.6)↓
합계	15,333(45.7)→ (100)	2,653(7.9)→ (100)	12,330(36.7)→ (100)	3,245(9.7)→ (100)	33,561

주) → : 지역별 비중, ↓ : 산업별 비중

4. 이전제조기업 현황

1) 이전제조기업 현황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의 분포는 <표 3-28>과 같다. 2001~2004년까지 76개 기업이 전라북도로 이전되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높게 나타났다. 2000년도에 3개업체만 이전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각지로 옮겨간 991개 기업체 중 전라북도로 이전된 업체는 159개로 발표하였다. 이는 강원도,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3위의 수준이며 현재, 전라북도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⁶⁾

<표 3-28> 연도별 전라북도 이전 기업의 수(2001~2004)

단위: 개수, (%)

항목 \ 연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이전 기업수	14(18.4)	26(34.2)	14(18.4)	22(28.9)	76
종업원수	526(16.5)	1,132(35.5)	730(22.9)	797(25.0)	3,185

또한 최근에 이전한 기업의 원소재지 또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전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이전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북권이 48개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전체 63.2%를 차지한 반면, 동부권과 북부권은 각각 7개(9.2%), 10개(13.2%)로 서북권에 치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남고속도로 개통, 항만시설의 발전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활성화된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형별로 살

6)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3일 내놓은 '기업의 지방이전 실태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총 844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전 지역은 강원, 충남, 전북 등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전기업(66.4%)이 집중됐다. 이를 보면 원주, 춘천이 있는 강원도가 전체 이전 기업의 37.2%를 차지했고 충남 14.9%, 전북 14.3% 등도 평균치(7.7%)를 넘었다(『파이낸셜뉴스』, 2006.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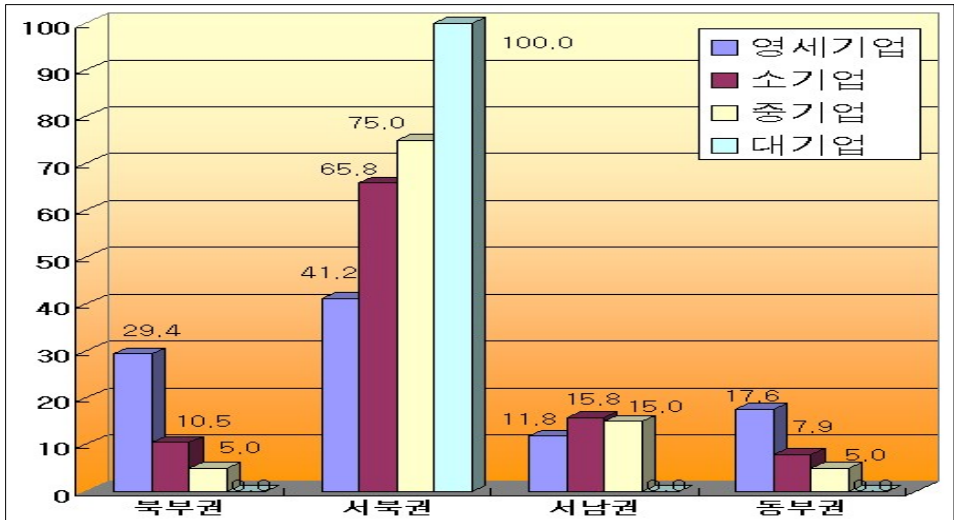
해보면 소기업(종사자 수, 10~49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과 대기업은 21개로 전체 26.9%를 점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기업 이상의 기업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3-29>, <그림 3-17> 참조).

<표 3-29> 권역별 이전기업현황(2001~2004)

단위 : 개수, (%)

기업분류 입지유형	영세기업 (5~9인)	소기업 (1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합 계
북부권	5(50.0)→ (29.4)↓	4(40.0)→ (10.5)↓	1(10.0)→ (5.0)↓	0(0.0)→ (0.0)↓	10(100.0) (13.2)
서북권	7(14.6)→ (41.2)↓	25(52.1)→ (65.8)↓	15(31.3)→ (75.0)↓	1(2.1)→ (100.0)↓	48(100.0) (63.2)
서남권	2(18.2)→ (11.8)↓	6(54.5)→ (15.8)↓	3(27.3)→ (15.0)↓	0(0.0)→ (0.0)↓	11(100.0) (14.5)
동부권	3(42.9)→ (17.6)↓	3(42.9)→ (7.9)↓	1(14.3)→ (5.0)↓	0(0.0)→ (0.0)↓	7(100.0) (9.2)
전북	17(22.4) (100.0)	38(50.0) (100.0)	20(26.3) 100.0	1(1.3) (100.0)	76 (100.0)

주) → : 권역별 비중, ↓ : 분류된 기업별 비중



<그림 3-17> 기업분류에 따른 권역별 이전기업 현황

제 3절 제조업의 집적지분석

1. 산업집적지의 개념 및 분석

1) 산업집적지의 개념

산업집적지는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특정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지역을 의미한다. 산업집적지는 산업군집과 지역군집(地域群集)의 통합체라 할 수 있다. 산업군집이란 구매자와 공급자 관계, 공통의 기술·공통의 구매자·공통의 유통경로 또는 공통의 인력자원 풀(pool) 등에 의해 연계된 산업집단을 말한다. 산업군집은 한정된 지역적 범위를 갖지 않으며,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규모면에서 산업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군집(地域群集)이란 특정산업 또는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서로 근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군집은 전문상가의 형성이나 특정업종의 지리적 집중, 산업단지의 구성에 의한 제조업의 집중 등과 같이 공간적 집중에 의한 외부경제효과 함유를 위해 비교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산업집적이란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정한 산업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업집적지내의 기업들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내에서 구매자-공급자 관계 및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에서의 협력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의 전문화된 지원기관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지가 중요한 이유는 산업집적지내의 기업들은 산업집적지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기업에 비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은 곧바로 지역경쟁력으로 연계되며, 지역경제 성장 및 주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산업집적지가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보면, 지역군집이 특정산업분야에 전문화되는 산업을 군집화 함으로써 산업집적지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군집 형성의 초기조건으로 지역특유의 자연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산업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군집의 초기조건들이 산업에 특유한 노하우의 지속적인 개발, 효율적인 공급자-구매자 네트워크의 형성, 기업들의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지역내의 강한 경쟁강도, 혁신, 경쟁,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촉진하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과 지원체계 등과 연계될 때 산업군집화 하면서 산업집적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 분석의 필요성

(1) 산업집적지 육성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특정지역에서의 산업군집과 전문화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집적의 경제효과를 높이며, 기술적·기능적 우위를 확보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세계적인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산업군집과 전문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과 경제공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내 기업요소들이 생산요소, 연관산업 및 지원조직, 수요시장, 여타 기업들과의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집적지는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하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주요 지역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집적지의 분석 의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산업정책은 산업집적지의 형성을 촉진하고 기업간 및 주요 경제기반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집적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산업발전 전략은 산업집적지간의 생산연계나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긴요함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동일 기업내에서는 기업전략 차원에서 지역별로 산재한 생산공장이나 사업체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왔지만, 특정 산업차원에서는 집적지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의 산업집적지정책은 산업집적지간의 생산 및 물자연계 강화, 분업의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협력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요 업종별 산업지도를 파악하고, 산업별 기존 집적지와 발전 유망 집적지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산업집적지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분석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이론들은 첫째, 산업클러스터 확인 문제와 관련된 클러스터의 정의와 개념화에 대한 연구, 둘째, 산업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셋째,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정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할 것인데, 클러스터에 관한 대부분의 정의들은 지리적 집중 또는 특화, 연계의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02). 집적경제는 이러한 클러스터의 세 가지 요인 중 연계를 제한 두 가지 요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사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영국상무성(Department Trade and Industry, 2001)은 3단계를 거쳐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5단위 산업분류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요산업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준은 지역 특화계수(location quotient: LQ)가 1.25 이상이고, 지역 노동력의 0.2% 이상을 고용한 산업이다⁷⁾. 2단계에서는 클러스터 개념에 대한 지식과 산업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지역의 주요산업들을 산업의 클러스터로 묶는다. 여기에서는 주로 산업의 전후방연관관계, 생산체인에 대한 이해, 동일산업부분에 속하는 업종간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3단계는 클러스터 발전단계, 수준, 고용동향, 중요성의 4가지 기준에 의

7) 특화계수는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특정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LQ_{ij} = \frac{Q_{ij}/Q_j}{Q_i/Q}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구성비}}{\text{전국의 } i\text{산업 구성비}}$ 여기서, Q_{ij} : j 지역의 i 산업 고용인구(또는 생산액), Q_i : 전국의 i 산업고용인구(또는 생산액), Q_j : j 지역의 총 고용인구(또는 생산액), Q : 전국의 총 고용인구(또는 생산액)

해 확인된 클러스터를 유형화 한다.

2) 분석방법

산업집적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를 확인(식별)하고, 각 산업집적지의 평가를 통한 유형화를 시도하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상의 성장유망산업에 한정하도록 한다. 성장유망산업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대상산업을 9개의 성장유망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동 산업들이 지역산업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지 분석을 위한 지역단위는 14개 각 시군에 기반으로 하였다.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는 1단계 산업집적지의 확인, 2단계 산업집적지 평가, 3단계 산업집적지의 유형화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집적지 확인방법은 영국상무성의 방법에 따라 산업의 지리적 집중도와 특화도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산업집적지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이 일정지역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동 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의 집중도는 지역군집 형성의 조건으로서 산업별 생산액 및 종사자수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1% 이상인 시·군이면서 각 시·군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의 사업체수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산업의 특화도는 종사자수 기준의 특화계수가 1.25이상인 경우를 산업의 집적지로 식별한다.

다만, 특화계수가 1.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1.00이상이면서 산업의 집중도가 1%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에는 산업집적지로 식별하였다. 각 시·군별로 확인된 산업집적지는 사업체의 지역적 분포양태와 산업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인접 시·군을 하나의 집적지로 묶었다.

(1) 1단계: 산업집적지의 확인

- 집중도: 지역 군집 형성 조건
 - 산업별 생산액 및 종사자수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1 % 이상인 시·군
 - 시·군별로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체수 존재
- 특화도: 상대적 특화산업
 - 종사자 기준 특화계수(location quotient: LQ)≥1.25
 - 특화도 계수가 1.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1 이상이면, 산업의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 산업의 집적지로 표시함
- 집중도와 특화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산업집적지로 확인

산업의 집적지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 2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산업집적지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성장성은 1998~2004년간의 종사수 및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전국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연도의 동향을 중시하여 1998~2004년 간에 한정한다.

(2) 2단계: 산업집적지의 평가

- 성장성 평가
 - 평가방법: 1998~2004년간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
 - 구분
 - 높음: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집적지
 - 중간: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여 성장이 안정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집적지
 - 낮음: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에 미달하여 성장이 하락추세인 집적지
- 생산성 평가
 - 평가 방법: 집적지 단위의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의 수준으로 평가
 - 구분
 - 높음: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20%이상 높은 집적지
 - 중간: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이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20~19%인 집적지
 - 낮음: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이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20% 미만인 집적지

생산성은 집적지 단위의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의 수준으로 평가 하였다. 생산성의 구분은 각 산업별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의 전국 평균수준을 기준으로 상하 20%

를 구분하여 3단계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먼저 산업집적지의 발전 단계를 유형화 한다. 발전단계의 유형화에서는 집적지의 사업체수, 기준년 대비 사업체수 순증감 추이, 주요 생산기업의 입지년도 생산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 하였다. 발전단계는 초기단계, 확립단계, 성숙단계, 쇠퇴단계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1단계의 확인과정에서 산출된 집중도와 2단계의 성장성 및 생산성 평가에 기초하여 산업집적지의 수준을 다음의 3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산업의 집중도가 전국대비 10% 이상이고, 생산성이 중간수준 이상인 집적지는 핵심집적지로 유형화 한다. 핵심 집적지는 산업별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집적지로서 집적 정도가 매우 높고 타 집적지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집적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의 집중도가 전국대비 3% 이상이고, 성장성이 중간 수준 이상인 집적지는 유망집적지로 유형화 한다. 유망집적지의 집적정도는 핵심집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타 지역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핵심집적지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핵심 집적지와 유망집적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집적지는 일반집적지로 유형화한다.

(3) 3단계: 산업집적지의 유형화

- | |
|--------------------------------------------------------------------------------------------------------------------------------------------------------------------------------------------------------------------------------------------------------------------------------------------------------------------------------------------------------------------------------------------------------------------------------------------------------------------------------------------------------------|
| <input type="checkbox"/> 발전단계의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화 방법: 사업체 수 기준년도 대비 사업체수 순증감 추이, 주요 생산기업의 입지년도, 생산액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 주요기업의 입지년도가 최근이거나 관련 기업의 집적수준이 낮은 집적지 · 확립단계: 일정수준의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사업체수의 증감이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높아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집적지 · 성숙단계: 집적지의 형성역사가 길고, 사업체수 및 생산액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 쇠퇴단계: 지역내 구조조정 산업으로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적지 |
|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지의 수준의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집적지: 산업의 집중정도가 전국대비 10% 이상이고, 생산성이 중간수준 이상인 집적지 ○ 유망집적지: 산업의 집중도가 전국대비 3% 이상이고, 성장성이 중간 수준 이상인 집적지 ○ 일반집적지: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집적지 |

3.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

1) 산업집적지 확인

<표 3-30> 산업집적지 확인 결과(2004)

단위 : %, 개, 명

산 업	집적 시·군	집중도 ¹⁾		특화계수 ²⁾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화학제품	전주시	0.717	0.3	2.963	47	1,054
	군산시	0.713	0.5	4.790	69	1,704
	익산시	1.051	0.8	7.289	95	2,593
	정읍시	0.114	0.2	1.985	48	706
	김제시	0.050	0.1	1.403	55	499
	완주군	0.803	0.6	5.529	39	1,967
제1차금속	군산시	1.410	1.5	21.874	13	1,724
	익산시	0.159	0.4	6.166	10	486
	정읍시	0.103	0.1	2.068	5	163
	김제시	0.017	0.1	1.497	6	118
금속제품	군산시	0.119	0.2	1.312	138	561
	익산시	0.332	0.5	2.400	158	1,026
일반기계	정읍시	0.301	0.4	2.423	26	1,085
전기, 전자기기	전주시	0.049	0.1	1.613	96	542
	익산시	0.011	0.6	9.014	75	3,029
	정읍시	0.273	0.1	2.125	14	714
	완주군	0.036	0.1	2.187	7	735
수송장비	군산시	2.560	1.0	27.196	51	3,633
	익산시	0.528	0.7	17.344	50	2,317
	정읍시	0.036	0.1	1.677	10	224
	김제시	0.179	0.3	8.624	27	1,152
	완주군	1.178	1.3	35.108	41	4,690

자료 : 전라북도, 2004년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5.12

주 : 1) 집중도는 전국대비 당해 집적 시·군의 비중을 의미

2) 특화계수는 종사자수 기준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는 6개분야의 22개 산업집적지에서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참조). 전주시는 2개분야(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군산시 4개 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수송장비), 익산시는 5개분야(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정읍시 5개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 김제시의 3개분야(화학제품, 제1차금속, 수송장비), 마지막으로 완주군의 3개분야(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이다.

2) 산업집적지 평가

산업집적지를 평가함에 있어 성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는데 성장성은 기업체수, 근로자수, 생산액의 증감에 따라 생산성은 분류항목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표 3-31>은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류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생산성과 성장성도 높은 업종으로는 화학제품분야의 정읍과 완주, 수송장비 분야의 군산과 김제, 일반기계분야의 정읍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은 높으나 생산성은 낮은 분야로는 화학제품의 군산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성은 높으나 성장성이 낮은 분야로는 제1차금속의 익산, 전기전자의 정읍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장성과 생산성이 모두 낮은 분야는 화학제품의 전주시와 일반기계분야의 익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1>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성장성과 생산성

성장성 높음	화학제품-군산	화학제품-익산	화학제품-정읍, 완주 수송장비-군산, 김제 일반기계-정읍
중간	전기전자-익산 화학제품-김제 제1차금속-김제 수송장비-완주	제1차금속-군산 전기전자-전주	금속제품- 군산 제1차금속-정읍 수송장비-남원, 익산, 익산 전기전자-완주
낮음	화학제품-전주		제1차금속-익산 전기전자-정읍
	낮음	중간	높음 생산성

3) 산업집적지 유형화

<표 3-32>는 전북지역의 산업집적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핵심집적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망집적지로는 군산의 자동차 및 수송장비산업과 제1차 금속산업, 완주의 수송장비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확립단계인 산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전기전자, 금속제품, 일반기계, 군산의 금속제품, 화학제품 익산의 전기전자, 제1차 금속산업 등으로 나타난다. 전북지역의 일반집적지 중 쇠퇴단계에 있는 산업으로는 전주의 화학제품, 익산의 금속제품과 일반기계분야, 정읍의 자동차·수송장비산업과 전기·전자분야를 들 수 있다.

<표 3-32> 지역별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와 수준

핵심 집적지				
유망 집적지		제1차금속-군산 수송장비-군산	수송장비-완주	
일반 집적지	전기전자-완주 제1차금속-김제, 정읍	수송장비 - 김제 전기전자 - 전주, 익산 금속제품 - 군산 제1차금속 - 익산 일반기계 - 정읍 화학제품 -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익산-화학제품, 전기전자	전주 - 화학제품 익산 - 금속제품, 정읍 - 수송장비, 전기전자
	초기	확립	성숙	쇠퇴 발전단계

제 4절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1. 생존요인의 개요

1) 기업의 생존기간에 관한 문헌연구

기업의 생존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 거시환경, 기업관련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기업의 생존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시기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이 얼마의 기간 동안 생존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시기별로, 산업별로 기업이 처한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기업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Dunne et al.(1989)은 1963~1982년 기간의 시장진입자의 각 코호트(cohort)의 시장점유율은 진입 후 첫 10년 동안에 약 50%정도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진입기업의 61.5%가 진입 후 5년 이내에 퇴출되고 79.6%는 진입 후 10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1974~1982년간의 영국 제조기업 생존율을 이용할 수 있다. 1974년에 처음으로 등록된 제조기업 중 95%만이 1975년에 여전히 등록되고 1976년에 81%, 1977년에 68%가 등록되었다. 마찬가지로 1982년에 처음으로 등록된 기업 중 97%는 1983년까지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들 진입기업의 약 5%는 진입 후 첫째 말에 사라지고 2차년도 말에 약 15~20%가 사라지며, 5년이 경과하면 약 50%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Mata and Portugal(1994)은 1983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포르투갈 기업은 신생기업의 20%이상이 설립한 해에 퇴출되며, 신생기업의 약 50% 이상은 4년이 되기 전에 죽으며 초기 모집단의 오직 30%만이 7년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약간 달라진다. 즉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생기업 중 약 30%는 첫째 해에 실패하지만 10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창업한 기업의 약 95%는 같은 기간 중에 생존하였다. 4년 후의 기업생존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큰 기업규모로 기업의 약 3/4은 4년

후에도 계속 가동한 반면에 소규모로 기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약 1/2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생존하였다.

Arie de Geus(2001)는 기업의 생존기간에 대한 흥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둥들인 크고 견실한 기업들도 평균 40년 이상을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아주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규모를 띤 기업들의 수명 기대치를 나타낸다. 이 평균 수명 기대치대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이미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초기 10년을 넘어선 기업들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창업기업들의 10년 내 도태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과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평균수명이 단지 12년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dwin and Gorecki(1990)는 캐나다의 경우 1971년에 존재하였던 기존기업 중 8.1%가 1972년 말에 사라졌으며, 1975년 말에 18%, 1980년 말에 30%이상이 사라졌다. 1971년 코호트의 진입자 중 10.6%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출되었으며, 거의 35%는 1973년 말에 사라졌고, 1975년 말에 46%이상이 사라지고 1980년경에는 거의 2/3가 퇴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Geroski(1995)는 캐나다에서 신생기업의 평균수명은 약 13년이며 1971년 진입기업의 오직 40.2%만이 1982년에 여전히 생존하였다.

독일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Brüuderl and Mahmood(1996)는 섬유, 도매, 운송, 보험, 전자산업 등 5개 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전자산업의 생존율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에서 8년 이후까지 생존한 기업은 거의 50%에 육박하였다. 평균적으로 8년 후 30~50%의 기업이 계속 생존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업의 생존이 창업규모 등 기업특성은 물론 국가마다 산업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이 진입이나 퇴출의 제도적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기업생존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활발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진바 있으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도산과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기간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위험모델을 응용하여 기업의 생존기간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생존에 대한 국내·외의 분석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업생존을 설명하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증분석하고 있어 어떤 이유에서 설명변수가 선택되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이 분야의 연구들은 기업고유의 특성뿐 아니라 당해 기업이 속한 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생존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Audretsch, Houweling and Thurik(1997)은 기업특성 변수뿐만 아니라 산업특성 변수를 함께 분석에 포함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기업생존에 대한 보다 현실감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것은 기업생존이 기업특성뿐만 아니라 산업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먼저 기업생존을 설명하는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기업특성

기업생존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변수(firm-specific factors)로 창업규모, 현재 기업 규모, 진입기업의 유형 등을 검토한다.

우선 기업생존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기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기업규모의 효과를 분석한 신생기업 생존연구는 창업규모(start-up size)가 기업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규모는 경험, 경영능력, 기업조직 등 관찰되지 않은 효율성이 실현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소규모 기업은 능력 있는 경영자를 고용하기 어렵고 임금이 상승하거나 사업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먼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기업은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은 어떤 사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라고 판명되면 퇴출되기 전에 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성공예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신생기업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신생기업이 작은 규모로 창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신생기업은 기존기업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창업한다. 소규모의 시장진입을 선택함으로써 신규진입 기업은 기대된 이득에 비해 기존기업의 공격적인 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효율성에 대한 창업초기의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는 비교적 작은 기업규모를 선택한다.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시작한다.

이러한 전략은 진입의 비용이 매몰비용인 경우에 특히 적절한 기업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신규기업은 큰 기업으로 시작할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신생기업에 대한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s)은 투자결정을 제약하고 기업의 창업이나 창업규모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신생기업의 자금제약과 불확실성은 소규모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유도전략(judo strategy)이 성공한다면, 소규모 진입기업은 기존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덜 받게 되고 높은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다. 진입규모의 선택의 이유와 관련 없이 대규모 진입기업에 의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소규모 진입기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보다 크다. 그러므로 소규모 진입기업은 대규모 진입기업보다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창업규모뿐 아니라 현재의 기업규모(current firm size)도 기업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규모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실증분석에서 검증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다. 그러나 창업규모와 현재의 기업규모 중 어느 것이 기업의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Mata et al.(1995)은 창업규모와 현재의 기업규모를 구분하고 현재의 기업규모가 창업규모에 비해 기업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 바 있다. 창업기업은 평균적인 기존 기업규모에 비해 작고 창업기업이 창업 후 수년 내에 퇴출된다면, 창업규모는 기업의 생존여부를 전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생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경쟁기업에 비해 비용 면에서 불리하며 이것은 신생기업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한다. 반면에 일단 생존하는 기업은 기존

의 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현재기업 규모를 기업생존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진화의 모델에서 매순간 현재의 기업규모는 생존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변수이다. 기업은 매순간마다 과거의 성과를 보면서 기업규모를 조정한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은 성장하고, 좋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은 위축되어 결국 퇴출된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조정비용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부분적으로 조정하게 되고 바람직한 기업규모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수렴하게 된다. 기업이 과거에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그 기업이 성과가 좋았고 그 기업이 현재의 기업규모보다 커질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여 왔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예감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대규모 기업은 성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오랜 기간의 낮은 성과를 감내해 내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기업성장은 기업성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의 기업규모와 기업생존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기업의 퇴출 가능성은 기업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시장진입 후 매시점에서의 기업규모는 진입 후 성과, 즉 기업퇴출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진입유형이 진입 후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이다.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와 완전히 새로운 독립기업을 창업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기업생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기업에 의해 창업되는 신생기업(an established firms' new firm)은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고 경영에 관한 핵심역량을 갖고 있는 경영 단위에 의해 창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산업 특정한 요인은 물론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구나 기존기업에 의해 창업되는 신생기업들은 같은 그룹 내 기업의 자원, 인력 등을 공유하고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 독립적으로 창업된 기업에 비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의 기업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높은 퇴출율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 Barden-Fuller(1989)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공장 기업이 기업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각화되지 않은 기업은 다각화된 기업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폐쇄할 인센티브가 적다. 다각화되지 않은 기업

이 실제로 공장폐쇄가 결정되는 경우 이 기업의 주주와 경영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차라리 공장폐쇄가 연기되면 이 두 그룹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각화된 기업의 공장폐쇄는 주주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는 다른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Reynolds(1988)는 대규모의 다수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소규모의 단일기업보다 빨리 공장폐쇄를 시작한다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은 단일의 대규모 공장과 비교할 때 다수 공장 하에서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수공장 가동에 따른 융통성 (flexibility)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2) 산업특성 및 경영환경

기업의 생존은 기업규모, 진입유형 등과 같은 기업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을 둘러싼 산업특성(industry-specific factors)이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진입조건, 경쟁정도, 산업성장 등은 창업기업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산업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기업생존율이 산업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또 산업의 구조적인 차이가 기업생존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기업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산업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째로 신생기업이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산업진입의 정도가 기업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진입률이 높은 산업에서 신생 진입자는 다른 진입자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진입 후 신생기업의 생존은 더욱 어렵게 된다.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생존은 그렇지 않다.

신규 진입기업들이 직면하는 선택과정(selection process)은 전체 거시경제 조건보다 특정한 산업환경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산업성장이 빠른 산업에 대한 시장침투는 타 경쟁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 이러한 성장산업에서 신생기업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시장 진입율이 높은 산업은 경쟁 또한 치열하기 때문에 퇴출율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시장진입이 높은 산업은 시장에서 적자(the fittest)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고 높은 퇴출이 따르게 되는 산업이다. Dunn, Roberts and Samuelson(1988)은 시장에서 진입율과 퇴출율이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산업이 비교적 재편성(turnover)이 높은 산업과 재편성이 낮은 산업인가 여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진입장벽의 원인이 곧 퇴출장벽의 원인이라는 논의와 같다. 그러므로 매몰비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업은 매몰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과 다르게 진입율과 퇴출율이 동시에 낮은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의 경쟁도가 기업생존에 영향을 준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경쟁은 기업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치열한 경쟁은 기업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경쟁시장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가져오는 반면에 시장집중의 증가는 소수의 기업간 담합을 촉진한다.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기존기업은 신규기업의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생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기존기업의 담합적 행동은 신생기업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기업생존과 시장 집중도를 관련시키는 실증결과는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진입기업의 경우는 기존기업에 의한 전략적 진입저지와 공격적 행동의 두려움이 더욱 증대된다. 보복적 행동(retaliatory behavior)은 대규모의 경쟁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다 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기업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는 그에 따르는 비용에 비해 이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도는 담합의 가능성과 기존기업에 의한 공격적 행동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포함할 수 있다. 소규모 진입기업은 공격적 행동의 두려움 때문에 진입을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집중도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한 신생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독점력을 갖는 다수기업의 경우 높은 집중은 기업 실패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도 또한 기업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Audretsch and Mahmood(1995)는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로 신생기업의 진입규모가 당해 산업의 최소 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생기업은 시장 내의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비해 비용면에서 불리하다. 비용불리도가 커지면 작은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생존기간은 평균적으로 짧아진다.

최소 효율규모가 큰 산업 내의 소규모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낮다. 산업의 최소

효율규모가 커지면 신생기업의 생존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White(1982)는 규모의 경제가 크다는 것은 자본집약도가 높다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본장비는 본질적으로 큰 덩어리 형태로 투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로 설립된 기업은 일반적으로 최소 효율규모가 큰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하위 최적 규모(suboptimal capacity)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큰 자본집약도나 최소 효율규모 모두 신생기업의 실패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넷째로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산업의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은 신생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낮추는 산업환경을 형성한다. 소규모 진입기업은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쟁기업으로부터 시장점유율을 얻는 것보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산업에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이 보다 쉽다. 높은 산업성장률을 나타내는 산업의 경우 신생기업은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고객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존이 보다 용이해진다. 소규모 신생기업은 성장하기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시장진입은 경쟁자들에게 많은 해를 입히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경우로 기업들은 더욱 오래 생존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산업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산업의 부침,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신생산업과 관련 되어 있을 수 있다. Gort and Klepper(1982)가 제시한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산업의 조건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제수수명주기의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시장진입은 쉽지만 역시 생존하기는 쉽지 않으며 높은 재편 성율이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로 경기변동이 기업생존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동안 기업의 시장진입 후 성과분석에서 기업생존과 경제변동간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시장진입 후 성과분석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경기변동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다. Boeri and Bellmann(1995)은 두 번의 경기정점과 한 번의 경기저점을 포함하는 서부 독일의 1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서로 다른 코호트에 대해 퇴출과 기업성장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신생기업의 퇴출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스펙터적인 견지에서 경기하강기에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다는 청소시기(timing of cleansing)의 관점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신생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경제의 확장이나 위축 어느 것도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 연구는 신생기업의 위험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기업연령이며 경기적인 요인은 기업의 진입 후 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업들은 경기에 더 민감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생존요인의 분석모델

1) 위험함수

생존분석기법은 생물학, 생의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생존시간 또는 실패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생존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예를 들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생존분석기법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생존시간 데이터를 분포에 대한 통계적 추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법은 어떤 제품의 내구연한, 사람 또는 동물들의 특정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소요기간 그리고 특정 질병의 지속기간 및 이들 질병에 대한 처치효과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생존분석의 기원은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사망률표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기법의 시작은 2차 대전 당시 군사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전 후에 민간분야로 확산되어 상업용 제품에 대한 신뢰성 즉 내구연한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학에의 적용노력은 초기에 주로 관심대상 모집단 수명에 대한 이론적 분포를 찾아내려는 모수적 모형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는 의학 분야의 임상연구에 생존분석기법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비모수적 모형의 연구로 그 관점이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생존분석은 양의 값을 갖는 확률변수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의미는 경우로 대표적인 양의 값을 갖는 확률변수 예를 들면 기계 또는 전기부품의 수명, 환자, 동물 등 생명체의 수명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생존분석기법은 관심의 대상인 모집단의 생존시간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하는데 사용된다.

수학적으로 수명은 양의 값을 작은 확률변수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확

률변수를 규정할 수 있다. 즉 T 를 양의 값을 작은 수명변수화 하면 T 의 누적확률 분포 $F(t)$ 는

$$\begin{aligned} F(t) &= \Pr[T \leq t] \\ &= \int_0^t f(u)du \end{aligned}$$

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f(t)$ 는 변수 T 의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개체가 t 시간까지 살아남을 확률로 정의 되는 생존함수 $S(t)$ 는

$$\begin{aligned} S(t) &= \Pr(T \geq t) \\ &= 1 - F(t) \\ &= \int_t^{\infty} f(u)du \end{aligned}$$

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개체가 t 시간까지 살아남았다는 조건하에서 순간 사망 또는 실패확률을 의미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begin{aligned}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 T \geq t)}{\Delta t} \\ &= \frac{f(t)}{S(t)} \\ &= \frac{f(t)}{1 - F(t)} \end{aligned}$$

로 표시된다. 따라서 누적위험분포함수는

$$\begin{aligned} \Lambda(t) &= \int_0^t h(u)du = \int_0^t \frac{f(u)}{1 - F(u)} du \\ &= -\log[1 - F(t)] = -\log S(t) \end{aligned}$$

로 표시된다.

2) Cox의 비례위험 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

확률변수 T_i 를 연구시작 시점에서 i 번째 기업이 도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라고 하자. 이 경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기업이 도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T_i 는 오른쪽 불완전한 자료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또한 도산예측모형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재무비율 자료는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재무비율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의 함수로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른쪽 불완전 자료의 형태와 시간에 의존하는 독립변수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F_i(t) = \Pr(T_i \leq t | z_i(t))$ 라고 하자. 여기서 $z_i(t)$ 는 k 개의 재무비율인 $(z_{i1}(t), z_{i2}(t), \dots, z_{ik}(t))$ 를 나타내는 벡터로서 i 번째 기업의 시점 t 에서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벡터로 시간변동 변수이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i 번째 기업이 t 시점 이내에서 도산할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함수는 $F_i(t)$ 라고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_i(t) = \int_0^t f_i(u) du = \Pr(T_i \leq t | z_i(t))$$

여기서 $f_i(t)$ 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이 경우 위험함수는 i 번째 기업에 대한 t 시점에서의 순간퇴출 확률을 나타낸다.

$$h_i(t; z_i(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_i < t + \Delta t | T_i \geq t, X_{(t+\Delta t)}]}{\Delta t} = \frac{f_i(t)}{S_i(t)}$$

이러한 위험함수는 t 까지 i 번째 기업이 생존하였다는 조건하에서 $T_i = t$ 시점부터 $T_i = t + \Delta t$ 사이에 기업이 퇴출될 확률의 극한 형태를 의미한다. 위에서 정의한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

$$h(t | z_i(t)) = g(z_i(t)) \cdot h(t|0)$$

일반적으로 공변량 벡터의 함수형태는 $g(z_i(t)) = \exp(z_i(t)\beta)$ 과 같이 지수함수의 형태로 가정하고 $\beta = (\beta_1, \beta_2, \dots, \beta_k)$ 로 k 개의 재무비율에 대한 회귀계수가 된다. 또한 기저위험함수는 $h(t|0)$ 로 표현되고 t 시점에서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 때 개별위험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비례위험 모형으로 표현된다.

$$h(t|z_i(t)) = \exp(z_i(t)\beta) \cdot h(t|0)$$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도산예측모형은 두 개의 콤포넨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콤포넨트는 $\exp(z_i(t)\beta)$ 의 형태로서 개별기업의 재무비율을 통한 기업의 도산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 콤포넨트의 특징은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도산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두 번째 콤포넨트(components)인 $h(t|0)$ 로서 이 함수는 t 시점에서의 경제적 환경에 따른 부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러한 기저함수의 추정에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위험이 발생하기 보다는 비체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모수적으로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만일 n 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r 개의 기업이 도산에 이르렀고 $n-k$ 개의 기업이 생존하여 오른쪽 불완전 자료 형태로 남아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r 개의 도산한 기업은 q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도산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러한 서로 다른 시점을 순서대로 정렬한 시간 변수(order statistics)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자.

$$t_{(1)} < t_{(2)} < \dots < t_{(q)}$$

또한 d_i 를 시점 $t_{(i)}$ 에 도산이 발생한 수라고 하자. 시점 t 바로 전까지 정상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집합을 t 시점의 리스크 집합이라고 부르고 $R(t)$ 라고 표기하도록 하자. 또한 $D(t)$ 를 t 시점에서 도산하는 기업들의 인덱스 집합이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beta = (\beta_1, \beta_2, \dots, \beta_k)$ 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우도함수(partial likelihood function) $L(\beta)$ 를 사용한다.

$$L(\beta) = \prod_{i=1}^q \frac{\exp\left(\sum_{j \in D(t_{(i)})} z_j(t_{(i)})\beta\right)}{\sum_{j \in R(t_{(i)})} \exp(z_j(t_{(i)})\beta)^{d_i}}$$

이러한 β 에 대한 부분최대우도함수 추정치는 $L(\beta)$ 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추정치는 Newton-Raphson 방법에 의해 반복 추정한다.

3) Newton-Raphson 방법

최대우도함수 추정값(Maximum likelihood estimate) $\hat{\theta}$ 은

$$L(\hat{\theta}) = \max_{\theta} L(\theta)$$

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도함수 $L(\theta)$ 가 미분 가능한 경우

$$\frac{d}{d\theta} \log_e L(\theta) (= \frac{L'(\theta)}{L(\theta)}) = 0$$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g(\theta) = \frac{d}{d\theta} \log_e L(\theta)$$

로 놓고 $g(\theta) = 0$ 의 근을 구하면 된다. Newton-Raphson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초기값 θ_0 에서 접선을 구하고 접선의 근으로 θ 값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θ_0 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eta = g(\theta_0) + g'(\theta_0)(\theta - \theta_0)$$

이다. 따라서 접선의 근은

$$\theta_1 = \theta_0 - \frac{g(\theta_0)}{g'(\theta_0)}$$

즉

$$\theta_1 = \theta_0 - \frac{\frac{d}{d\theta} \log_e L(\theta_0)}{\frac{d^2}{d\theta^2} \log_e L(\theta_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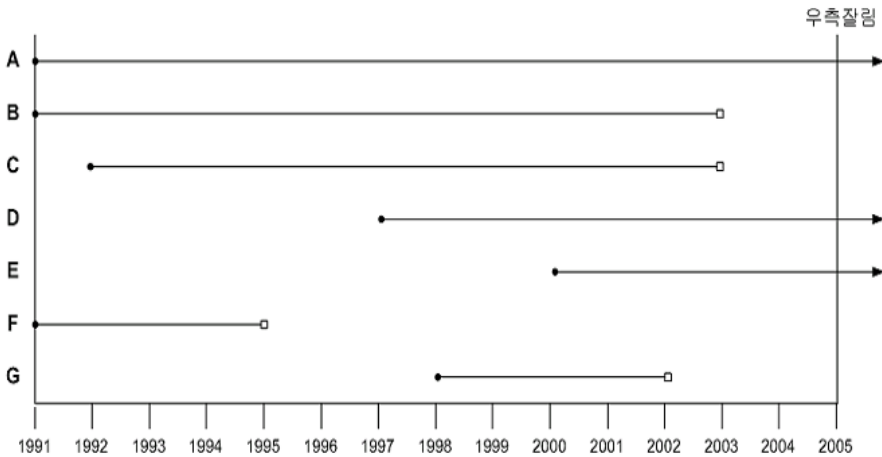
이다. Newton-Raphson 방법은 추정값 개선의 정도가 무시될 수 있을 때 까지의 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추정치를 얻게 된다.

4)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이용될 자료에 대한 설명은 크게 보아 전체 생존기간 분석에 이용할 자료의 특성, 종속변수로 이용될 생존 기간의 측정문제 그리고 설명변수의 측정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생존기간 자료의 특성과 종속변수

우선 생존기간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18>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8> 기업 생존기간 자료의 특성

A기업의 경우 연구시작 시점인 1991년도에 창업된 기업으로 연구가 끝나는 시점인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정상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폐업시점은 2006년도 이후가 될 것이며 결국 우측 잘림 자료의 형태를 갖게 된다. B기업의 경우 연구시작 시점인 1991년도에 창업되어 2003년에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 완벽한 채구 자료를 구성하는 케이스이다. C기업의 경우 연구시작 시점 이후인 1992년 창업되어 연구가 끝나는 직전연도인 2003년에 퇴출된 경우이다. D기업은 연구시작 시점 이후인 1997년에 기업이 설립되어 2005년 이후까지도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의 창업시점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폐업시점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우측 불완전 자료의 형태로 취급된다. E기업의 경우 2000년에 창업되어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된 경우이다. F기업은 1991년 창업되어 1995년에 폐업된 기업이며 G기업은 1998년에 창업되어 2002년에 폐업된 기업이다. 위의 다양한 자료형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 A기업, D기업, E기업은 우측 잘림 형태의 자료를 작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치는 일치성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꼭

스의 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1991~2005년까지의 상장기업, 등록기업, 외감기업, 일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상장기업, 외감기업,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의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이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여 생존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기간으로 측정되는 기업의 생존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창업 일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처음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설립년도에 재무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기업은 설립 후 최초로 기업의 재무자료가 제공되는 연도를 기업의 설립일로 간주하여 기업의 생존기간을 계산하였다.

기업의 퇴출은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여 다시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부도예측이나 부실기업 분석에서 사용하는 기업실패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제 퇴출이 이루어진 폐업을 기준으로 생존기간을 계산하였다. 폐업은 한신평정보(주)의 폐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다만 분석 중인 기업 중 특정한 연도 이후 기업의 재무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폐업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기업은 폐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중 기업재무자료가 연속 2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나쁘게 나타나면서 특정연도 이후부터 기업의 재무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기업은 폐업된 것으로 하였다. 즉 특정연도부터 재무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기업 중 2년 전부터 자본감식, 영업 손실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부도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은 폐업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은 기타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자료를 200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젊은 기업에 대한 진정한 퇴출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Mata et al.(199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6년의 기업설립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주된 산업을 변경한 기업, 한 기업이 하나의 기업을 폐업하고 다음 해에 또 다른 기업을 개업한 경우 그리고 기업합병 등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하여진 최종의 데이터세트(data set)는 1991~2005년 기간에 신생기업의 15개 다른 연도의 코호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는 1991~2005년 기간의 15개 코호트를 동시에 이용하고 시간변동 변수를 위험함수를 추정

함으로써 이전의 연구방법론을 개선하였다. 동 기간 중 분석에 사용된 기업 수는 총 734개 기업으로 독립기업은 636개 기업이고 계열기업은 98개 기업이다.

2) 독립변수

<표 3-33>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요약통계표

항목		통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	창업규모	6,280,463천원	19,020,935천원	13,135천원	232,874,185천원
	현재기업 규모	11,457,901천원	6,295,496천원	1,800천원	1,123,737,961천원
고용	창업규모	53.7명	108.6명	1명	1,275명
	현재기업 규모	43.1명	143명	1명	1,890명

생존함수 추정을 위한 독립변수는 기업특성 변수로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요약 통계표는 <표 3-33>에 나타나 있다.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창업의 규모, 현재기업 규모, 시장진입유형 변수를 이용하였다. 창업규모는 진입시점의 각 기업의 매출액 또는 고용자수의 로그값으로 정의 하였으며, 현재기업규모는 각 시점의 현재의 매출액 또는 고용자수의 로그값이다.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구분은 한신 평정보(주)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 있는 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계열로 지정된 기업은 다수의 기업을 갖는 기업으로서 1의 더미변수를 부여하고 독립기업인 경우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3.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실증분석

1) 전라북도 기업의 생존율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기업의 생존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한다.

생존함수 또는 위험함수는 비모수적인 방법인 Kaplan-Meier의 누적 한계추정법 (product limit estimator)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n 개 기업 생존기간이 q 개로 구분된다고 가정하고 그 시점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t_0 \leq t_1 \leq \dots \leq t_q$

($t_0 = 0$)이다. 이때 Kaplan-Meier 생존함수 $\hat{S}(t)$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hat{S}(t) = \prod_{t_i \leq t} \hat{P}_j$$

여기서 \hat{P}_j 는 시점 t_j 시점까지 생존한 기업의 수를 t_{j-1} 시점까지 생존한 기업의 수로 나눈 값이다. 기업의 생존여부에 대한 관측이 매 시점마다 이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t_j 시점 직전, 즉 t_{j-1} 에는 계속 생존하고 있던 기업 수를 n_j 라고 하고 t_{j-1} 시점에는 생존하고 있다가 t_j 시점에 퇴출된 기업수를 h_j 라고 하면 Kaplan-Meier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Kaplan-Meier 추정치는 어떠한 표본 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hat{S}(t) = \prod_{j=1}^q \left[\frac{n_j - h_j}{n_j} \right]$$

(1) 분석방법 및 분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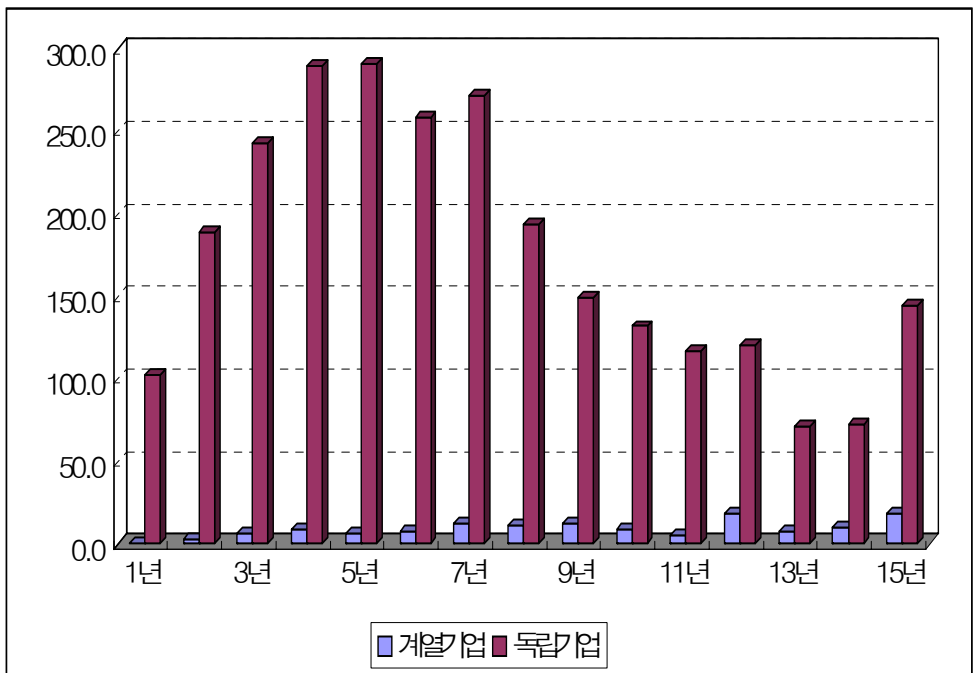
생존기간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2.0의 팩키지(package)중 생존율을 분석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존함수의 추정은 중도절단자료에 대한 비모수적 분석기법의 확장으로 한 집단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누적한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표 3-34> 분석유형 및 분석내용

분석유형	분석내용
대상	전라북도 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분석
기업형태별	계열기업,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
업종별	업종을 크게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설립연도별	1991년~2005년까지 설립연도별로 구분하여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

생존율분석은 전라북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형태별 구분은 계열기업, 독립기업으로 구분된다. 업종은 KDC표준분류에 의해 10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34>와 같다. 분석기간은 설립연도별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의 분포현황



<그림 3-19>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생존기간별 현황

<표 3-35> 전라북도내의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비율

구분	계열기업		독립기업		전체기업	
	업체수	%	업체수	%	업체수	%
1년	0	0.0%	103	100.0%	103	3.7%
2년	3	1.6%	189	98.4%	192	6.9%
3년	6	2.4%	243	97.6%	249	8.9%
4년	9	3.0%	290	97.0%	299	10.7%
5년	7	2.3%	291	97.7%	298	10.7%
6년	8	3.0%	259	97.0%	267	9.6%
7년	13	4.6%	272	95.4%	285	10.2%
8년	11	5.4%	194	94.6%	205	7.4%
9년	12	7.5%	149	92.5%	161	5.8%
10년	9	6.4%	132	93.6%	141	5.1%
11년	5	4.1%	117	95.9%	122	4.4%
12년	18	12.9%	121	87.1%	139	5.0%
13년	8	10.1%	71	89.9%	79	2.8%
14년	10	12.0%	73	88.0%	83	3.0%
15년	19	11.6%	145	88.4%	164	5.9%
합계	138	5.0%	2,649	95.0%	2,787	100%

분석기간 중 연구대상이 된 기업 수는 총 2,7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중간의 자료미비로 인하여 분석에 의의를 가진 자료를 갖춘 734개 기업을 분석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독립기업은 636개 기업이고 계열기업은 98개 기업이었으며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비율은 <표 3-35>와 <그림 3-19>와 같다. 전라북도의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비율은 독립기업이 총 2,649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열기업은 총 138개로써 5.0%를 점유하고 있다.

(3) 전체기업의 생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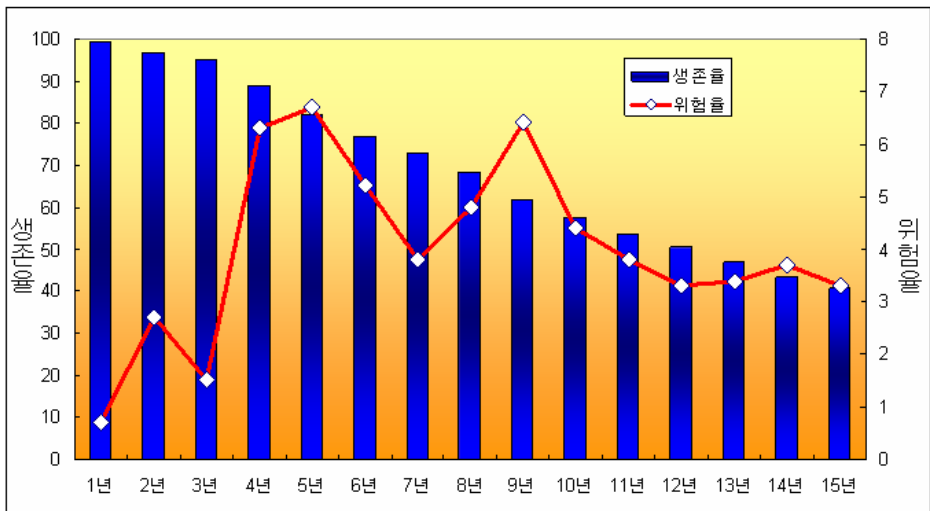
연구대상이 된 전체 기업의 생존분석으로는 설립일이 1991.1.1~ 2005.12.31일인 전라북도기업을 대상으로 생존하는 분석결과를 <표 3-36>에 간략하게 분석정리하였다.

<표 3-36> 생존기간별 생존율 및 위험율

단위 : %

생존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생존율	99.3	96.6	95.1	88.8	82.1	76.9	73.1	68.3	61.9	57.5	53.7	50.4	47	43.3	40.7
위험율	0.7	2.7	1.5	6.3	6.7	5.2	3.8	4.8	6.4	4.4	3.8	3.3	3.4	3.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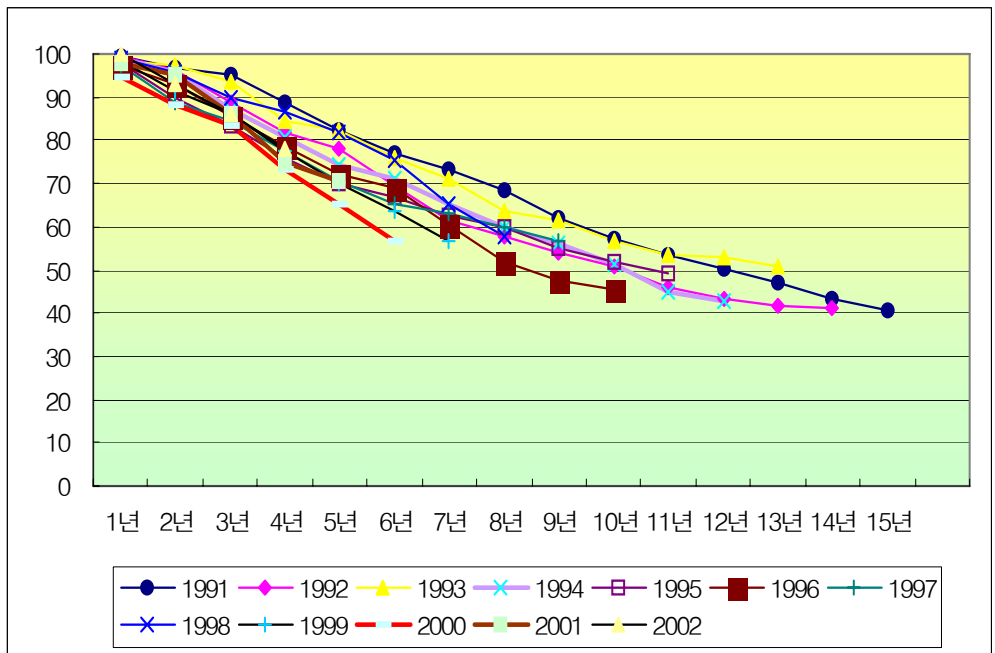
각 코호트별 Kaplan-Meier의 기업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3-20>과 <표 3-37>이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내의 제조업체의 평균적인 생존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1991년 코호트의 경우 일 년이 지난 후 0.7%만이 도태되고, 5년 후에는 17.9%, 10년 후에는 42.5%가 도태되고 15년 후에는 40.7%기업만이 생존하게 된다. 2001년도의 코호트를 살펴보면 1년 후에는 2.3%의 신생기업이 죽고 5년 후에는 29.2%의 신생기업이 도태된다. 전라북도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비교적 도태율이 낮게 나타났다. 단언하여 결과를 기술할 수는 없고 코호트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990년도 후반에 기업 도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을 보면 설립 후 4년(6.3%)이 되는 해와 5년(6.7%)이 되는 해 그리고 9년(6.4%)이 되는 해의 위험율이 가장 크게 기록되고 있다.



<그림 3-20> 생존기간별 생존율과 위험율

<표 3-37> 전라북도내의 제조업체 신생기업의 생존율

코호트	연 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991	0.993	0.966	0.951	0.888	0.821	0.769	0.731	0.683	0.619	0.575	0.537	0.504	0.470	0.433	0.407
1992	0.992	0.962	0.886	0.818	0.780	0.697	0.614	0.576	0.538	0.508	0.462	0.432	0.417	0.409	
1993	0.986	0.973	0.938	0.842	0.822	0.760	0.712	0.637	0.616	0.568	0.534	0.527	0.507		
1994	0.988	0.960	0.873	0.809	0.746	0.711	0.653	0.601	0.561	0.514	0.451	0.428			
1995	0.979	0.898	0.834	0.762	0.702	0.668	0.626	0.600	0.549	0.519	0.494				
1996	0.972	0.929	0.858	0.787	0.720	0.692	0.607	0.521	0.474	0.455					
1997	0.972	0.888	0.844	0.777	0.704	0.654	0.631	0.598	0.564						
1998	0.989	0.956	0.901	0.867	0.818	0.751	0.652	0.580							
1999	0.982	0.917	0.863	0.776	0.700	0.635	0.567								
2000	0.948	0.883	0.835	0.734	0.653	0.565									
2001	0.977	0.950	0.858	0.749	0.708										
2002	1.000	0.929	0.864	0.783											



<그림 3-21> 설립일 이후 기간별 생존율 비교

설립이후 기간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표 3-37>,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2000년, 2001년에 설립된 기업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IMF의 경제상황이 전라북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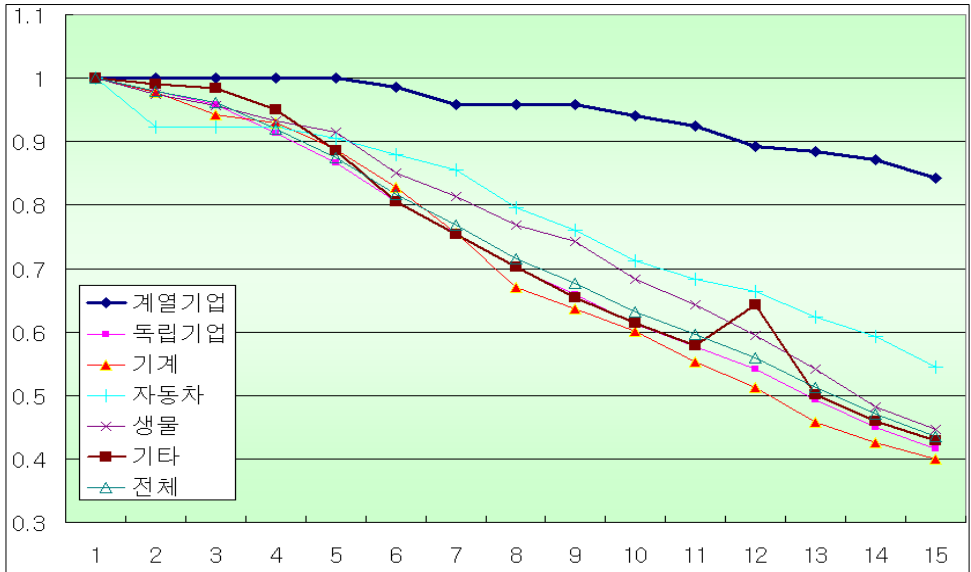
(4) 기업형태별 생존분석

또한 <표 3-38>은 전라북도내의 제조업체의 산업별 생존율을 보여준다. 전체기업의 5년 생존율은 약 87.5%이고, 10년의 생존율은 약 63.1%, 15년의 생존율은 43.6%로 나타나고 있다⁸⁾. RFT관련 기업의 수가 너무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38> 전라북도내의 진입유형 및 산업별 기업생존율 분석결과

코호트	생존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열기업	1	1	1	1	1	0.986	0.959	0.959	0.959	0.941	0.925	0.893	0.885	0.871	0.843
독립기업	1	0.979	0.959	0.914	0.866	0.806	0.756	0.701	0.659	0.613	0.577	0.541	0.493	0.450	0.416
기계	1	0.978	0.942	0.929	0.888	0.828	0.755	0.671	0.636	0.601	0.552	0.512	0.457	0.426	0.399
자동차	1	0.923	0.923	0.923	0.906	0.879	0.855	0.796	0.761	0.712	0.683	0.663	0.624	0.593	0.545
생물	1	0.974	0.956	0.932	0.915	0.851	0.814	0.768	0.743	0.683	0.643	0.595	0.541	0.482	0.447
기타	1	0.991	0.984	0.951	0.886	0.805	0.754	0.703	0.654	0.614	0.578	0.643	0.502	0.459	0.428
전체	1	0.980	0.961	0.920	0.875	0.817	0.769	0.716	0.677	0.631	0.596	0.559	0.512	0.470	0.436

8) Honjo(2000)는 일본기업의 1986~1994년 기간의 기업실패율은 약 4.8%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중 이병기(2003)는 1984~2000년간의 생존율은 5년(78.3%), 10년(63.9%), 15년(59.6%)로 10년까지는 평균적인 값을 유지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의 신생기업은 이와 비교하면 초기에는 생존율이 오히려 높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2> 전라북도의 진입산업별 생존율 그래프

<그림 3-22>는 전라북도 신생기업 중 진입산업별 생존율을 설명해 주는 그림으로 계열기업과 다른 진입산업별 생존율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는 계열기업의 생존율이 다른 독립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계열기업의 5년 생존율은 100%인데 반해 독립기업은 86.6%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계열기업의 10년 생존율은 94.1%이고 독립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이는 이병기(2003)의 1984~2000년까지의 연구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계열기업의 평균생존 72.5%와 독립기업 55.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열기업의 경우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기계, 자동차, 생물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은 기계산업 88.8%, 자동차산업 90.6%, 생물산업 91.5%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년 생존율은 기계산업 60.1%, 자동차산업 71.2%, 생물산업 68.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진입산업별 생존율은 기계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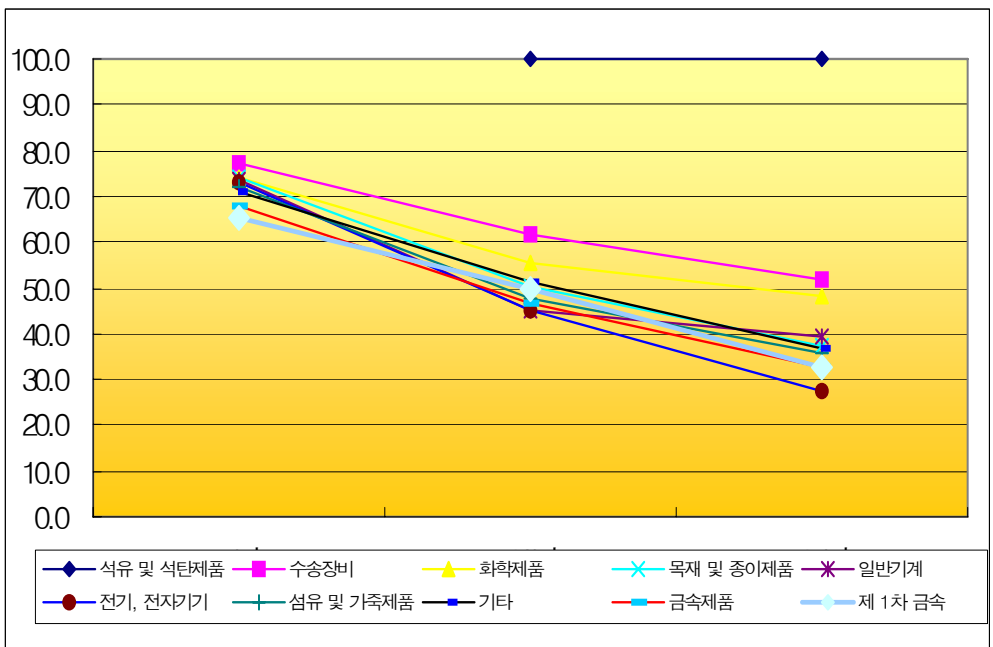
<표 3-39>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를 한국은행의 접속불변표의 대응

분류코드 및 제조업 부분	
D15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D16 담배 제조업	기타
D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섬유 및 가죽제품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D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D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석유 및 석탄제품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D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D27 제 1차 금속산업	제 1차 금속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기계
D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전기, 전자기기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D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D33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수송장비
D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D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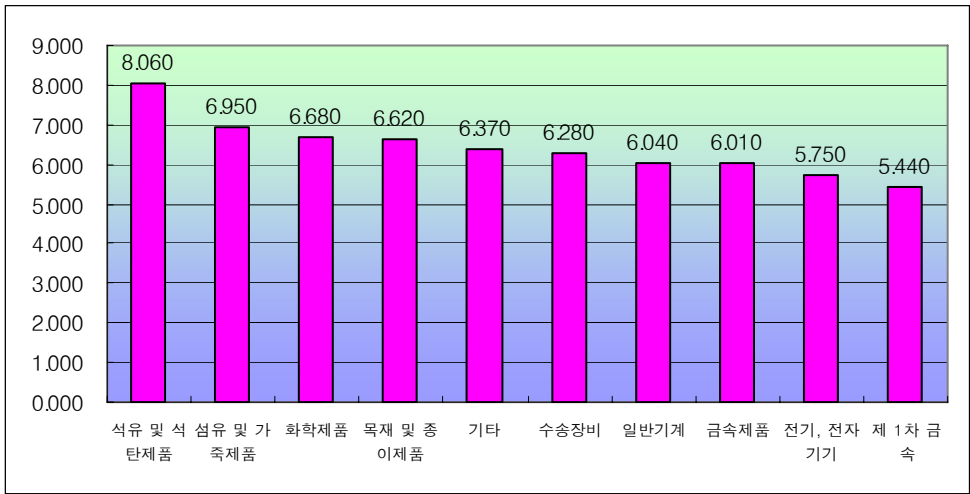
<표 3-39>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산업분류표의 제조업부분(D17~D37)을 한국은행의 분류도구인 접속불변표에 맞추어서 10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표 3-39>의 분류를 사용하여 <표 3-40>에서는 전라북도 신생기업의 산업별 생존율을 보였다. 전라북도내 산업별 기업생존율은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은 수송장비 77.0%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74.0%, 목재 및 종이제품은 73.9%로 나타난 반면 제 1차 금속산업은 65.4%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10년 생존율은 수송장비가 61.6%, 화학제품 55.2%, 기타가 51.4%를 보인반면 제 1차 금속산업은 49.7%의 생존율을 보임으로써 10년 생존율 또한 타 산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23>참조).

<표 3-40> 전라북도내의 산업별 기업생존율 분석결과

산 업	5년	10년	15년	평균사업기간(년)
섬유 및 가죽제품	0.719	0.476	0.358	6.95
목재 및 종이제품	0.739	0.504	0.371	6.62
석유 및 석탄제품	-	1	1	8.06
화학제품	0.740	0.552	0.483	6.68
제 1차 금속	0.654	0.497	0.326	5.44
금속제품	0.677	0.464	0.325	6.01
일반기계	0.735	0.449	0.395	6.04
전기, 전자기기	0.728	0.449	0.274	5.75
수송장비	0.770	0.616	0.517	6.28
기타	0.710	0.514	0.366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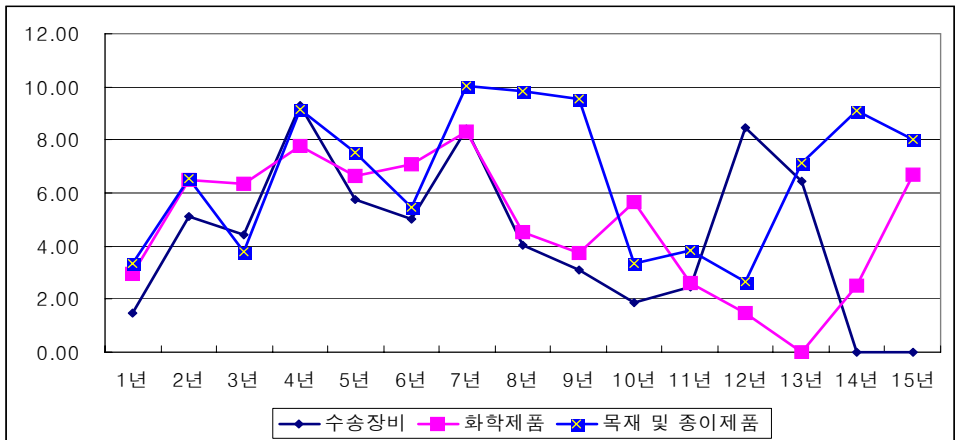


<그림 3-23> 해당업종의 생존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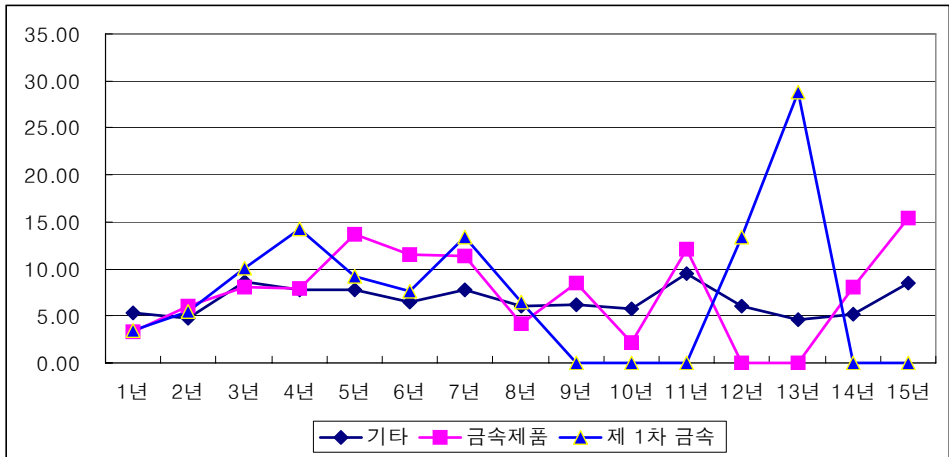


<그림 3-24> 각 항목별 평균사업기간

평균사업기간이 가장 긴 사업은 석유 및 석탄제품으로 8.06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이 6.96년, 화학제품이 6.68년을 차지한 반면 제 1차 금속은 5.44년으로 가장 짧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기, 전자기기의 산업이 5.75년으로 생존기간이 짧게 나타났다(<그림 3-24>참조).



<그림 3-25> 생존율 상위 3개업종의 위험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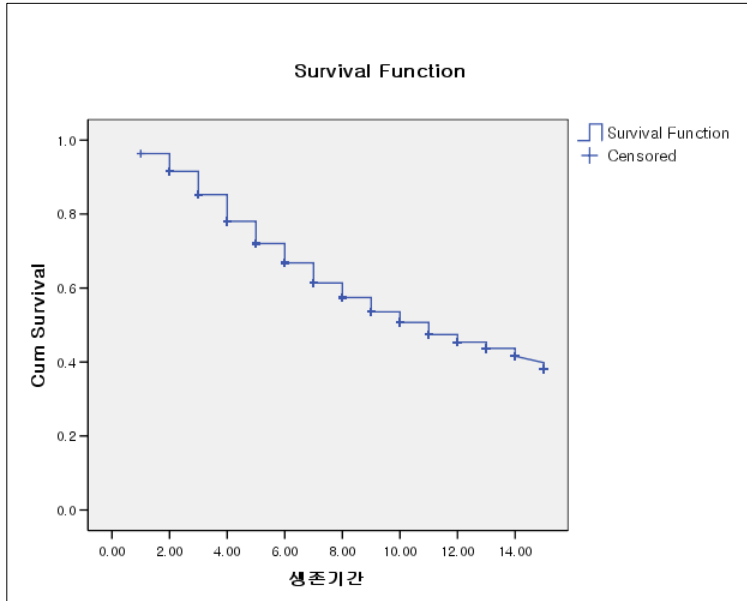
<그림 3-26> 생존율 하위 3개업종의 위험율 비교

생존율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의 위험율을 비교하면 <그림 3-25>에서 보는바와 같이 목재 및 종이제품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7년, 8년, 9년에 위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화학제품의 경우 위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존율이 낮은 3개 업종을 비교해본 결과 제 1차 금속의 경우에는 12년을 기점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3년에는 위험률이 30%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그림 3-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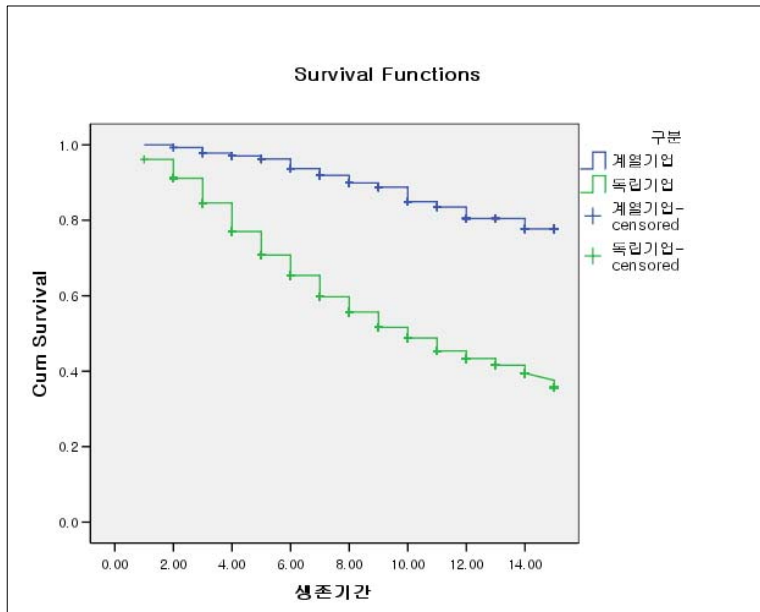
(5) 전북기업의 위험함수 추이

한편으로 어떤 기업은 기존의 기업에 의해 폐업되기도 하고 또 다른 기업은 독립기업으로 창업되기도 한다. <그림 3-27>은 독립기업과 계열기업을 합친 전체의 위험함수 추이(transition of hazard function)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전라북도 내의 제조업체의 생존율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15년 이후에는 약 41%의 기업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병기(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1984~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생존율 60%보다 낮은 것으로 전라북도 제조기업의 열악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생기업들은 10년까지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

고 10년 이후에 그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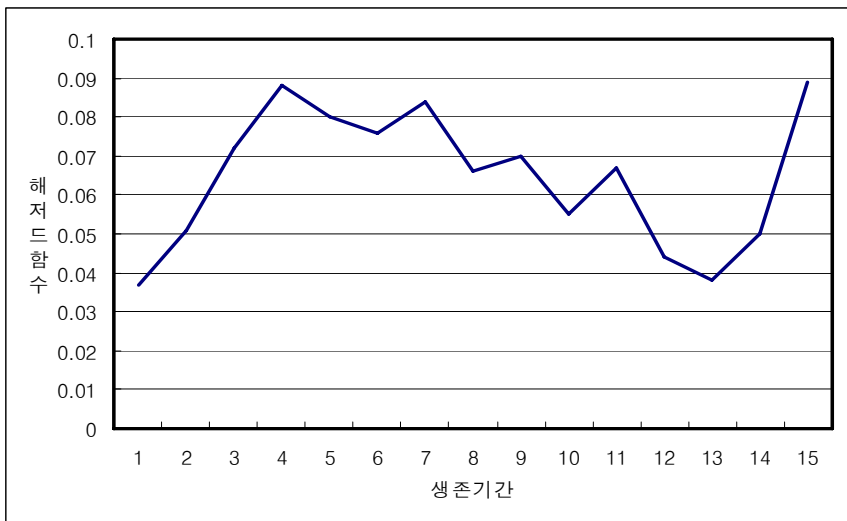
<그림 3-27> Kaplan-Meier 생존함수



<그림 3-28>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Kaplan-Meier 생존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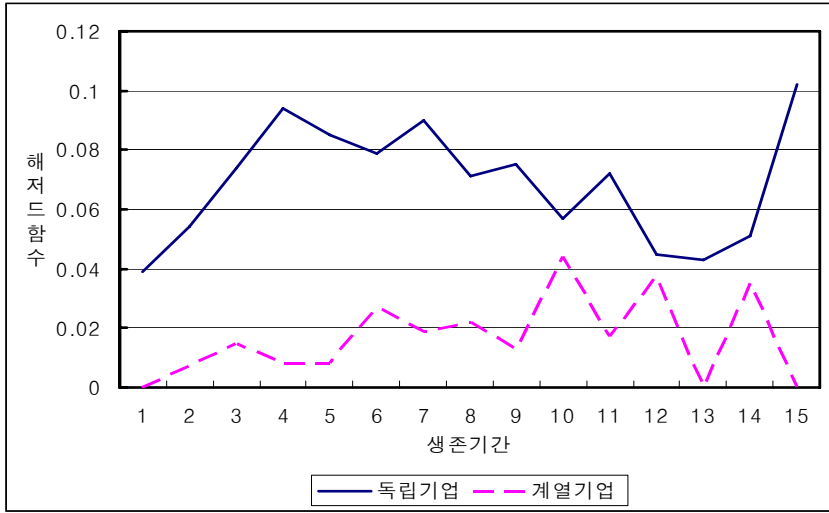
<그림 3-28>은 Kaplan-Meier의 생존곡선을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본 것으로 생존곡선을 둘로 나누어 본 결과 계열기업의 생존율은 84.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독립기업의 생존율은 41.6%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생존율의 격차는 크게 차이를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독립기업의 8년까지의 도태율이 급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 반면 계열기업은 분석기간 중 5년 이후 도태율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의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그림 3-29>에서 보는바와 같이 4년, 7년, 9년, 11년을 정점으로 양의 생존기간에서 음의 생존기간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3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새롭게 진입한 신생기업의 지속적으로 생존율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림 3-29> 전체기업의 위험함수

<그림 3-30>은 독립기업과 계열기업의 위험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생존곡선을 둘로 나누어 본 결과, 계열기업의 생존율이 독립기업의 생존율보다 현저하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업의 해저드함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10년 후의 위험함수는 극도로 불안정하여 계열기업에 비해 사업의 안정성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0>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위험함수

2) 기업생존 결정요인 실증분석

이절에서는 전라북도 제조업의 생존요인을 기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설명변수가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 위험모델(Cox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콕스위험모델의 추정에는 두 가지 범주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기업수준에서 측정하는데 기업수준의 변수는 창업규모, 현재기업 규모 등 기업규모 측정치뿐만 아니라 진입기업의 유형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위의 변수 중에서 창업규모를 정의하는 변수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변수는 기업의 생존기간 동안 변화하는 시간변동 변수이다. 또한 창업규모와 현재의 기업규모변수는 매출액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생존요인의 실증분석은 전체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를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한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 경우도 규모변수로는 매출액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식 $h(t|z_i(t)) = \exp(z_i(t)\beta) \cdot h(t|0)$ 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회귀 계수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경우 설명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출 위험이 크고 생존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콕스

위험모델을 이용하여 <표 3-41>에서는 기업규모를 매출액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창업규모는 음의계수이므로 창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퇴출 위험은 감소하고 생존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을 시작할 때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생존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1>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매출액 기준

설명변수	통계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0% CI	
							하한	상한
창업규모		-.251	.146	2.951	.086	.778	.585	1.036
현재규모		.136	.151	.803	.370	1.145	.851	1.540

<표 3-42>는 고용기준으로 콕스위험모델을 추정한 결과로는 창업규모의 계수는 양이다. 이는 고용수준을 높은 기업의 생존율은 감소하고 도태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진입할 경우 낮은 고용수준으로 출발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2>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고용기준

설명변수	통계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0% CI	
							하한	상한
창업규모		.548	.297	3.399	.065	1.729	.966	3.095
현재규모		-.144	.276	.271	.603	.866	.504	1.488

한편 콕스위험모델을 이용하여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체 표본기업의 생존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표 3-43>과 <표 3-4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3-43>은 기업규모를 매출액 기준으로 한 것이고 <표 3-44>는 고용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전체기업을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체의 분석결과와 일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3>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매출액 기준

설명변수	통계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0% CI	
							하한	상한
계열기업	창업규모	-.698	.377	3.423	.064	.498	.238	1.042
	현재규모	-.218	.483	.204	.651	.804	.312	2.072
독립기업	창업규모	-.173	.160	1.172	.279	.841	.615	1.150
	현재규모	.309	.174	3.150	.076	1.362	.968	1.916

<표 3-44> 계열기업과 독립기업의 콕스위험모델 추정결과 : 고용기준

설명변수	통계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0% CI	
							하한	상한
계열기업	창업규모	-.343	.916	.141	.708	.709	.118	4.272
	현재규모	-.225	.760	.088	.767	.799	.180	3.539
독립기업	창업규모	.709	.330	4.626	.031	2.033	1.065	3.880
	현재규모	-.017	.316	.003	.958	.983	.529	1.828

계열기업은 매출액 기준과 고용기준 결과에서 창업규모와 현재규모가 클수록 기업퇴출의 위험은 감소하고 생존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기업의 경우 전체의 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출액 기준에서는 창업당시 규모는 클수록 현재규모는 작을수록 퇴출 위험은 감소하고 고용기준에서는 창업규모는 작을수록 확연하게 퇴출위험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45>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업종별 장수기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분야별 장수기업으로는 수송·장비산업에는 성룡기계공업(설립일, 1990. 1. 1), (주)호룡(설립일, 1990. 2. 1)이고, 전기·전자기기산업은 진사운드사(설립일, 1990. 4.26), 경동전기계작소(설립일, 1990.11.27)이고 일반기계산업분야로는 웅진농기계(설립일, 1990. 6.27), 현대기계(설립일, 1990.11.10)이며 금속제품산업은 동양스텐(설립일, 1990.8.1), (주)완양(설립일, 1990.10.24), 제1차금속산업은 (주)성호철관(설립일, 1992.3.2)과 태원철강(설립일, 1993.5.24)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45> 업종별 장수기업

순위	수송장비		전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금속제품		제1차금속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1	성룡기계 공업	19900101	진사운드사	19900426	웅진농기계	19900627	동양스텐	19900801	(주)성호철관	19920302
2	(주)호룡	19900201	경동전기 제작소	19901127	현대기계	19901110	(주)원양	19901024	태원철강	19930524
3	주흥산업	19910801	동아음향	19910225	한신차량(주)	19901201	호남아스콘	19910301	(주)삼일철호	19931005
4	(주)한호	19911011	(주)광전자 아이엔티	19900307	일산정공	19910303	대호금속	19900120	대성철재	19910716
5	효정물산 (주)	19911126	태림전자(주)	19921001	(유)한독엘리 베이터	19910420	미스타	19920110	(주)금화기공	19950222
6	(유)유성운수	19920220	태강전기	19920416	금광산업	19910701	연미종합주방	19920115	(주)한성	19950501
7	태령개발(주)	19920410	라인전자 시스템	19930104	(유)호일엔지 니어링	19910801	(유)통일건설	19920706	제일정밀 공업사	19940101
8	(주)대일 정공	19920715	(유)미래정보	19930901	세종철타 산업	19910810	대한셔터 지바라	19921113	두레기계금속	19950626
9	도연테크놀	19930110	삼원실업	19931101	한성엔지니 어링	19911201	부성공업사	19930320	(유)대창상사	19960212
10	한목차체(주)	19931001	(유)군장기전	19931104	(유)신호	19920106	민태아엔지	19930601	진영금속	19960520
순위	화학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기타	
	1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기업명	설립일
1	청동화학 공업(주)	19900701	(주)대림	19980423	명성싱크	19900119	전일편직(주)	19900201	진식품	19900101
2	(주)대마	1990131			창공공예사	19900505	윤일실업	19900101	우금석재	19900101
3	진웅화학	19900716			송원종합목재	19900801	알파패션	19900515	미성기업사	19900301
4	옥산기업	19900801			원창목재	19900101	조영산업(주)	19900621	금성스티카 인쇄	19900317
5	(주)프로텍 스코리아	19901027			항림목공예	19900901	덕수실업	19900901	한국다보	19900407
6	주현화학	19901001			대동제재소	19910420	해피상사	19901015	성진석재	19900410
7	현대공업사	19901008			(유)남양한지	19920201	선전자수	19901028	(유)현대산업	19900420
8	(주)아해	19910101			남원목림목 기공예사	19920217	(주)그린피스	19901101	(주)보원산 업	19900424
9	금성화학	19910415			남원이조 목기공예	19920305	체우실업	19901120	함열주조장	19900501
10	대영종합 가스(주)	19910501			대창공업사	19920401	중앙직물	19901201	전일 콘크리트	19900510

제 4 장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강화

- 제 1 절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기본방향
- 제 2 절 제조기업 구조의 분야별 역량 강화방안

제 4 장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제 1절 제조기업 구조의 혁신역량 기본방향

1. 전라북도내 지역균형 발전차원의 지원체계 운영

전라북도지역의 산업집적지 분석결과 산업집적지간의 지리적 인접성 및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앞선 권역은 동일 및 유사업종의 권역적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각 권역별로 발전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더욱 악화되는 이른바 ‘부의 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하여 전라북도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더욱 유망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론과 지원책이 필요하고 낙후된 집적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유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독립기업은 계열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지원이나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생적인 혁신노력과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조기업의 지원체계는 한 방향만을 고려하지 않는 전면적인 지원체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측면과 아울러 제조업체 자생하기 위한 자구책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원이 경제적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의 경영전반에 걸친 운영지원은 물론 일관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과 신규 창업한 업체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위주로 창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로서의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뿐만 아니라 신규창업한 제조기업의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기관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제조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양하고 보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권역의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연계

전라북도 권역별 특화된 산업 중 유망지역으로는 지원할 경우 지원시책의 목적이나 유용성에 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신생 또는 이전제조업체의 합목적성에 부합한 정책을 입안하여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 존재한다. 정책입안주체는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과정과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경제적, 정책적 과정에서 수혜 대상제조업체와 지역적 특색이라는 측면에서 중복 또는 정책들이 별개로 운영된다는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내 지원지역, 지원대상에 대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 등의 불합리성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정책입안 주체와 수혜대상제조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재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원성과의 만족을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가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까지 지원된 제조업체의 지원정책에서 일부사업의 경우 명칭만 다르고 비슷한 항목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정책지원이 시급한 창업 및 이전 제조기업의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위한 엄밀한 검증과 정교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원에 필요한 수준 및 수요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분석하고 모든 사업의 명시화를 꾀한다.

3. 지원인프라와 연계시스템 구축

한 지역을 경쟁력을 측정하는 단위 중 하나가 산업경쟁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경쟁력은 제조업체 단독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조기업의 토탈경영(total management)을 위한 지원정책, 산업의 인프라구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정책의 경쟁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근의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체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제조 후 과정이라 하겠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기술이나 제품의 판로개척, 해외시장 개척, 거래위험 등 중·소단위의 제조기업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한 제조기업의 현장기술지도,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의 마켓플레이스(on-line/off-line market place)개설, 전문가 풀, 기능별 지원기관의 정책기여 등을 통한 서비스역량을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의 지원체계의 확충은 정책입안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조기업의 자생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단위의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질의 정책서비스 공급과 지원한 재원에 대한 집행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지원기관과 수혜제조기업의 만족을 꾀할 수 있다.

4. 시·도와 창업 및 이전기업의 지원 주체간 역할분담체계 확립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은 신규일자리창출과 매출액 증대, 유사업종의 기업유치의 용이성 등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이고 협소한 지역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 뿐만 아니라 지원주체들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도 한 원인이다.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제는 특정분야에 유연성을 키우고 경쟁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기업위주의 특성화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기존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 및 이전기업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의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물론이고 각 지원주체간의 역할분담,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기능별·분야별·지역별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추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제 2 절 제조기업 구조의 분야별 역량 강화 방안

1. 제조기업의 창업혁신 역량 강화

1) 기본전략

(1) 창업정책의 실효성 역량 강화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그 동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함과 아울러, 최근에는 고용창출, 매출증대, 지적재산권 획득, 산·학·연 연계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발전패턴으로 볼 때,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기업의 재도약과 21세기형 신산업 창출 및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간 중복·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중·소기업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향후 창업보육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셋째, 창업보육정책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업 활기의 지속과 질적 내실화 및 고도화가 크게 요구됨에 따라 창업지원시책도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시책 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방향도 단순히 창업율의 제고가 아니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의 질적 저변 확충과 함께 예비창업자 내지는 창업자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돕는 양질의 제도적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정책의 무게 중심도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창업편의성 제고, 하드웨어적 보육사업 중심에서 기업가 양성 및 교육, 정보·상담·자문 서비스의 확충, 소프트웨어적 보육사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자금지원, 창업 편의성 제고 등 여타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프라 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는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선별적 지원시책은 의지와 노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과 연계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보육정책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물리적 시설 자금 및 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전라북도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감안 한다면, 이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TBI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청 및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자금’,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자금’ 등과 같은 기술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자금으로 확보·지원하는 방안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우선 지원, 협동화사업 등을 통한 입지 지원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세부 추진전략

(1) POST-BI 업체의 지원 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각종 보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보육센터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69.5%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생존율(보육센터졸업 후 5년 이내) 80%와 비교하여 10%포인트 정도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향후 창업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보육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POST-BI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POST-BI 제도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육센터가 1~2년 정도 추가적인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같은 추가적인 보육기능 수행은 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센터 졸업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전라북도 소재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경우, 보육센터졸업과 함께 기업환경이 보다 좋은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기능이 퇴색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POST-BI 제도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보육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새로운 유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POST-BI 제도 도입에 의한 추가적인 보육기능 수행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외부 의존도를 높이고,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OST-BI를 담당하는 보육센터는 전라북도 전체 보육센터의 일정 수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Post-BI 업체중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 입주
- Post-BI 업체의 선도기업 육성지원

(2) TBI(신기술창업보육)지원 센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의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TBI 사업은 그 동안 유망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 기업에 1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TBI 사업의 개편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동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TBI 자금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용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자금’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업체 당 지원 한도도 하향 조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업 경력이 일천(대부분 창업 후 3년 이하)하여 과거 매출실적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기술, 정보 등을 공유
-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TBI사업에서 지원
- TBI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장비활용, 기술정보제공, 교육 등은 지역의 소재 대학이 신기술 창업지원

(3) 창업보육센터의 연구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

전라북도의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추가적인 확충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전환(연구형→생산형)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확장·건립 지원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실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확장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보육실수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창업보육센터 수의 확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의 입실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전라북도 POST-BI업체 유치 위한 신기술 집적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 집적의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보육센터가 지역산업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입주 업종의 특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센터가 특정 업종으로 특성화·전문화될 경우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기업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창업기업 지원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한 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입주 업종의 전문화 유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라북도 POST-BI업체 유치 위한 신기술 집적단지 조성

(5) 각 시·군별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현재 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강좌 교육사업, 변리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 풀의 활용,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광고 및 홍보사업 등을 개별 보육센터별로 추진함으로써 범위의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동일 지역 소재 창업보육센터들이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연합체 결성)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애로사항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예: 법률·특허 및 세무 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협회 결성 및 보육센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문가 풀 및 지원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역의 기술혁신 주체인 대학, TIC, TP등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시설, 기자재 및 인력의 공동 활용

(6) 전라북도 투자펀드 설치·운영

전라북도 내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투자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불리한 형편이다. 현재, 수도권의 테헤란 밸리에 집중된 창업 투자가 전라북도지역의 벤처기업을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찾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벤처투자자금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자금의 80%가 테헤란밸리 및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 전문성 없이 6개월가량의 투자 후 코스닥 등록으로 돈을 버는 머니게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지방 벤처업체의 잠재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 벤처집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뿌리내린 지역밀착형 벤처금융 육성이 시급하고 일차적으로 벤처기업과 투 용자기관간의 상호연결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벤처금융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엔젤 클럽 형성 지원, 공공의 초기지원 후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벤처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 투자사 입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와 지역벤처기업 공동으로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벤처캐피탈은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성장 지원, 투자 후 기업가치를 높여 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지역벤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마케팅 등 경영지원까지 총괄적인 지원을 수행함이 필요하다.

-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확대
- 벤처캐피탈 유동성 증대를 위한 제2금융권 유통시장 조성
- 시장기능 중심의 재간접 투자펀드(Fund of Funds) 설치 · 운영
- 펀드매니저 중심의 선진 벤처캐피탈 제도 시범 운영
- 벤처캐피탈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

(7) 벤처기업과 전략산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내 벤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체계화한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작정 단지만 만들어서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존성격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지연 및 전략산업과 유기적 연관을 고려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과 지역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지역에 뿌리내린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 제고: 공동연구그룹 조직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복수의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상업화, 기술혁신, 제품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특화기술의 벤처기업화 지원: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기술의 상품개발, 디자인개발, 수요 판로개척 등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혁신 및 이전센터 건립: 전문화된 지식 정보제공기관 설립, 벤처집적지의 지식 정보창출 및 확산의 구심역할을 수행되어야 한다.

- 벤처기업의 아이템의 조속한 사업화 촉진
- 우수 벤처기업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내로의 유치 촉진
- 지역 내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가속화
-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

2. 이전 제조기업의 혁신

1) 기본전략

(1) 이전 제조 기업 관리 시스템 혁신

수도권 및 외자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이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니즈(needs)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자신의 입주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 욕구에 부응하는 신축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관련 조직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유치 우대 조례 제정, 매칭 펀드식의 기업유치기금의 조성, 산업입지 관련 분양가 인하 및 저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지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며 투자유치 전문가 풀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문회사 설치 운영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팩키지 형 윈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투자유치관련 조직간 시스템 경쟁력 강화 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유치 대상 Target기업 선정 및 기획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지역 유통업과 유치 대상 유통업과의 보완적 연계기능 강화, 기업유치 관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 정보제공, 기업유치관련 협상능력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혁신체제의 구축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생산체계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체계의 3개 하부구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3개의 하위 시스템을 연계 조정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보다 지역이 경쟁의 단위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혁신은 공간적으로 집적된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에 의해 창출(예 : 미국 실리콘밸리)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인력, 입지, 정보 등의 산업육성기반이 적절히 정비·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혁신관련 자원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 운영체계 정비, 관련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투자 유치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팽창을 위한 접근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른 신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입맛에 맞는 투자여건은 해당지역이 산업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만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산업도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집중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치된다면 타 지역의 국내기업도 해당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자동차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주-익산-군산을 있고 익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자동차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계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이 분야의 집중적인 연계 대안이 필요하다.

2) 세부 추진전략

(1)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개발

현재까지 지역 개발과 기업 관계는 협력 보다는 종속 또는 견제 형태를 견지해 왔다. 지역개발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과 철저히 영역을 구분하고 갑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지역이 공공성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토지이용, 기업여건 개선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도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지역 및 기업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지가 제약을 받거나 이와는 반대로 지나친 이윤 추구 목적으로 특정지역만을 고집하는 기업도 발생했다.

이렇듯 지역과 기업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신뢰부족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불신감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지방 정부를 단순한 인허가권 자로만 인식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기업은 특혜 대상 내지는 지나친 이익추구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과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기업 유치 경쟁 보다는 지역과 기업간 역할 분담 등으로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기업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돕는 차원에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 연구소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산·학·관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방안이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프로그램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면 이 또한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지역행사에 기업참여 등 소프트 한 측면에서의 지역과 기업의 협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 투자 의향 기업의 리스트 관리
- 핵심 타깃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대상 발굴, 상담내용, 요구사항 등)

(2) 산·학·연 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

투자 유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partnership)을 도출하여 모든 구성원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지역주민, 상공인, 노동계, 지방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의 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발전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전북지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은 각자 해당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행하여 유치기업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와 엘라배마 예처럼 지역 대학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든지 또는 대학이 보유한 지적자산을 산학협력을 통해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부기관·대학·금융기관·기업 등 전라북도 기업유치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기 투자한 기업인의 한마디가 신규투자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본국에 있는 다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은 기 진출한 자국기업 경영자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유치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를 유인하거나 관련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실행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년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 1 절 결론
- 제 2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절 결 론

최근 제조업 구조분석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대응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 진행에 따라 지역이 새로운 경쟁단위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의 연관기업간 경쟁, 협력, 유기적 연계체계가 지역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전체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업활동의 생존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제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조업 구분 방식과 지역구분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구조, 기업구조, 공간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별 제조업의 실태와 구조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추계하고 지역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의 지역별 차이 속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구조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에서는 제조업 사업체 단위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적경제의 다양한 측면과 영향요인을 기업의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의 제조업 구조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제조기업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전국대비 3.14%정도를 차지하였고 1인당 GRDP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12.0%, 2차산업이 27.2%, 3차 산업이 60.8%로 1차 산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고 2차산업인 제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둘째, 전라북도의 지역별 산업현황 및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를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제조업의 생산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북권이 가장 높았고 북부권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동부권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북부권, 서남권, 서북권, 동부권 순서였고 종사자간 부가가치는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의 순서로 나타나서 동부권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사업체당 생산액의 추이에서도 북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부권 순서였으며 북부권과 서북권을 제외하고는 그 생산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의 수는 총 706개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자동차산업이 25.9%, 생물산업이 54.5%를 차지하였으며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45.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1~2004년까지 전라북도에 이전한 기업의 수는 총 76개 업체에 3,185명의 종사자로 나타났고 이들 업체 중 영세기업은 22.4%, 50인 이하의 소기업은 50.0%를 차지하여 중기업, 대기업의 이전기업유치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전라북도의 산업집적지 현황은 전국대비로 특화계수와 생산액, 종사자 수를 기준에 의해 분석하게 되었는데 14개 시군에 6개 산업분류 중 22개 지역이 집적지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산업집적지에서 성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화학제품의 정읍시와 완주군, 수송장비산업에서 군산시와 김제군, 일반기계산업에서 정읍시로 조사되었다. 산업집적지의 발전단계 및 수준은 전라북도의 유망집적지로는 군산의 제1차 금속분야, 수송장비의 군산시, 수송장비의 완주군이 분류되었으며 쇠퇴지역도 전주의 화학제품, 익산의 금속제품 및 일반기계, 정읍의 수송장비, 전기전자산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2004년 시·군별 제조업체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익산시(25%)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주시(16%), 군산시(14%), 김제시(11%)의 순서였으며 나머지 시·군의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2004년의 제조업체의 수를 비교하여 사업체 수가 증가된 곳은 김제시가 가장 높았고 완주군, 정읍시, 군산시 등이다. 이에 따른 제

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간구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95년도에 부가가치가 10%이상인 지역은 소위 3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집중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전주시가 제외되고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로 나타났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1995년에는 0~5%내외였던 것이 2004년에는 5~10%지역으로 공간구조가 변경되었다.

여섯째, 전라북도의 1991~2005년까지의 신생기업의 생존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기업의 1년후 생존율 99.3%, 5년후 생존율 82.1%, 10년후 생존율 57.5%, 15년후 생존율 40.7%을 보였다. 위험율은 4년째 6.3%, 5년째 6.7%, 9년째 6.4%를 보여 창업후 5년과 9년이 가장 위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1999년, 2000년, 2001년에 설립된 기업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입 유형별로는 계열기업이 독립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생존율이 높았으며 이는 모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적, 경영적 지원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별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및 수송장비분야로 5년후 생존율 0.77, 10년후 생존율 0.616, 15년후 생존율 0.517이며 평균 사업기간은 6.28년이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산업분야는 전기, 전자기기분야와 제1차금속, 금속제품이었다.

또한 기업생존 결정요인분석은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창업규모를 크게 시작할수록 기업의 퇴출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고용기준으로 살펴보면 낮은 고용수준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진입유형별 구분에서는 계열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퇴출위험은 감소하고 생존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독립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당시 창업규모가 클수록 현재규모는 작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고용기준에서는 창업당시 규모가 작을수록 퇴출위험이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2절 정책적 제언

개방화와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제조기업의 성장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 및 이전기업의 관리를 통해 전라북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용, 생산, 수출,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에 창업 및 이전기업들의 생산성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조기업 구조분석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활동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기업환경의 변화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모태로 하는 질적 제조기업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관리 시스템도 이에 부합하는 질적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제조기업 중심 산업구조란 전문성과 유연성, 기민성 및 창의성을 지닌 질적 기업이 부가가치·생산·고용 등의 면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구조를 뜻한다.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쟁우위를 가진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기존영역에서 다각화된 대기업보다는 획기적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모험적 성격을 지닌 전문제조기업들이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있어 경쟁우위를 지닌다. 또한 기업조직 측면에서 보면 소형화와 관련한 다운사이징(Down sizing)으로 제조기업 조직이 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과 이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제조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규모 상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장의 접근, 국제적 범위의 정보수집 및 홍보효과 등이 제조기업의 전통적인 영역 한계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기업의 역할 및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기업의 육성은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고양, 고용기회의 창출, 그리고 지식과 도전정신을 중시하는 사회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은 물론 중산층 육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입장에서는 저 기술, 저 생산성, 저 부가가치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 동안의 낙후한 전북지역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계기로 제조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1. 산업집적지와 연계한 제조기업 관리의 효율화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과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업집적지의 확인 및 유형화에서는 정책적 유효성이 큰 산업구분 방식을 적용하고 전라북도내의 시·군 단위로 분석을 세분화함으로써 산업집적의 구조에 대한 분석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즉, 산업집적지 분석이 최근의 산업클러스터 논의와 직접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집적지의 확인에 있어서 산업의 지리적 집중도와 특화도에 더하여 기업간 연계, 연관산업간 연계, 산업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집적지 분석에 있어서 제조기업들의 현재의 발전단계를 파악하여 단계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다.

1단계: 미래 지향적 핵심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의 판단 및 분류: 제조기업의 기업환경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분류가 필요하다.

2단계: 성장업종, 비교우위업종의 전략적 선택 및 육성: 성장산업이면서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군이 제조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단계: 쇠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 국내의 경쟁력 상실 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제조기업간 유효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

2. 제조기업의 생존율 분석을 통한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제조기업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창업 및 이전기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산 및 폐업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제조기업 투자 회수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요구에 대응이 미흡하고, 경제상황 악화, 경쟁국으로의 투자전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정확한 철수 원인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 창업 및 이전한 전라북도 기업인의 한마디가 신규투자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주변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를 고려할 때 기 진출한 기업 경영자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투자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투자사후 관리서비스 면에서 투자 기업의 고충처리 현황을 보면, 노동, 조세, 법률, 투자절차 등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존 투자 기업은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유치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를 유인하거나 관련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재 투자공제는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 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까지 공제해 주고 있고, 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실행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창업 및 이전 제조기업 전담관리 시스템 도입

창업 및 이전기업 관리를 위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One-stop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One-stop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절차와 단계를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이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공장설립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부서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지원심의협의회의 인증절차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지원검토 단계에서부터 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고,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여러 부서나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심리적 피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입지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에게 지나친 규제나 요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이전기업이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전담인력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창업 및 이전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제조기업 지원 역할 분담체계 정립

기업의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협조적인 역할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원기업을 선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의 유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조기업의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정립이 필수적이다.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증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제조기업 정책의 목표와 영역도 이에 상응하여 확장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정책이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모방·흡수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자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과거 대기업 부분의 보완적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던 중소기업 부분은 대기업 부분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고 복잡한 의제를 대상으로 전개 될 수 밖에 없으며, 기능별·분야별 여러 지원기관이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국내자료

- 곽승영(1997), 『한국 제조업부문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 김경진·안강기(2001), 『200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교통개발연구원
- 김경환(1993), “수도권 환경오염과 차량증가에 따른 사회비용”,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산업과 경영』, 30(1), 199-224
- 김경환·박명호·손재영(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 김광석·박승록(1988),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변화와 그 요인의 분석』, 산업연구원
- 김광석·홍성덕(1992),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동향과 그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 김상호·김태기(1998), “무역과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국제경제연구』, 제4권 제1호, pp. 15-32
- 김영수(2002),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 김영수(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동향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종일(1995),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제 추정방법”, 『계량경제학보』, 제6권, pp.207-232
- 김헌민(2002), “광역자치단체의 집적경제와 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 : 중분류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1), 207-230
- 남재우·이회경·김동석(2000), 『기업도산예측을 위한 생존기법의 응용』, 금융학회지, 제5권 제3호, pp.29-61.
- 민경휘(1998),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구조 변화의 분석』, 산업연구원
- 박상우·김동주(2001), 『수도권집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 박양호(1986), “제조업의 지역적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 변화”, 『국토연구』, 제6권, pp. 17-28
- 박정인(2003), 신장자료에서의 생존분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훈(2004), 생존분석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 생산기간에 대한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헌수·조규영 (200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 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서승환(2001), “수도권의 중요소생산성 및 그 결정요인”, 『응용경제』, 3(1), 133-158.
- 손철(1993), “지역제조업의 중요소생산성변화와 성장격차요인 분석-1982~1990 기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3호, pp. 129-141
- 송혜양·정갑도·이원철(2001), 생존분석, 청문각
- 이근희·김용대(2000), 『새로운 도산예측모형에 대한 고찰』, 서강경영논총, 제11집 1호, pp.63-88.
- 이근희(1997), 『지역별 중요소생산성의 변화와 결정요인』, 생산성본부
- 이변송(2000), “수도권 시·군·구의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48(4), 291-322.
- 이변송·장수명(2001), “제조업체의 도시별 생산성 차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49(3), 165-188.
- 이변송·홍성호(2001), “시·군·구별 제조업 생산성 성장 요인과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7(1), 125-145.
- 이병기(1998),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동아시아 성장모델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연구원
- 이병기(2003), 한국 신생기업의 생존요인:이론과 실증,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호(1998), 『중·소전자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4(2), pp.93-112.
- 이상호·김홍규(1996), “도시별 집적경제효과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1), 55-70.
- 이영준·윤기향(1998),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역생산성에 관한 연구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이원흠·이한득·박상수(2000), 『현금흐름형 도산예측모델과 옵션모델형 도산예상확률의 실증연구』, 증권학회지, 제27권, pp.35-70.
- 이인권 외1(2004), 한국기업의 진입, 최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이인권(2001), 『한국기업의 나이별 성장, 생존 및 성장가변도』, 한국경제연구, Vol.7.
- 조기현(2002), “산업별 집적경제와 외부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해명·민경휘·정준호(2002), 『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2002), 『시·군·구 100대 지표』

통계청, 홈 페이지, KOSIS.

허명희(1992), 비교연구를 위한 통계적 방법론, 자유아카데미

홍성덕·김정호(1996), 『제조업 중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1967~93』, 한국개발
연구원

홍성웅(1986), “공간적 집적과 형평”, 『국토연구』, 제5권, 국토개발연구원.

□ 외국자료

Arie de Geus, 손태원譯(2002), 살아있는 기업 The Living Company, 세종서적.

Audretsch, D.B.(1995), “Innovation, Growth and Surv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 pp.441-457.

Audretsch, Houweling and Thurik(1997), “New Firm Survival : Industry versus
Firm Effects,” mimeo.

Baldwin, J. and P. Gorecki(1990), “Firm Entry and Exit in the Canadian
Manufacturing Sector, 1970-82,”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4(2),
pp.300-323.

Boeri, T. and U. Cramer(1993), “Employment Growth, Incumbents and Entrants :
Evidence from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10, No.4, pp.545-565.

Brüderl, J. and T. Mahmood(1996), Small Business Mortality in Germany : A
Comparison between Regions and Sectors, Discussion Paper FS IV pp.
96-20

Chen, M.Y.(2002), “Survival Duration of Plants : Evidence from the US
Petroleum Refining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 pp.517-555.

Dunne T., M.J. Roberts, and L. Samuelson(1998),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19,
pp.495-515.

Gort, M. and S. Klepper(1982), “Time Paths in the Diffusion of Product
Innovations,” Economic Journal 92, pp.630-653.

- Han, Chin-Hee(2000),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Study 2000-04
- Mata, J. and P. Portugal(1994), "Life Duration of New Firm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XLII, No.3, pp.227-245.
- Reynolds, S.(1988), "Plant Closing and Exit Behaviour in Declining Industries," *Economica* 55, pp.493-503.

전발연 2006-R-07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구조분석 연구

발행인 | 한 영 주

발행일 | 2006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ISBN : 978-89-92471-06-0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